

#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 :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최혜진  
안수인·김주리·곽윤경·최선영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안수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주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5-05

###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084-7 [9351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05>

## 발|간|사

급속한 초저출산·고령화가 20여 년간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삶의 질 중심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가 초래할 노동력 부족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신(新)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방안」은 체계적인 이민 관리와 사회통합 지원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구전략의 한 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인구를 유입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정착과 통합을 지원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들이 통합 과정의 첫 관문인 보육과 조기교육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이로써 부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진은 2018~2022년 행정자료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 ‘인구다양성 지수(Population Diversity Index)’를 산출하고, 다문화 가구 분포·지자체 보육료 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여부 등 지역 특성을 결합하여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로 이민의 행정 및 정책 측면에 집중되었던 연구관점을 넘어 이민정책과 보육정책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학령기 아동·노인 복지, 체류 자격별 서비스 접근성 등으로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

이 연구는 본원의 최혜진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수행하였으며, 안수인 전문연구원, 곽윤경 부연구위원, 최선영 부연구위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의 김주리 연구교수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서울대학교의 정기선 교수와 본원의 이소영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에 응해준 관련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5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요 약 .....	1
<b>제1장 서론 .....</b>	<b>3</b>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5
제2절 연구 내용과 주요 용어 정리 .....	10
<b>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b>	<b>19</b>
제1절 이민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	21
제2절 이주민 밀집 지역 관련 선행연구 .....	25
제3절 이주배경 영유아 대상 보육 지원정책 현황 .....	30
제4절 이주배경 아동 보육서비스 접근성 관련 선행연구 .....	35
제5절 본 연구의 차별성 .....	40
<b>제3장 지역의 인구다양성 변화 .....</b>	<b>43</b>
제1절 인구다양성 지수의 산출 방법 .....	45
제2절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	51
제3절 이주배경 인구의 국적별 분포 .....	80
제4절 영유아의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	89
제5절 소결 .....	110
<b>제4장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b>	<b>113</b>
제1절 지역별 보육 수요와 이용률 변화 .....	115
제2절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	142

---

제3절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	156
<b>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b>	<b>183</b>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	185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제언 .....	190
<b>참고문헌 .....</b>	<b>197</b>
<b>부록 .....</b>	<b>211</b>
<b>Abstract .....</b>	<b>221</b>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현황과 전망	5
〈표 1-2〉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구분	17
〈표 2-1〉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련 지원 조례 현황	23
〈표 2-2〉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외국인 주민 수 및 인구 대비 비율	29
〈표 2-3〉 지자체별 외국인 보육료 지원 상세 현황	33
〈표 3-1〉 2018~2022 광역지자체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55
〈표 3-2〉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56
〈표 3-3〉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57
〈표 3-4〉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58
〈표 3-5〉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59
〈표 3-6〉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73
〈표 3-7〉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74
〈표 3-8〉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75
〈표 3-9〉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77
〈표 3-10〉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78
〈표 3-11〉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79
〈표 3-12〉 2022년 시·도별 이주배경 인구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국적별 읍면동 현황	83
〈표 3-13〉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90
〈표 3-14〉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91
〈표 3-15〉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92
〈표 4-1〉 0~5세 영유아 인구 추이	116
〈표 4-2〉 0~4세 외국인 인구 추이	116
〈표 4-3〉 0~5세 외국인 주민 추이	117
〈표 4-4〉 보육시설 변화 추이	118
〈표 4-5〉 0~5세 영유아 인구 백 명당 보육시설 수 변화(2018~2022)	120
〈표 4-6〉 0~5세 영유아 인구 백 명당 보육시설 정원 수 변화(2018~2022)	120
〈표 4-7〉 정원충족률 변화(2018~2022)	123

〈표 4-8〉 각 사분면의 연도별 변화(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 .....	127
〈표 4-9〉 4사분면에 속한 지역(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 2022) .....	128
〈표 4-10〉 각 사분면의 연도별 변화(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 .....	130
〈표 4-11〉 4사분면에 속한 지역(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 2022) .....	131
〈표 4-12〉 각 사분면의 연도별 변화(정원충족률) .....	133
〈표 4-13〉 4사분면에 속한 지역(정원충족률, 2022) .....	134
〈표 4-14〉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18~2022) .....	136
〈표 4-15〉 내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18~2022) .....	138
〈표 4-16〉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신혼부부통계, 2018~2021) .....	140
〈표 4-17〉 내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신혼부부통계, 2018~2021) .....	141
〈표 4-18〉 변수별 정의 및 자료 출처(외국인 영유아) .....	143
〈표 4-19〉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기술통계표 .....	147
〈표 4-20〉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다양성 지수1) .....	151
〈표 4-21〉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다양성 지수2) .....	152
〈표 4-22〉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 (다문화 가구 영유아 비중) .....	154
〈표 4-23〉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 (외국인 영유아 비중) .....	155
〈표 4-24〉 변수별 정의 및 자료 출처 (다문화 영유아) .....	157
〈표 4-25〉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분석 기술통계표 .....	163
〈표 4-26〉 전체 가구 로짓 분석 결과(이주배경 가구 여부) .....	169
〈표 4-27〉 전체 가구 로짓 분석 결과(모의 국적) .....	171
〈표 4-28〉 이주배경 가구 대상 로짓 분석 결과 .....	175
〈표 4-29〉 전체 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다층모형 분석 결과(인구다양성 지수) .....	178
〈표 4-30〉 이주배경 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다층모형 분석 결과 .....	179
〈표 4-31〉 다문화 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다층모형 분석 결과(국적별 비중) .....	181



〈부표 1〉 2018년, 2022년 외국인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211
〈부표 2〉 2018년, 2022년 외국인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212
〈부표 3〉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13
〈부표 4〉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213
〈부표 5〉 2018년, 2022년 서울특별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4
〈부표 6〉 2018년, 2022년 부산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4
〈부표 7〉 2018년, 2022년 대구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4
〈부표 8〉 2018년, 2022년 인천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5
〈부표 9〉 2018년, 2022년 광주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5
〈부표 10〉 2018년, 2022년 울산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5
〈부표 11〉 2018년, 2022년 대전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6
〈부표 12〉 2018년,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6
〈부표 13〉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16
〈부표 14〉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217
〈부표 15〉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17
〈부표 16〉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218
〈부표 17〉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증가 지역 목록	218
〈부표 18〉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감소 지역 목록	219

#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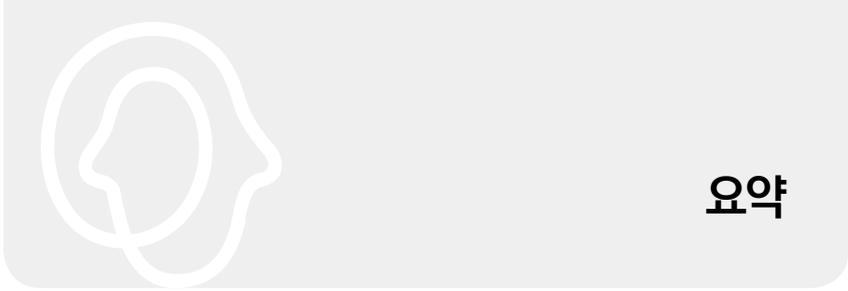
---

[그림 1-1] 연구 내용 .....	12
[그림 3-1] 외국인 인구 추이 .....	51
[그림 3-2]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	53
[그림 3-3] 외국인 기준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	54
[그림 3-4]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서울특별시(2018, 2022) .....	60
[그림 3-5]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부산광역시(2018, 2022) .....	61
[그림 3-6]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대구광역시(2018, 2022) .....	62
[그림 3-7]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인천광역시 (2018, 2022) .....	63
[그림 3-8]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광주광역시(2018, 2022) .....	64
[그림 3-9]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울산광역시 (2018, 2022) .....	65
[그림 3-10]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대전광역시(2018, 2022) .....	66
[그림 3-11]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세종특별자치시 (2018, 2022) .....	67
[그림 3-12]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증감 지역 구분(2018, 2022) .....	68
[그림 3-13]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량 상위 및 하위지역(2018, 2022) .....	70
[그림 3-14] 18세 이하 아동의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	72
[그림 3-15] 19세 이상 성인의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	76
[그림 3-16] 전국 최다 국적 분포(2022) .....	81
[그림 3-17] 서울, 경기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	84
[그림 3-18] 대구, 경북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	85
[그림 3-19]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	86
[그림 3-20] 전라권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	87
[그림 3-21] 충청권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	88
[그림 3-22]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	90
[그림 3-23]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서울특별시(2018, 2022) .....	94
[그림 3-24]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수도권(2018, 2022) .....	95
[그림 3-25]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부산광역시(2018, 2022) .....	96
[그림 3-26]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대구광역시(2018, 2022) .....	97



[그림 3-27]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광주광역시(2018, 2022) .....	98
[그림 3-28]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대전광역시(2018, 2022) .....	99
[그림 3-29]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증감 지역 구분 .....	101
[그림 3-30]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증가량 상위/하위 지역 .....	102
[그림 3-31] 외국인 영유아의 전국 최다 국적 분포(2018, 2022) .....	104
[그림 3-32] 외국인 영유아의 지역별 최다 국적 분포: 서울특별시(2018, 2022) .....	105
[그림 3-33]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수도권(2018, 2022) .....	106
[그림 3-34]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부산광역시(2018, 2022) .....	107
[그림 3-35]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대구광역시(2018, 2022) .....	108
[그림 3-36]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광주광역시(2018, 2022) .....	109
[그림 3-37]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대전광역시(2018, 2022) .....	110
[그림 4-1] 0~5세 영유아 인구 백 명당 보육시설 수 .....	119
[그림 4-2] 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정원 수 .....	121
[그림 4-3] 정원충족률 .....	122
[그림 4-4] 외국인 영유아의 비중과 보육서비스 공급률과의 관계: 4사분면 분류 .....	124
[그림 4-5] 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와 외국인 영유아 비중 간의 관계 .....	126
[그림 4-6] 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와 외국인 영유아 비중 간의 관계 .....	129
[그림 4-7] 정원충족률과 외국인 영유아 비중 간의 관계 .....	132
[그림 4-8]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보육통계) .....	135
[그림 4-9] 내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보육통계) .....	137
[그림 4-10]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신혼부부통계) .....	139
[그림 4-11] 내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신혼부부통계) .....	140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가 가진 ‘인구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여 지역 내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인구다양성 지수 및 여타의 지역 요인이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보육료 지원정책, 지역 내 다문화 지원센터 유무, 지역 내 보육서비스 접근성 같은 제도적 개입이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하여 이주배경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내용

읍면동 단위에서 이주배경 인구의 국적을 활용해 인구다양성의 지역별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영유아 인구만을 별도로 분석해 외국인 보육서비스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로 영유아 인구가 줄면서 시설 공급의 충분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 간 편차는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아동이 많은 지역의 시설 공급률이 낮거나 충원율이 저조해, 안정적인 보육 인프라 운영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내국인 영유아에 비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주배경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외국인 영유아는 약 40%인 데 반해, 내국인은 60% 수준이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는 외국인보다 높지만 내국인

## 2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군구 차원의 거시 분석과 가구 수준의 미시 자료를 활용한 추론 통계 분석을 통해 지역적 맥락과 가구 특성이 보육서비스 이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정책이나 읍면동 내 다문화센터의 유무 등 제도적 지원책이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제고에 실제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지역 내 결혼이민자 가구의 비중이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 3. 결론 및 시사점

보육료 지원정책 등의 제도적 지원은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여전히 언어·문화 장벽, 제도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국인과 이용률 격차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경제적 혹은 제도적 요인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 문화적 중개자 존재 여부, 제도 설계의 포괄성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순한 보육시설 확충이나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문화적 수용성과 정보 접근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 용어: 인구다양성,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서비스 접근성, 사회통합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주요 용어 정의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건설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농어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공동체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왔다. 농어업에서도 “외국인이 없으면 농어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KBS, 2024; MBC, 2024), 보건복지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도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지역소멸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주민을 적극 수용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중이다.

〈표 1-1〉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현황과 전망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2027	분야	전문과학기술업	제조업	보건복지서비스	도·소매업
	인원	30천 명	5천 명	4천 명	4천 명
2032	분야	보건복지서비스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업
	인원	138천 명	137천 명	118천 명	78천 명

출처: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24, p.11.를 수정 인용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7665407&tblKey=GMN>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허가제, 재외동포 비자(F-4, H-2) 및 지역 특화비자(F-2) 등 다양한 비자 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의 장·단기 체류와 정착을 장려하고 있다. 가족 동반 비자의 확대 및 결혼이민자의 꾸준한 증가로 결혼이민자 및 이주배경 자녀에 대한 정착 지원과 양육·교육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체류 외국인 수는 2024년 12월 말에는 265만 명이 넘었고, 외국국적동포의 비중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32.6%를 차지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귀화자, 이민자 2세, 재외동포 등 다양한 형태의 정착민을 포함한 이주배경 인구는 2042년에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4).

최근에는 이주배경 인구가 단순히 경제활동을 위해 한국 사회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닌 혼인, 출산 같은 중요한 생애주기를 경험하거나 가족을 동반한 이주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주배경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현재 이주배경 인구에 대한 정책은 출입국 단계에 치중되어 왔으며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후의 현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정동재 외, 2022; 이우영, 2019). 이주배경 인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내국인과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주배경 인구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2024)는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에는 장기 정주가 어려웠던 비전문인력에게도 가족 초청이 가능한 정주비자(E-7-4)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체류 기간을 확대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 대상을 대폭 확장하였다. 이는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력 공급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려는 정책 기조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 계획에서는 외국인 취업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와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이 병행해  
 언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체계를 어떻게 마련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 영유아를 둔 가정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이주배경 영유아는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가 많아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논의되어왔다(Magnuson, et al., 2006; Klein & Becker, 2017). 이주  
 배경 아동의 보육시설 접근성 관련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이 내국인  
 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성장 과정에서 균등한  
 교육·돌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장기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부모가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해  
 야 할 경우 보육·교육 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아동 보호의 측면  
 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주민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  
 원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아  
 동을 보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영유아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  
 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해왔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제도적 미비뿐 아니라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본 연구는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여 지역사회 내 인구다양성의 현  
 황과 변화를 진단하고, 지역의 인구다양성이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  
 비스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인구다양성 지수’는 민족, 언어, 국적 등 다양한 요소를 중  
 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지표

로 활용되나, 우리나라에는 인종과 언어에 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적을 인구다양성 산출의 주요 요소로 보고, 단순히 '외국인 비중'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인 영유아 보육 지원정책과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제도가 실제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보육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이주배경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다양성을 측정하는 인구다양성 지수를 보육서비스 정책과 연계해 활용함으로써 단순 통계치나 외국인 비율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성의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외국인 영유아 지원정책 시행 여부와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개입이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개선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보육시설 확충, 언어·문화 통역 지원,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이주민의 복합적 인구 구조가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인구다양성 지수를 읍면동 단위로 산출하고, 인구다양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읍면동 단위에서 이주배경 인구의 민족, 언어, 국적 등을 종합한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고, 이주배경 인구 및 이주배경 영유아의 비중에 따른 다양성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둘째, 지역별 보육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분석하고, 읍면동 및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주배경 영유아가 경험하는 보육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진단한다. 지역 내 보육시설의 분포, 운영 현황 등 공급 측면과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지역 내 구성원 간에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성 같은 사회적 자본 요인이 보육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의 시행 여부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 격차를 파악하여, 제도적 개입이 갖는 영향력을 평가한다.

셋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주배경 인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욕구와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주배경 인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구성원으로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욕구 및 정책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의 특성과 외국인 영유아 지원정책을 연계한 보육서비스 접근성 개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주배경 영유아와 내국인 영유아 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제고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과 주요 용어 정리

### 1.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 내용과 각 장에서 활용된 분석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 및 주요 용어를 정리한다.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 내 인구다양성의 의미와 이주민의 돌봄 및 권리보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보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지역의 인구다양성 변화를 분석한다. 제1절에서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제2절에서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읍면동 단위로 결합하여, 읍면동 단위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한다. 읍면동 단위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이주배경 인구의 변화를 확인한다. 제3절에서는 영유아 인구만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보육서비스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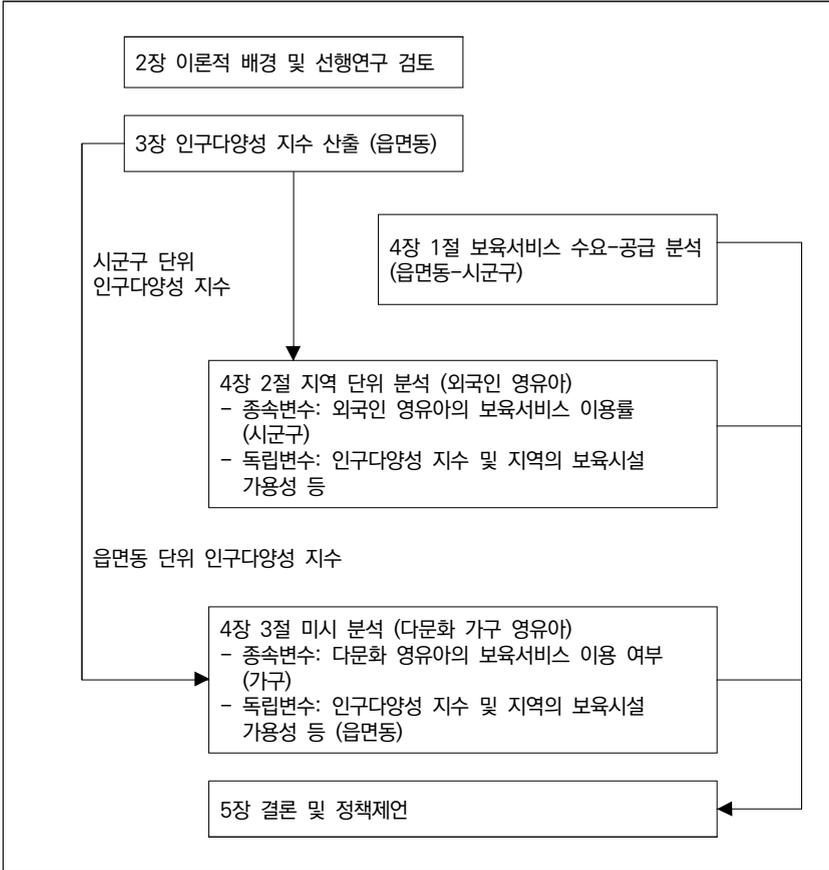
제4장에서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인구다양성 지수와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제1절에서 지역별 보육 수요와 공급 상황 및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주배경 아동의 비중과 보육서비스 공급 현황의 차이를 읍면동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이주배경 영유아 중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시군구 단위의 인구다양성 지수가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용률이 상승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일반화 추정 방정식

(GEE)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분석을 설정하고 있지만, 제1, 제2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통계 자료가 읍면동 단위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시군구 단위로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결혼이민 가구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소득·언어능력 등 미시변수와 인구다양성 지수 및 보육시설의 가용성을 함께 고려해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파악한다. 다층 분석을 적용하여 지역 맥락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가구 수준의 특성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제2절과 제3절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정량분석만으로는 언어·문화적 장벽과 현장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 7월 이주배경 영유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읍·면·동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12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RB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으며, 보육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문제와 정책적 지원 수요를 심층적으로 살피는 데 활용하였다. 또한, 이 FGI 결과는 제4장에서 정량분석 결과 해석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제고가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인구 유지와 경제·사회적 활력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를 모니터링하며 보육정책·이민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언한다. 또한 자료상의 한계와 추가 연구 과제 등을 제시하여, 향후 보다 미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와 정책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림 1-1] 연구 내용



## 2. 연구 범위와 활용 자료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이주배경 영유아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이주민 관련 연구는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구의 아동에 대한 정착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이주배경 아동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이주배경 아동을 국적에 따라 구분한다. 이는 현재 가용한 통계 자료가 국적을 기준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에 따른 보육서비스 수급권 역시 국적에 기반하여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주배경 영유아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구)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속한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므로 국적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영유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 가용한 자료에서는 체류 자격 분류나 거주 기간에 관한 정보가 읍면동 및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된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이주배경 인구를 구분하고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주요 분석 범위로 포함한다.

분석 방법과 자료는 각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여기서는 분석 범위와 관련된 활용 자료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본다. 본 연구의 핵심 지표인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와 내국인 혹은 귀화자와의 결혼을 통해 형성된 이주배경 가구(다문화 가구)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통계가 다르다.

먼저, 외국인의 경우 지역별 내국인 및 외국인 영유아 수를 인구총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보육통계를 활용하였다. 보육통계는 행정자료에 등록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행정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육통계는 어린이집 이용 통계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치원 이용 아동은 포함하지 못했으며 미등록 아동도 제외되었다.

다문화 영유아<sup>1)</sup>(혹은 이주배경 내국인)의 경우, 이들의 지역별 현황을

1) “다문화아동”, “다문화영유아” 등의 용어는 이들을 특정 문화 바깥에 위치한 ‘타자’로 고

알기 어려워 보육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육통계에서는 다문화 가구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이 제시되지만, 전체 다문화 가구 영유아 규모를 지역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적 취득자나 귀화자의 분류가 자료마다 상이하고, 공식 통계에서도 귀화자·국적 취득자 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시군구 단위로는 이들의 실제 이용률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 가족과 일치하는 개념의 다문화 가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통계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의 경우, 신혼부부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의 전체 아동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해당 데이터가 전수 데이터이며, 대부분의 출생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술통계 외에 분석에 활용된 시간적 범주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2018년 이후에 이주배경 아동 지원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변화들이 이루어졌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신규 정책과 제도적 개편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출생률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이주배경 아동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한국 사회 내에서 중요성이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신혼부부통계나 보육통계 등 주요 통계의 가용성과 함께 이주배경 아동 정책의 변화와 인구 구성의 변화라는 정책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읍면동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였다.

---

정시키며, 본래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낙인과 차별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김정선, 2011; 이민경, 이수정, 2011; 최병두 외, 2018).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주배경 영유아와 외국인 영유아 간의 법적 권리의 구분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 사용의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이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졌고, 다문화 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은 읍면동 수준에서 수행되었다. 이는 공간적 미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나 정책적 사각지대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읍면동 단위의 분석은 행정서비스의 실제 제공 단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역별 보육 수요 및 공급 간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역시 읍면동 단위에서 적용함으로써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정책 효과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영유아의 경우에는 통계 자료의 가용성에 한계가 있어 시군구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이는 외국인 등록 통계가 읍면동 단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다문화 가구 아동과 외국인 아동 간 분석 단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3. 주요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이주배경 인구,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외국인, 다문화 영유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주민 및 이주배경 인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해외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장기간(91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정부 부처별로 이주민/이주배경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재한 외국인’, ‘외국인 주민’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 차이에 따라 정책의 대상과 초점이 달라지며, 부처 간 개념의 불일치와 통일성 부족이 발생하기도 한다(이창원,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이주배경 인구를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이주

한 외국인 또는 귀화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 자료 범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이주배경 아동/영유아’는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가진, 국적에 상관없이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한다. 양계민(2020, p.21)은 이주배경 청소년을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가진 만 24세 이하 연령에 속하는 자’로 정의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한다(영유아보육법, 2024).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주배경 아동은 <표 1-1>과 같이 외국인 가정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는다.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국민, 이국인(異國人), 이방인(異邦人), 타국인(他國人)’ 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국립국어원, 2025). 법적으로는 국적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 중 체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 외국인으로 구분되는데, 90일 체류 기간이 초과하면 외국인 등록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법적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90일 이하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90일 초과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을 포함한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등록외국인은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표 1-2〉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구분

유형 구분		유형별 특징	
외국인 가정 자녀	미등록 외국인 (무국적 포함)	- 부모 모두 외국인 - 부모 국내 체류 중 국내 출생 후 미등록 또는 기타 사유로 미등록 - 본인 무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 외국인	난민(신청자)	- 부모 모두 외국인
		노동자 자녀	- 국외 출생 후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
		유학생 자녀	- 부모의 체류 상태 변경 등 경우에 따라 미등록으 로 변경될 수 있음
	기타	- 본인 외국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	국외 출생(중도 입국)	-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 - 외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부모를 따라 입국 - 본인 한국인 또는 외국인	
	국내 출생	-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 - 본인 한국인	
북한이탈 주민	남한 출생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 민국 입국 후에 출생 - 본인 한국인	
	북한 출생	- 북한에서 출생 후 탈북한 아동 - 본인 한국인(제3국 국적 없음)	
	제3국 출생(중도 입국)	-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 - 남/북한 이외의 제3국에서 출생 성장 후 입국 - 본인 외국인 또는 한국인	

출처: “경기북부 이주배경아동 돌봄환경 실태조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2, p.8.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국제 결혼을 통해 형성한 가족과 귀화자 가족”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족이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마다 다문화 가족의 정의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따르는 반면(여성가족부, 2018; 보건복지부, 2020), 교육부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다문화 아동/영유아’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왔다(문무경, 최효미, 이민경, 2016).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및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에 따르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다문화 아동을 정의한다. 즉,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 가구(다문화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 영유아’는 “한국 국적자가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한 가족 또는 귀화자 가족에 속한 만 0~5세의 영유아”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을 물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행정적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한다(Penchansky & Thomas, 1981; Gulliford et al., 2002). 그러나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역 내 보육시설의 물리적·양적 수준을 보여주는 ‘공급률’ 지표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살펴본다. 단, 공급률이 높다고 해서 언어·문화적 장벽이나 제도적 제약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하는 ‘이용률’ 지표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공급률 중심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예컨대, 지역에 시설이 많은 경우에도 언어 문제나 보육료 지원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공급률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되, 이용률을 보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접근성의 다면적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 제2장

###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민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제2절 이주민 밀집 지역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이주배경 영유아 대상 보육 지원정책 현황

제4절 이주배경 아동 보육서비스 접근성 관련 선행연구

제5절 본 연구의 차별성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이민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이민행정은 이주민에게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즉,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규제적 기능’과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부적 기능’을 가진다(정기선 외, 2021).

우리나라의 이민행정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중앙정부의 권한 아래 주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규제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중앙정부는 1963년 제정된 출입국관리법,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 2007년 제정된 외국인처우법, 2004년 제정된 외국인고용법,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법, 그리고 2010년 제정된 고려인동포법 등을 통해 외국인 체류 자격 심사, 국경관리, 난민 인정, 다문화가족 지원, 동포 지원, 사회통합 등 거시적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통합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이민행정의 급부적 기능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김혜순, 2015; 정희옥, 박명아, 2018; 조영희 외, 2021; 최영미, 2021; 우영옥, 2023; 조원지, 정호중 2023). 이는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 가족과 그 자녀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계절노동자·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증가하면서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행정서비스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하더라도, 이민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은 지역사회이므로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난민 수용의 경우, 법적 지위 부여와 거주지 배분은 중앙정부 소관이지만, 실제 생활 지원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조정은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가 담당한다(김혜순, 2015; 조영희 외, 2021). 특히 인구감소·노동력 부족·지역 활력 제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양상과 우선순위를 지니므로,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의료·통역 지원, 다문화센터 설치, 외국인 주민 상담소 운영 등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곽영길, 오세연, 2010; 정희옥, 박명아, 2018; 최선영, 2021). 특히 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고려인 등 정책 대상별로 조례를 세분화하여 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실제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을 포괄하는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광주, 경기, 전북, 제주 등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주민 관련 조례를 갖춘 대표적 사례로, 조례 유형의 차이는 각 지역의 산업 구조, 이주민 구성,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련 지원 조례 현황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서울				●		
부산	●	●	●			
대구				●		
인천				●		●
광주	●	●	●			●
대전	●	●				
울산	●	●				
세종				●		
경기	●	●	●			●
강원				●		
충북		●				●
충남			●	●		●
전북	●	●	●			●
전남	●	●				
경북	●	●		●		●
경남	●					●
제주	●	●			●	●

주: 자치법률정보시스템에서 이주, 외국인 주민, 다문화 등으로 한정해서 검색한 결과로 “외국인 주민”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결혼으로 가족을 형성했거나(다문화 가족), 일자리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외국인, 외국 국적을 지닌 동포인 고려인 등을 지원정책 대상별로 분류하여 제시함.

출처: “이주, 외국인 주민, 다문화 등,” 행정안전부, 2024a,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관한 위기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3대 인구 리스크(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했고(관계부처합동, 2021), 2022년에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범 도입하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법무부, 2022; 법무부, 2025). 이는 중앙정부가 비자

발급의 기본 요건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하여, 중앙주도 방식이었던 이민정책에 지방정부 수요를 직접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지역우수인재’나 ‘외국국적동포’ 등을 유치해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학업을 이행하면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가족 동반 이주”를 적극 장려하며,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별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해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속도나 지원 수준은 지자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임송학, 2023), 외국인 가정이 몇 년씩 안정적으로 거주·취업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거·보육·문화 적응 등 다각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광역비자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가 이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조직·인력·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류형철, 2024).

이처럼 우리나라의 이민행정은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정책 재량권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며, 지역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정동재 외, 2022). 그러나 충분한 법적·재정적 근거 없이 조례나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 중장기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중앙-지방 간 업무 중복이나 역할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정기선 외, 2021).

## 제2절 이주민 밀집 지역 관련 선행연구

지역사회의 인구 구성이 한층 다양해지면서 지역 내 문화·언어적 복합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국가 경계를 넘어 이동하지만, 실제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는 구체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구축된다(박세훈 외, 2009; 손승호, 2008). 특히 언어·문화적 자원이 제한적인 이주민은 경제적 기회, 주거 비용, 사회적 네트워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주민들이 같은 공간에 밀집하여 거주함으로써 유사한 배경을 지닌 이주민 간 자연스러운 상호 지지체계가 마련되고, 안정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한다(이진영, 남진, 2012; 김희철, 안건혁, 2011).

이주민 밀집 지역은 이주민에게 문화·언어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제공하여 이민자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박세훈, 2010; 김윤경 외, 2014; 배주현, 김감영, 2019). 선주민 입장에서는 이질적인 문화집단의 유입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기도 한다. 즉, 이주민 밀집 지역은 성공적으로 통합되면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적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한편, 갈등과 사회적 분리를 심화시킬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는 ‘양면적 공간’으로 평가된다(박세훈 외, 2010).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주민 거주지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Logan et al.(2002)은 뉴욕과 LA 지역의 이주민 거주지 분포를 분석하여 자산 축적 여력이 부족한 이민자는 저소득 소수민족 지역에 정착한 후, 여건이 개선되면 상류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Frisken and Wallace(2003)는 캐나다 토론토(Greater Toronto Area)의 지역 사례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이주민 정책만으로는 증가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민자의 초기 정착 및 사회통합 과정에서 교육, 주거, 보건·복지, 경찰·치안 등 다방면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데, 캐나다의 지방정부(시·군·광역 지자체)는 헌법상 '상위 정부(연방·주정부)의 수입기관' 성격이 강해, 재정·제도적 권한이 제한적이다. 즉, 중앙(연방)이나 주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집행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게 되어 정책·재정 간극이 커지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교외(suburban) 지역에서도 '에스닉 인클레이브(ethnic enclave)'나 '에스노버브(ethnoburb)'가 활성화되어, 단순한 주거지 이상의 경제·사회·문화적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Poulsen et al., 2002; Li, 2009; Sandoval, 2013). 이러한 공간에서는 이주민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며, 지방정부가 다양한 주거·교육·복지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Frisken & Wallace, 2003). Zhuang(2016)은 초다양성(hyper-diversity) 상황에서 단순히 주택 공급의 확대만으로는 이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 이주민 커뮤니티 리더·지원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역·중재자 지원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수도권과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집중 거주 현상이 본격화되었다(박세훈 외, 2009). 예를 들어, 손승호(2008)는 1999~2006년 서울시 외국인 거주 패턴 변화를 분석하면서, 기존 도심부 중심의 집거가 외곽 제조업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선진국 출신 외국인은 도심 고급 주거지를, 아시아권 출신 노동자는 공장·공단 주변의 저렴한 주거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

렸하다고 보고한다. 이는 국적·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주거지 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세훈 외(2009)는 같은 국적·문화권 이주민이 근접 거주하며 형성된 밀집 지역을 “안식처”라고 명명하고, 낯선 환경에서의 문화·언어적 장벽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음식점, 상가, 커뮤니티 센터 등의 인프라는 이주민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대표적 사례인 서울 영등포 대림동의 중국동포 밀집 지역은 지역 내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부 동포가 한국 문화를 ‘역수출’하는 등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외국인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면, 원주민 사이에서 주거환경 악화·문화적 충돌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박세훈 외, 2009).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가 내국인의 인구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하며, 지역의 거주구조 재편에 기여하고 있다(손승호, 2008; 박윤환, 2010).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Chung et al., 2016),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면 빈곤화·낙후화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종족 산업(ethnic business)’ 육성 등 적극적 다문화정책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도 보고된다(박효민 외, 2016).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는 공식 제도 외에도, 같은 국적·언어권 이주민이 형성하는 비공식 네트워크가 이주민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Chung et al., 2016). 취업, 주거, 자녀 교육, 의료 등 필수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자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접근이 어려운 초기 정착기에 핵심 버팀목으로 작동한다. 비공식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폐쇄적으로만 운영될 경우, ‘이방인들의 섬’ 같은 분리 현

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반대로, 지방정부가 통번역 지원·문화 프로그램·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결합해 비공식 네트워크와 협력한다면, 이주민 커뮤니티는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박효민 외, 2016).

이진영, 남진(2012)은 수도권 시군구 단위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 변화를 추적하며, 기존 외국인 커뮤니티의 존재가 새로운 이주민의 집거를 촉진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희철, 안건혁(2011)은 전문인력 외국인과 노동자 유형 외국인을 구분해, 노동자 유형은 주거환경 및 주택가격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한다. 하성규 외(2011)는 서울시 구 단위에서 외국인을 국적·체류 자격별로 군집 분석한 결과, 산업구조와 기존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장기적 밀집 패턴을 공고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2024b)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95개로 파악된다. 2017년 69개에서 2019년 95개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88개로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유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소폭 줄었고,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수가 5만 명 이상이고, 총인구 대비 비중이 10%를 넘는 지자체가 안산시, 시흥시, 구로구, 영등포구 4개이며, 외국인 주민 수 1만 명 이상인 면서 총인구 대비 5%를 넘는 지자체도 전국에 45여 개로 이민자 인구 비중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표 2-2〉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외국인 주민 수 및 인구 대비 비율

구 분	인구 대비 10% 이상(14)	인구 대비 5% 이상(83)	인구 대비 3% 이상(18)	인구 대비 3% 미만(12)
외국인 주민 수 5만 명 이상(7)	안산시, 시흥시, 구로구, 영등포구	화성시, 수원시, 부천시		
외국인 주민 수 3만 명 이상(10)	금천구, 아산시	평택시, 김포시, 부평구, 김해시 천안시	청주시, 용인시, 성남시	
외국인 주민 수 1만 명 이상 (57)	영암군, 음성군, 포천시, 진천군, 안성시, 서울 중구	종로구, 오산시, 경주시, 당진시, 용산구, 경산시, 동대문구, 연수구, 광진구, 이천시, 서귀포시, 거제시, 울산 동구, 광산구, 서대문구, 울주군, 관악구, 광주시, 양주시, 미추홀구, 제주시, 군산시, 동작구, 군포시	인천 남동구, 충주시, 달성군, 파주시, 성동구, 인천 서구, 성북구, 마포구, 익산시, 여주시, 양산시, 달서구, 유성구, 진주시, 창원시	중랑구, 안양시, 전주시, 구미시, 포항시, 의정부시, 고양시, 대구 북구, 강서구, 남양주시, 강남구, 송파구
외국인 주민 수 1만 명 미만 (53)	완도군, 진도군	고령군, 함안군, 금산군, 창녕군, 강원 고성군, 논산시, 부산 중구, 성주군, 보령시, 예산군, 밀양시, 함평군, 완주군, 동두천시, 해남군, 영덕군, 칠곡군, 고창군, 여주시, 의령군, 통영시, 장성군, 신안군, 청양군, 영천시, 서천군, 경남 고성군, 김제시, 울진군, 나주시, 장수군, 정읍시, 부산 강서구, 괴산군, 홍성군, 횡성군, 부여군, 증평군, 보은군, 태안군, 서산시, 담양군, 진안군, 고흥군, 사천시, 연천군, 인천 중구, 양구군, 청도군, 무주군, 영양군.		

출처: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2024b, 행정안전부, p.24.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bs9UdYP0MQKf1Fj7ud1xvqv.node40?bbsId=BBSMSTR\\_00000000014&nttId=113261](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bs9UdYP0MQKf1Fj7ud1xvqv.node40?bbsId=BBSMSTR_00000000014&nttId=113261)에서 추출

### 제3절 이주배경 영유아 대상 보육 지원정책 현황

제1절과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통합 문제는 지방정부가 직면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교육 문제는 이민정책 중에서도 사회적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이는 영유아 시기의 적절한 보육서비스와 교육 지원이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 방지와 세대 간 평등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이주배경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보육서비스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주배경 영유아를 둔 가구를 위한 보육 지원에 대한 권리는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명시되었다. 협약 제2조는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제3조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그리고 제24조, 제26조, 제28조는 아동의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출생등록권(제7조), 가족재결합권(제9조), 건강권(제24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제26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8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2). 우리나라는 1991년에 동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부여된다(김미정, 임예슬, 2020).

국내법에서도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종교, 사회적 신분,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를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 역시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윤정 외, 2018). 또한, 다문

화 가족의 자녀는 어린이집 보육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류호, 202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5항(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서도 이주배경 아동의 돌봄 및 보육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등록 아동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많아, 향후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석원정, 2023).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과 국내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원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자체별로 보육료 지원 여부와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86곳(38%)만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류호, 2023), 서울시는 2024년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 거주 외국인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채해원, 2024). 경기도는 2020년에 조례 개정 후, 2023년부터 등록 외국인의 만 0~5세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 아동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3). 또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조례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지역은 외국인 아동 지원에 관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62곳(27%)에 불과하다. <표 2-3>에서 나타나듯이, 비록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영아(0~2세)의 경우 최저 22,000원부터 최대 전액까지였고, 유아(3~5세)의 경우 최저 22,000원에서 최대 전액까지 지역별로 상이하다. 특히 모든 영유아(0~5세)를 대상으로 외국인 국적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그리고 서울 일부 자치구(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대구 달성군으로 제한적이다(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실, 2023). 이처럼 보육료 지원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주배경 영유아가 동등한 보육 기회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지원 범위가 달라 형평성이 저해되는 사례도 보고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 보육료(유아학비)만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배제하는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외국인 가정이 지원을 받기 위해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조수현, 2024). 예를 들어, 수원시 화서동의 한 어린이집은 외국 국적 아동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약 30~40%의 아동이 유치원으로 옮겨간 사례가 보고되었다(조수현, 202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과 2023년에 국내 거주 이주배경 아동에게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실, 2023).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에는 두 기관의 소관 부처가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행정적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소관 부처가 통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정책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표 2-3) 지자체별 외국인 보육료 지원 상세 현황

구분	시행연도	영아(0~2세)	유아(3~5세)	
서울특별시	2025 (예정)	50%	50%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2022.3~4	75,000~102,800원	56,000~92,520원	
경기도 (광역)	2023	100,000원	100,000원	
경기도	광명시	2024	294,000~440,000원	180,000원
	화성시	2023	전액	전액
	시흥시	2020	260,000원	260,000원
	의정부시	2022	22,000원	22,000원
	부천시	2020.3	100,000원	280,000원
	안산시	2021.2	260,000원	280,000원
	군포시	2021.1	100,000원	100,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2	전액	전액	
충청북도 보은군	2023	280,000~514,000원	280,000원	
충청남도 논산시	2022.9 (유아) 2023.3 (영아)	375,000~514,000원	280,000원	
충청남도 홍성군	2023	375,000~514,000원	280,000~483,700원	
충청남도 천안시	2023		390,000~483,700원	
충청남도 아산시	2023		390,000~483,700원	
충청남도 예산군	2023	280,000원	280,000원	
전라북도 정읍시	2022.3	280,000원	370,000원	
경상북도	2024.7		280,000원	
경주시	2022.1	100,000원	100,000원	
	2023.3.	200,000원	150,000~350,000원	
인천광역시	2022	-	(만 5세) 113,000~280,000	
광주광역시	2022 (유치원) 2025 (영아)	-	280,000원	
전라남도	2025 (전 연령)	100,000원	100,000원	
경상남도	2023	-	100,000원	
대전 대덕구	2025	100,000원	100,000원	
강원도 횡성군	2024	375,000~514,000원	280,000원	

주: 시흥시는 2020년 1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처음에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다가, 2021년 만 0~5세 1인당 24만 원, 2022년부터는 26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출처: "이주아동에게 '코리아드림'은 없다.. 보육에서부터 차별 배제 여전,"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실 [보도자료], 2023, p.4.

다문화 아동 보육의 주요 법적 근거로는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과 차별 금지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다문화 아동 보육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은 다문화 아동을 취약보육 대상으로 포함하여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차별을 방지해야 할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규정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과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등을 통해 다문화 아동에 대한 통합보육 환경 조성 및 교사 보수교육 강화, 표준보육과정 내 다문화 교육 내용 반영 등을 추진한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다문화 아동’ 대신 ‘이주배경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다문화·외국인·난민 가정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동등한 교육 및 돌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주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영유아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영유아를 배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동의 발달권 보호를 위반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에서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김희주 외, 2021; 장주영, 김희주, 2024).

## 제4절 이주배경 아동 보육서비스 접근성 관련 선행연구

앞에서는 우리나라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주로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제도적인 차별이 없더라도,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언어·문화적 장벽이나 지자체별 보육시설 공급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이주배경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서비스 접근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육서비스의 확대는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전략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해왔다(Garritzmann, Häusermann, & Palier, 2022; Blossfeld et al., 2023). 1990년대에는 주로 북유럽과 프랑스 등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만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0년대 들어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공공 보육 지출과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Van Lancker, 2018). 이러한 증가 추세는 3~5세 유아뿐 아니라 0~2세 아동에서도 보육 지출과 보장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다(Eurydice, 2025).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인지·사회·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교육 성취와 노동시장 성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수 제시되어왔다(Leseman, 2009; Burger, 2010; Van Lancker, 2018; Pavolini & Van Lancker, 2020; Ha & Yeo, 2022; Garritzman et al., 2022). 특히 이민자 자녀의 경우 조기 보육서비스를 통해 국가 언어나 문화를 접하고 학업 준비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사회적 통합과 교육 격차 완화 측면에서 보육이 매우 중요한 지원 수단으로 여겨진다(Magnuson, et al., 2006; Klein & Becker, 2017;

Gottfried & Kim, 2015). 즉,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확대는 전반적인 아동 발달뿐 아니라, 이민자 가정 아동의 사회적 통합과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이용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Van Lancker, 2013). 특히 공적 보육서비스의 혜택이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 이른바 ‘마태 효과’ 현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의 보편화가 정부의 의도와 달리 기존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Pavolini & Van Lancker, 2020). 실제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조기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등록시킬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부모 학력이 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Greenberg, 2011).

보육서비스 이용의 계층 간 격차는 국가별 가족정책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스웨덴에서는 보육 이용률이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난 반면, 전통적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해 온 독일이나 가정양육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핀란드에서는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보육시설 이용률에서 편차가 나타났다(Krapf, 2014). 또한, 지역의 보육서비스 질이 보육서비스 이용과 어머니의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Schober & Spiess, 2015). 이처럼 영유아기에 시작되는 보육서비스 이용 격차는 이후 학교 교육 단계에서도 불평등이 지속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Blossfeld et al., 2023). 또한 양질의 보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초기 단계의 교육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Kulic et al., 2019).

이주배경 가정의 영유아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언어·문화적 장벽, 제도의 복잡한 절차, 그리고 체류 자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왔다. Kahn & Greenberg(2010)는 부모의 출신 지역 역시 보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동시장 참여도를 통제하면 그 효과가 소멸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이민자라는 배경 자체보다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 주된 원인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하고서도 이민자 가정이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지적한다(Fram & Kim, 2008; Yoshikawa & Kalil, 2011; Johnson et al., 2017). 이는 부모의 체류 자격, 언어 능력, 정보 접근성 같은 추가적 장벽이 동시에 작동해 보육서비스 접근 격차를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Fram & Kim(2008)은 영어 외의 언어를 쓰는 가정이 정보 부족, 교사-부모 간 소통 어려움, 문화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참여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해도 이러한 차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Moll De & Betz(2014)는 이주배경 가정의 아동은 독일 원주민 가정의 아동보다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낮았으며, 특히 부모의 언어 능력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사회계층을 통제한 후에도 이주배경의 부정적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주배경과 저소득·저학력이라는 특성이 중첩될 경우, 보육 참여율이 더욱 낮아지는 이중 불이익(double disadvantage) 현상이 있다고 보고했다. Johnson et al.(2017) 역시 영어 미숙련자의 비율이 높은 특정 지역 출신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현상을 확인했고, 이는 출신 지역의 문화·언어 장벽과 제도의 복잡한 절차가 추가적 제약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영유아 무상교육 정책이 확대되어도 서류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 혜택 수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Hernandez et al., 2011). 낮은 문화권의 프로그램이나 교사-부모 간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불안감은 참여 의지를 더욱 약화시킨다. 특히 미등록 상태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경우 공적 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이용을 포기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Yoshikawa & Kalil, 2011), 이로 인해 공식 보육 대신 비공식적 돌봄(친인척 보육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보육서비스 접근성은 제도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히스패닉계 이민자 부모 연구(Castro et al., 2023)에서 다국어 지원 미비와 제도 절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실질적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프랑스 역시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비교적 발전된 공적 보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비EU권 이민자 가정의 보육 이용률이 여전히 낮다(Eremenko & Unterreiner, 2023).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북유럽 국가에서도 언어 장벽, 정보 부족, 행정 절차 복잡성이 이민자 가정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Tervola & Nygård, 2023). 이러한 구조적 장벽으로 인해 이주배경 가정에서는 친척 돌봄, 교회·지역 커뮤니티의 돌봄 등 비공식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Crosnoe, 2007; Boggess & Garcia, 2022).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윤경(2010)은 2009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자료 중 결혼이민자 가정을 분석하여, 다문화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37.3%)이 일반 가정(38.1%)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보육실태조사는 전국 대표성을 고려해 설계된 자료임에도 다문화 가구 표본(전체 2,749명 표본 중 118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대표성에서 한계를 가진다.

최혜진 외(2020)는 신혼부부통계를 활용해 다문화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5년에 43.3%였던 이용률이 2018년에는 41.2%로 감소한 반면, 같은 시기 비다문화 가구의 이용률은 45%에서 51.7%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는 36.8%에서 40.8%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는 48.1%에서 44.6%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구 영유아는 비다문화 가구 영유아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영유아에 대한 분석만 시행되었으며, 외국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정성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와 정보 부족을 보육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유희정, 2008; 박영아, 2010; 서문희 외, 2011; 박은정 외, 2020). 유희정(2008)은 이주배경 가구 영유아가 언어 및 인지 영역에서 지연을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양육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주배경 영유아의 양육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언어 및 정보 부족 때문에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박영아, 2010; 서문희 외, 2011). 또한 교사들도 언어 소통 능력 부족이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보육활동에 대한 참여도 저조로 연결된다고 지적한다(박영아, 2010).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알림장 확인이나 교사 면담처럼 일상적인 소통 단계부터 장벽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외, 2020).

## 제5절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전국 읍면동 및 시군구를 기준으로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외국인 밀집 지역 관련 연구들은 주로 시군구 단위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 특성을 파악하거나 외국인의 공간적 분리 현상을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측정 방법 역시 분리 지수 위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국인 유치가 확대되고, 국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이주배경 인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가족 동반 비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거주 외국인 수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에서 그들의 가족으로 연령별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관련 국내 연구들은 결혼이민자 가정 위주로 언어·문화 장벽을 질적 방법론으로 분석한 사례가 다수였으며, 외국인 영유아를 포함한 ‘이주배경 영유아’ 전반을 대규모 정량 데이터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최윤경, 2010; 박영아, 2010; 박은정 외, 2020). 또한,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지역 특성이나 공간적 분포와 연계하여 전국 단위로 고찰한 연구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분석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분석 단위를 읍면동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한다. 기존 외국인 밀집 지역 연구들이 서울·경기 등 일부 수도권 중심의 시군구 단위 분석에 치중하고, 지표 측정 방식 역시 분리 지수나 집중 지수 위주로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전국

적인 스케일에서 읍면동 수준까지 고려해 이주배경 가정의 분포와 지역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 차원에서 도출한 인구다양성 지수를 지역 및 가구 단위의 보육서비스 이용 자료와 결합해,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 접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 격차가 이민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언어·문화적 장벽, 부모의 교육 수준, 출신국 특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은 다양한 국가의 사례에서 거듭 보고되고 있다(Van Lancker, 2013; Moll De & Betz, 2014; Johnson et al., 2017). 그러나 국내에서는 행정통계 수준의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특성(인구다양성)과 보육 접근성을 동시에 검증한 연구가 극히 드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사회 맥락과 개인 특성을 결합함으로써, 이주배경 영유아가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요인 때문에 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생기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셋째, ‘외국인 가정’ 대상 연구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기존 다문화 연구와 차별된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혼인 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최윤경, 2010; 최혜진 외, 2020), 취업비자나 유학생 비자, 난민 지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 가정이 놓이는 복합적 어려움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 가정뿐 아니라, 체류 자격이 다른 외국인 가정을 포함한 이주배경 영유아 전반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확장된 이민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보육서비스 이용 격차와 그 결정요인을 더욱 폭넓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이를 통해 지역사회 맥락에서의 사회통합 및 정주환경에 대한 함의를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Biedinger

et al, 2008; Schober & Spiess, 2015; Tervola & Nygård, 2023), 이민자 가정의 공식 보육서비스 접근성은 지역적 지원 체계, 정보 제공 방식, 언어 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지역사회가 이주배경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물적·제도적·문화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전국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나 ‘사회통합’ 전략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1) 전국 단위 미시공간적 수준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고, (2) 이를 지역 및 가구 단위 행정자료와 결합하여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3) 국내에서 진행된 기존 연구가 가지던 공간적·자료적·대상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 제3장

### 지역의 인구다양성 변화

제1절 인구다양성 지수의 산출 방법

제2절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제3절 이주배경 인구의 국적별 분포

제4절 영유아의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제5절 소결



## 제 3 장 지역의 인구다양성 변화

### 제1절 인구다양성 지수의 산출 방법

#### 1. 인구다양성 지수의 산출 방법

인구다양성 지수는 한 지역이나 집단을 구성하는 인구가 동질성에서 이질성까지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단순히 외국인 비중이나 특정 인구집단의 비율 같은 기술통계는 특정 범주의 규모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반면, 인구다양성 지수는 전체 인구 분포의 균형성과 혼합 정도를 동시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조적 다양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외국인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한 국적에 집중된 지역과 여러 국적이 고르게 분포된 지역은 그 사회적 함의가 크게 다르며, 인구다양성 지수는 이러한 차이를 수치로 구분해낸다. 인구다양성 지수는 종교, 인종, 문화가 뒤섞인 지역 공간에서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며, 이를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지표가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Shannon-Weaver 지수, Simpson 지수, 그리고 Blau 지수(또는 Herfindahl-Hirschman 지수)가 다양성을 계량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활용된다.

Shannon-Weaver 지수는 정보 이론에서 유래한 지표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 $p_i$ )과 그 로그값을 활용해 인구 구성의 불확실성, 즉 엔트로피를 측정한다. 계산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 내에서 각 인구집단 수를 전

체 인구수로 나누어 비율( $p_i$ )을 구하고, 각 비율에 대해 자연로그( $\ln$ )를 취한 뒤, 이 값을 모든 집단에 대해  $\sum \ln(p_i)$  형태로 합산한 뒤 음수 부호를 적용한다. 이 지수는 집단의 비율에 따라 수치가 민감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하위집단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될수록 지수값이 커진다. 로그 함수를 사용하므로 직관적인 해석이 어려울 수 있고, 지수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Simpson 지수는 영국의 통계학자 에드워드 휴 심슨(Edward Hugh Simpson)이 1949년에 종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 제안하였다. 생태학에서 주로 쓰이던 이 지표는 “무작위로 두 개체를 뽑았을 때 둘이 같은 종(혹은 집단)에 속할 확률”을 통해 다양성을 거꾸로 추정한다. 값이 낮을수록 다양한 집단이 골고루 분포된 상태임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집단별로 가능한 개체 쌍의 수  $n_i(n_i-1)$ 를 구해 모든 집단에 대해 합산한 뒤, 이를 전체 개체 쌍  $N(N-1)$ 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주로 생태학 분야에서 종 다양성 분석에 활용되어 왔으나, 사회학·인구통계학에서도 한 지역 내 인종 집단 간 균등도나 조직 내 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 응용된다. 그러나 소규모 집단의 비율 변화에는 민감도가 다소 낮다는 지적도 있다.

블라우 지수(Blau Index)는 사회학자 피터 블라우(Peter Blau)가 집단 내 이질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지표로, 경제학에서 시장 집중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와 계산 방식이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각 집단별 인구 비율( $p_i$ )을 제공한 값을 모두 합산한 뒤 이를 1에서 빼며, 결과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인구가 여러 집단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sup>2)</sup> 미국 인구조

2) 블라우 인구다양성 지수의 산식은  $DI = 1 - \sum_{i=1}^k \pi^2$ 이다.

사국(U.S. Census Bureau)에서 발표하는 인구다양성 지수가 블라우 지수이다. 예컨대, 한국인 50%, 중국인 50%로 구성된 지역의 다양성 지수는 0.5이지만, 한국인 50%, 중국인 20%, 미국인 20%, 영국인 10%인 지역의 블라우 지수는 0.66이 된다. 블라우 지수는 계산이 간단하고 직관적인 장점이 있지만 단순히 비율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컨대 80% 백인과 20% 아시아인 집단과 80% 흑인과 20% 히스패닉으로 구성된 집단을 같은 지수로 취급하는 등, 서로 다른 집단 간 ‘질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Rushton(2008)은 이러한 맥락이 무시될 경우 중요한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블라우 지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실증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유용하다. 첫째, 계산이 단순하고 자료 요구량이 적다. 집단별 인구 비율만 확보되면 복잡한 가중치나 추가 가공 없이 바로 산출할 수 있다. 둘째, 값의 해석이 직관적이다. 지수 범위가 0(완전 동질)에서 1(완전 이질) 사이로 한정돼 있어, 시계열·공간 간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거나 정책 목표·평가 지표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셋째, 지역·집단 간 불균형을 하나의 척도로 통합한다. 외국인 비중처럼 단일 범주 규모만 보여주는 지표와 달리, 다수·소수 집단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돼 있는지를 동시에 반영해 사회적 혼합 정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통합된 정보는 정책 타겟팅에 유용하다. 지수가 높은 지역은 문화통역, 다언어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복합 서비스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초기 적응 지원이 시급할 수 있다. 지수를 활용하면 이러한 우선순위를 근거 기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다양성 지수는 ‘집단 간 질적 차이’나 ‘소수 집단 규모 변화’ 같은 미세한 요인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데이터 접근성

이 높고 해석이 용이하며, 정책 활용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체 유용성이 높다.

## 2. 인구다양성 지수의 산출 방법과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지역별 인구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블라우(Blau) 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블라우 지수는 단순히 도출된 값만으로 해석되기보다, 지수 산출 시 사용한 집단 구분 기준과 지역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은 인종이나 민족을 기준으로 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이나 언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공식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분류 가능한 기준인 국적을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한다. 국적 기준은 국내 통계 자료에서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어 자료 확보가 용이하며, 지표 산출 과정도 명료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국적 기준을 활용하더라도 블라우 지수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국적이라도 문화적·언어적 배경이 유사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같은 국적 집단 내에서도 인종·민족·종교·언어 측면에서 이질성이 클 수 있다. 그럼에도 국적은 현행 행정 및 통계 체계에서 가장 명확히 분류되고 데이터 접근성이 뛰어난 기준이므로 실증 연구에서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국적별 분포를 분석하는 것은 국제 이주나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단순히 인종·민족 같은 광범위한 분류를 넘어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총조사 전수 부문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한다. 2015년부터 인구총조사는 기존 방문조

사 방식 대신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통계를 생산한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인구에서 해외거주자와 기준 시점 이전에 사망한 인구를 제외하고, 기준 시점 이전에 출생한 인구를 포함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부를 기반으로 등록 거주지를 파악하되, 외국인 등록자료·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단기불법체류자 자료를 보완하여 산출한다. 즉, 단기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이면 인구총조사에 포함한다.

인구총조사에서 내·외국민을 구분하는 기준은 개인별 국적 자료이지만, 다문화 가구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공개된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가구의 범주는 크게 일반 가구,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로 구분된다. 외국인 가구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다. 일반 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가 포함된다. 이 구분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 가구’로 분류되며, 외국인과 결혼한 가구나 귀화자가 일반 가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구로 분류된 가구원에 대해서는 국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귀화자나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이주배경 인구임에도 해당 인구가 이주배경 인구인지 여부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읍면동별 다문화 가구 현황(행정안전부, 2023)」 자료를 추가로 결합한다. 여기서 다문화 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 가구’를 의미한다(통계청, 2024). 이때, 다문화 가구원은 다문화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의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구 구성원은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

속 등이나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가 아닌 동거인도 포함된다. 다문화 가구에 포함된 한국인은 이주배경 인구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다. 행정안전부 자료는 읍면동 단위로 공개되므로 이를 인구총조사 자료의 읍면동 자료와 결합하되, 내국인 인구에서 다문화 가구 인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정한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에서도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이다(통계청, 2024). 행안부 자료는 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 가구에 대한 통계치를 제공하므로 결혼하지 않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해내기 어렵다. 2022년 기준 비친족 가구는 일반 가구 중 2.4%이며, 주로 20~40대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2). 비친족 가구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인구총조사가 유일하지만, 이 자료에서도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비중은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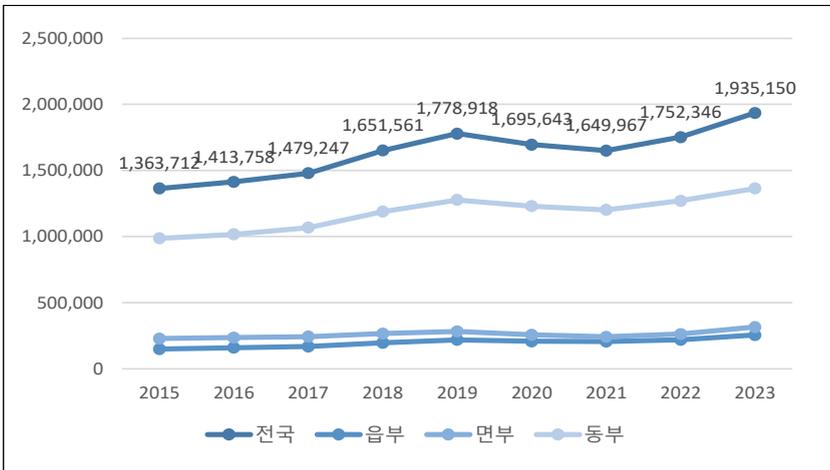
기존 조사에서 다문화 가구(이주배경 내국인)의 출신 배경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구다양성 지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은 출신 국적이 아닌 현 국적을 기준으로 별도로 분류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국적별 분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다문화 가구는 마치 하나의 국적처럼 별도로 제시하였다. 즉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할 때 원래의 출신 국적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결혼·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다문화”라는 단일 범주로 묶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별 국적 다양성 수준이 실제보다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 가구 내부의 출신 국적별 이질성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자료의 공개가 미흡한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 제2절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 1. 전체 인구의 인구다양성 지수

인구총조사는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그리고 90일 이상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괄한 통계이다. 이에 따라 조사된 외국인 인구 추이는 2015년 약 136만 명에서 2019년에 177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2021년에는 170만 명 선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2022년에는 약 175만 명, 2023년에는 약 193만 명으로 다시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읍부, 면부, 동부를 모두 합한 결과이지만, 세부 행정구역별로도 전반적인 증가 추세 후 코로나19 시기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림 3-1] 외국인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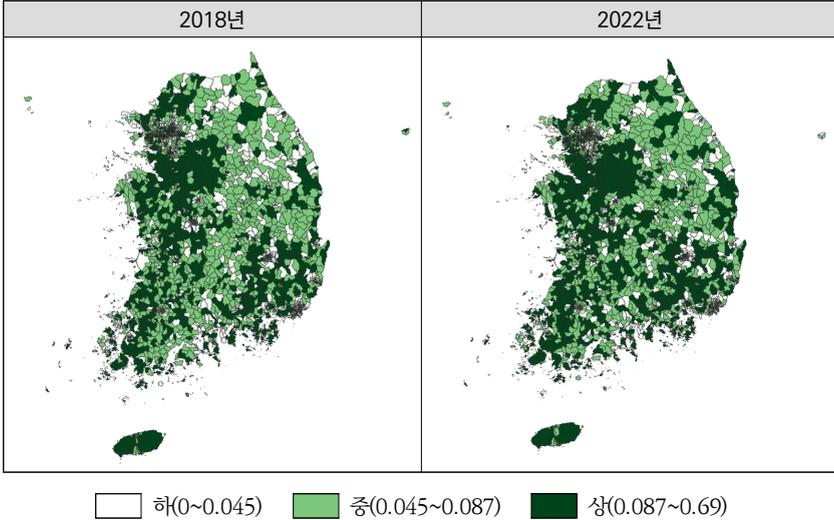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전체 이주배경 인구에 대한 다양성 지수는 전국 읍면동 단위로 산출한 뒤, QGIS에서 3분위(Quantile) 방식으로 구분하여 상위, 중위, 하위 분위로 제시한다. 지수를 세 구간으로 나눈 이유는, 지역별 지수 값을 단순화하여 한눈에 비교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함이다. QGIS는 분위 구간을 설정하여 지도에 표현하는데, 이는 각 구간마다 읍면동의 수가 대체로 유사하게 분포되도록 해주어 극단적인 데이터 값으로 인한 시각적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상대적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3-2]는 외국인,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을 포함한 이주배경 인구의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3]은 외국인의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2022년에 더 넓은 지역에서 ‘중·상’ 단계의 다양성 지수가 관측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인구다양성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2018년에는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충북, 충남, 제주권역의 산업도시 및 도심에서 인구다양성 지수가 높은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으나 2022년에는 도심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인구다양성 지수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다양성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 바깥, 중·남부권 주요 공단·농공단지 주변의 인구다양성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남·전북·경북·강원도 내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서도 흰색(하)에서 초록색(중·상)으로 바뀐 읍·면들이 늘어났다. 이는 농어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한 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지역에서도 국적 다양성이 높아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관광산업, 서비스업이 발달한 도시(강원·경북·경남 일부 시군)에서도 2022년에 다양성 지수가 상승한 곳들이 나타났다. 이는 펜션·리조트, 숙박·외식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나 외국인 창업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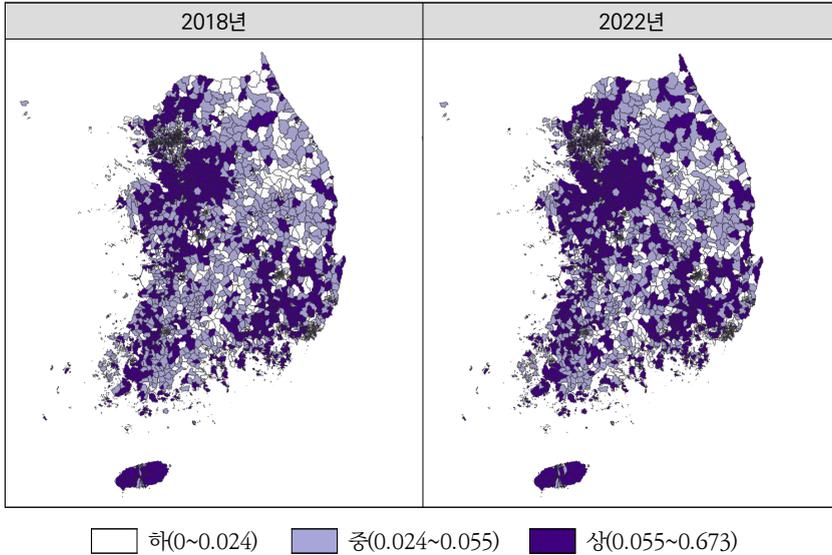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경기 남부(화성·평택·오산·안성), 충청권, 경상권 일부 공단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높은 지수를 보이는데, 이는 제조업·물류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과거에는 수도권·공단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되었지만, 이제 농촌, 중소도시, 관광·레저 산업 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인구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은 외국인만 포함하여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그림 3-2]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농촌·어촌 지역에서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전남 고흥군, 해남군, 무안군이나 충남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등 농어촌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계절성·단기 체류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반면, 수도권 및 주요 공단·산업단지·관광도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이 계속 유입되면서 인구다양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54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그림 3-3] 외국인 기준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광역지자체별로 인구다양성 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인구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경기도, 제주도, 그리고 서울시였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제조업 또는 관광업이 발전한 지역이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한 광역·행정 기능, 충남·충북 곳곳의 제조업·첨단산업단지 등이 밀집되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다.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인구다양성 지수는 2018년 0.0527에서 2022년 0.0568로 증가하여 7.79%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인천광역시(21.96%), 대전광역시(17.67%), 전라남도(17.5%), 전라북도(16.94%), 강원도(13.65%), 대구광역시(13.64%) 등이다. 수도권(인천, 경기도),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상남도(0.87%), 울산(0.43%) 등 일부 지역은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9.49%)와 서울특별시(-0.92%)는 인구다양성 지수가 감소했다.

〈표 3-1〉 2018~2022 광역지자체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시도	2018	2022	증가율(%)
서울특별시	0.0755	0.0748	-0.92
부산광역시	0.0324	0.0336	3.7
대구광역시	0.0286	0.0325	13.64
인천광역시	0.0592	0.0722	21.96
광주광역시	0.0396	0.0442	11.62
대전광역시	0.03	0.0353	17.67
울산광역시	0.0466	0.0468	0.43
세종특별자치시	0.0411	0.0372	-9.49
경기도	0.083	0.0853	2.77
강원도	0.0315	0.0358	13.65
충청북도	0.0664	0.0743	11.89
충청남도	0.0857	0.0963	12.37
전라북도	0.0425	0.0497	16.94
전라남도	0.0469	0.0551	17.5
경상북도	0.0546	0.0587	7.52
경상남도	0.0573	0.0578	0.87
제주특별자치도	0.0752	0.0756	0.53
평균	0.0527	0.0568	7.79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지역별 인구다양성 상위권 지역의 집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3-2]에서 제시한 3분위 기준으로 상위권에 해당하는 광역지자체별 읍면동의 개수와 전체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2018년에 비해 인구다양성 상위 지역이 100여 곳 이상 증가하였다.<sup>3)</sup> 경기도는 2018

3) 전체 이주민은 1,167곳에서 1,321곳으로 증가했으며, 외국인은 1,167곳에서 1,281곳으로 증가하였다(부표 1 참고).

56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년, 2022년 모두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제시되었다. 수도권 중심으로 다양한 이주민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지역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남·경남·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기와 서울의 상위 읍면동 비중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2〉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2018년			2022년		
	시도	상위 읍면동 수	비율	시도	상위 읍면동 수	비율
1	경기도	242	20.7	경기도	241	18.2
2	경상남도	131	11.2	전라남도	154	11.7
3	서울특별시	130	11.1	경상남도	143	10.8
4	전라남도	124	10.6	서울특별시	138	10.4
5	충청남도	118	10.1	충청남도	136	10.3
6	경상북도	96	8.2	경상북도	111	8.4
7	전라북도	90	7.7	전라북도	108	8.2
8	충청북도	49	4.2	충청북도	65	4.9
9	인천광역시	48	4.1	인천광역시	61	4.6
10	강원도	29	2.5	강원도	36	2.7
11	부산광역시	29	2.5	부산광역시	36	2.7
12	제주특별자치도	27	2.3	제주특별자치도	26	2.0
13	대구광역시	14	1.2	광주광역시	17	1.3
14	광주광역시	12	1.0	대구광역시	17	1.3
15	울산광역시	12	1.0	울산광역시	14	1.1
16	세종특별자치시	10	0.9	대전광역시	9	0.7
17	대전광역시	6	0.5	세종특별자치시	9	0.7
	합계	1,167	100.0	합계	1,321	100.0

주: 여기서 상위 지역은 앞의 [그림 3-1]에서 제시한 3분위 기준 상 지역(0.087 이상)을 의미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분포는 〈부표 1〉에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표 3-3〉은 읍면동 인구다양성 지수를 광역지자체별로 평균한 결과이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2018년, 2022년 모두 충청남도의 인구다양성 지수가 가장 높았다. 변화량을 살펴보면, 충남, 충북과 전남, 인천 등 수도권·중부권에서 평균값이 뚜렷이 상승하였다. 충북은 0.094에서 0.105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전남(0.088 → 0.098), 인천(0.083 → 0.098)도 지수가 높아졌다. 세종시는 지수 평균이 0.09에서 0.081로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는 행정복합도시에 속한 동 지역의 다양성 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2018년			2022년		
	시도	평균	N	시도	평균	N
1	충청남도	0.120	207	충청남도	0.132	208
2	경기도	0.119	561	경기도	0.120	564
3	제주특별자치도	0.109	43	제주특별자치도	0.116	43
4	서울특별시	0.100	424	충청북도	0.105	153
5	경상남도	0.098	308	경상남도	0.103	305
6	충청북도	0.094	153	서울특별시	0.101	426
7	세종특별자치시	0.090	19	전라남도	0.098	297
8	전라남도	0.088	297	인천광역시	0.098	155
9	인천광역시	0.083	151	전라북도	0.090	243
10	전라북도	0.081	243	경상북도	0.086	330
11	경상북도	0.080	332	세종특별자치시	0.081	22
12	울산광역시	0.074	56	울산광역시	0.075	56
13	강원도	0.059	188	강원도	0.068	188
14	광주광역시	0.058	95	광주광역시	0.064	97
15	부산광역시	0.051	206	부산광역시	0.056	205
16	대전광역시	0.046	79	대전광역시	0.053	82
17	대구광역시	0.044	139	대구광역시	0.049	142
	합계	0.089	3501	합계	0.095	3516

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분포는 〈부표 2〉에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읍면동별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22년 모두 경기도 서남부(안산·시흥·화성), 김포, 포천, 서울 서남권(영등포구 대림, 구로구 일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상위권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일부 동(洞)의 순위가 바뀌거나 새롭게 진입한 사례(구로2동 등)도 나타나 이미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 더 다양해지고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김포 대곶면, 화성 양감면·팔탄면, 포천 가산면 등은 2018년과 2022년 모두 10위 내에 포함되어, 농공단지나 농촌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자 등이 밀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경기	김포시	대곶면	0.690	경기	안산단원구	원곡동	0.735
2	경기	안산시	원곡동	0.683	경기	김포시	대곶면	0.688
3	경기	화성시	양감면	0.677	경기	안산단원구	선부2동	0.673
4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59	경기	시흥시	정왕1동	0.665
5	경기	포천시	가산면	0.647	경기	화성시	양감면	0.653
6	경기	화성시	팔탄면	0.630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50
7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628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0.644
8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0.628	경기	화성시	팔탄면	0.621
9	경기	시흥시	정왕1동	0.614	경기	포천시	가산면	0.612
10	경기	안산시	선부2동	0.609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611

주: 외국인만으로 계산한 다양성 지수는 〈부표 3〉에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읍면동별 하위 지역을 살펴보면, 두 시점 모두 외곽·산간·도서지역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경남 고성군 영현면(지수 0), 충남 계룡시 신도 안면(0.001),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0.005) 등 산간·농촌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인천 옹진군 북도면처럼 도서 지역도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한 지역적 특징을 가진다.

〈표 3-5〉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경남	고성군	영현면	0.000	경남	고성군	영현면	0.000
2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0.001	강원	삼척시	노곡면	0.003
3	부산	금정구	금성동	0.002	전남	보성군	옹치면	0.004
4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0.005	대구	달서구	유천동	0.004
5	경북	청도군	운문면	0.005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0.005
6	인천	옹진군	북도면	0.008	세종	세종	해밀동	0.006
7	대구	수성구	황금1동	0.008	부산	금정구	금성동	0.006
8	강원	삼척시	노곡면	0.009	강원	춘천시	남면	0.008
9	강원	춘천시	남면	0.009	대전	유성구	상대동	0.008
10	서울	송파구	오륜동	0.010	강원	태백시	철암동	0.008

주: 외국인만으로 계산한 다양성 지수는 〈부표 4〉에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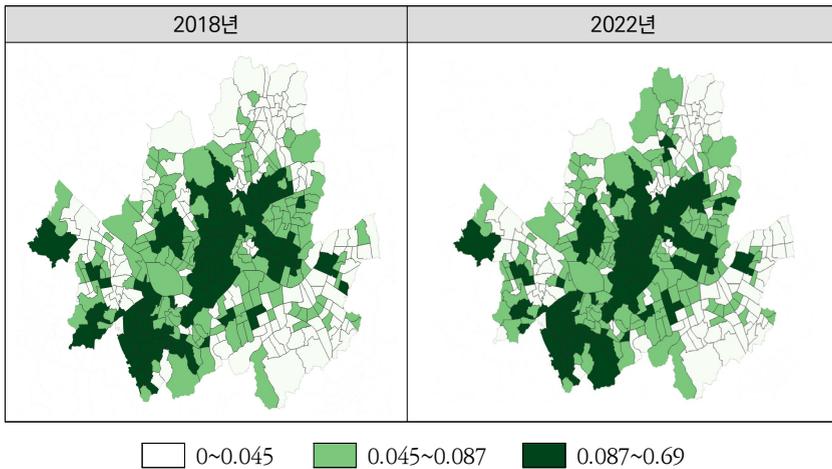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동 지역이 밀집된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살펴본다. 서울 특별시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를 살펴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서울 전역에서 인구다양성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특정 구(區)에 국한되지 않고 도심·북부·동부·서남권 등에서 이주민 비중이 늘어났다. 기존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구로·영등포·금천·관악 등 서남권 일대가 2018년에도 인구다양성이 높았고, 2022년에는 범위가 더

넓어지거나 인구다양성 지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제조업·서비스업 일자리, 저렴한 주거환경, 다문화 커뮤니티가 발달하여 외국인 밀집도가 계속 상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북부·동부 지역에서도 상승 추세가 나타났는데, 용산·성동·동대문·중랑 등지의 공단·봉제산업, 대학가·학원가나 종교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에 새로운 국적의 이주민이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3-4]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서울특별시(201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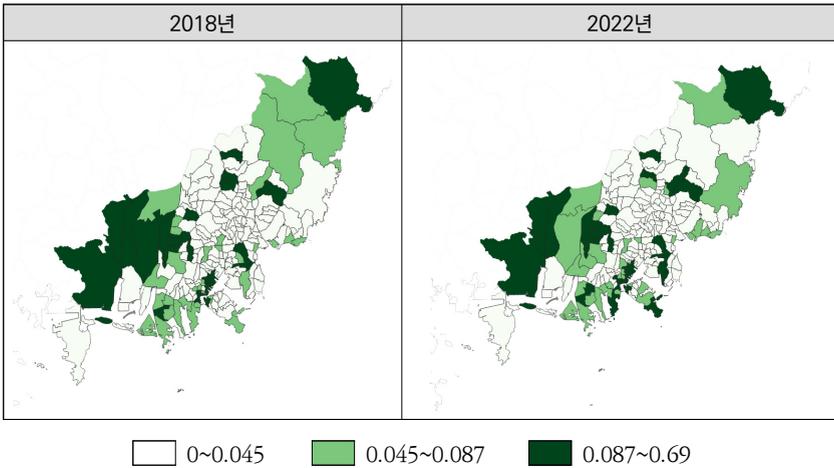


주: 서울시 지역의 상위 읍면동 지역은 <부표 5>에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산광역시에서도 2018년 대비 2022년의 인구다양성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거나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하구·사상구·강서구 등 서북 및 서남권은 전통적으로 제조업·물류 단지, 항만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비교적 주거비용이 낮아 이주민의 비중이 높았으며, 2022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강서구(에코델타시티 등 신개발지)나 사하구 일부(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나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

젊은 세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구 등이 유입되어 인구다양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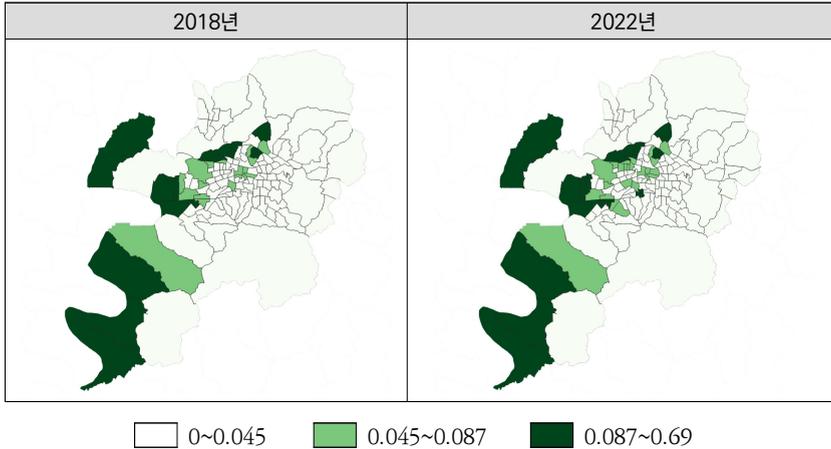
[그림 3-5]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부산광역시(2018, 2022)



주: 부산시 지역의 상위 읍면동 지역은 <부표 6>에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대구광역시의 인구다양성 지수는 전반적으로서 남부 지역(달성군 일대)에서 높고, 동부권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달성군 일대는 2018년에도 인구다양성 지수가 이미 상당히 높았고, 2022년에는 산업단지·공장 밀집 지역 및 신규 주택 개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이주민 등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로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도심 일부 지역에서 인구다양성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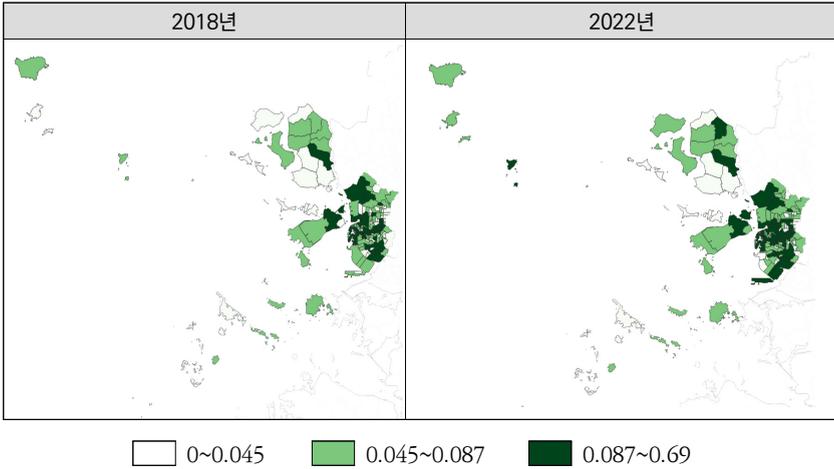
[그림 3-6]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대구광역시(2018, 2022)



주: 대구시 지역의 상위 읍면동 지역은 <부표 7>에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인천광역시는 전반적으로 군 지역에서 인구다양성 지수가 낮지만, 공항, 항만 주변에서는 높은 다양성을 보인다. 영종도(중구 영종·운서동 일대), 송도(연수구 일대), 청라지구 등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에서 인구다양성이 높는데, 이들 지역은 국제업무지구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의 유입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항만·물류산업이 발달한 남항·북항 인근(중구, 동구, 서구 일부)에서도 인구다양성 지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등 기존 도시 중심부는 2018년에 중간 또는 하위 분위였으나, 2022년에는 중·상위 분위로 변화한 지역들이 있다. 이는 대학가(인하대, 가톨릭대 등), 산업단지(부평공단, 남동공단), 구도심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구 구성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천 북서부·서쪽에 위치한 강화군과 옹진군(백령도·대청도 등 섬 지역) 등 군지역은 2018년 대비 2022년에 색이 짙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인구다양성이 낮다.

[그림 3-7]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인천광역시 (201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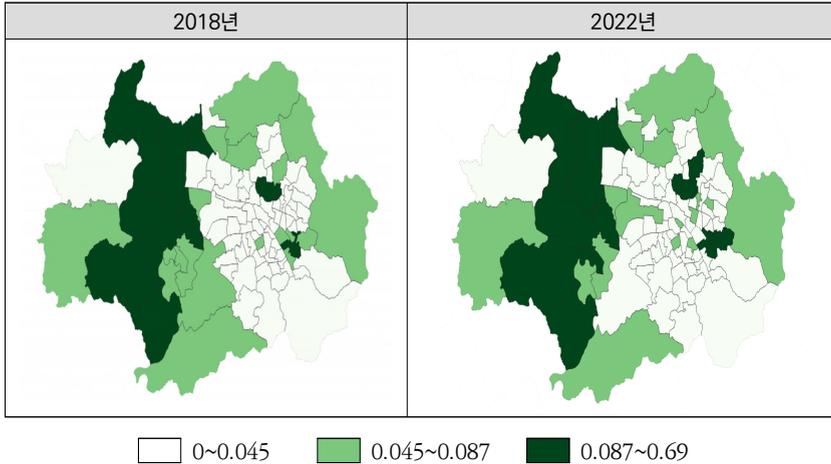


주: 인천시 지역의 상위 읍면동 지역은 <부표 8>에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광주광역시는 서부지역인 광산구가 2018년에도 이미 인구다양성이 높았으나 2022년에는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산업단지(하남·진곡 등)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가정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이며, 전통적으로 고려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 특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다양한 국적과 연령·계층의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동구나 남구, 북구 중심부(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은 2018년에는 중간 또는 밝은 녹색(하위) 분위였으나, 2022년에 한 단계 높은 분위로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64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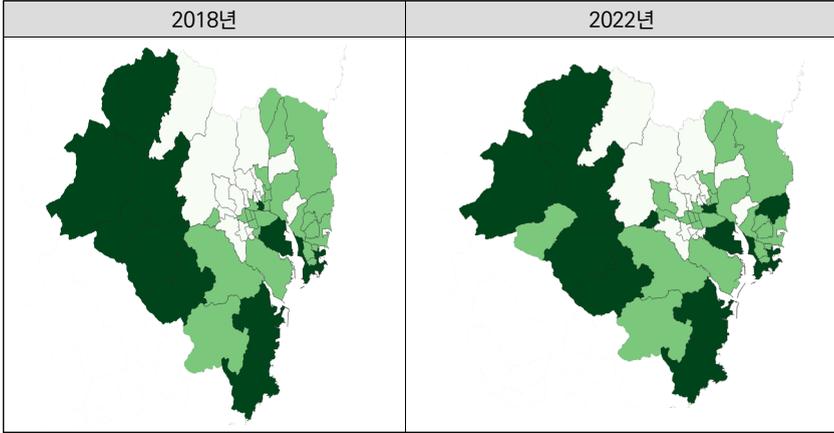
[그림 3-8]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광주광역시(2018, 2022)



주: 광주시 지역의 상위 읍면동 지역은 <부표 9>에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울산광역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 젊은 생산인구, 이주민 가정 등이 꾸준히 유입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서부·남서부 지역(울주군 일대)은 농공단지나 대단위 공장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지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배경의 인구가 집적되면서 인구다양성 지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구·남구·동구 등 시내 중심이나 동쪽 해안에 위치한 지역은 대체로 2018년 대비 2022년에 소폭 상승하거나 유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해양산업이 위치한 동구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어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편중도가 아직 크지 않아 지수 상승이 서부만큼 높지 않다.

[그림 3-9]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울산광역시 (201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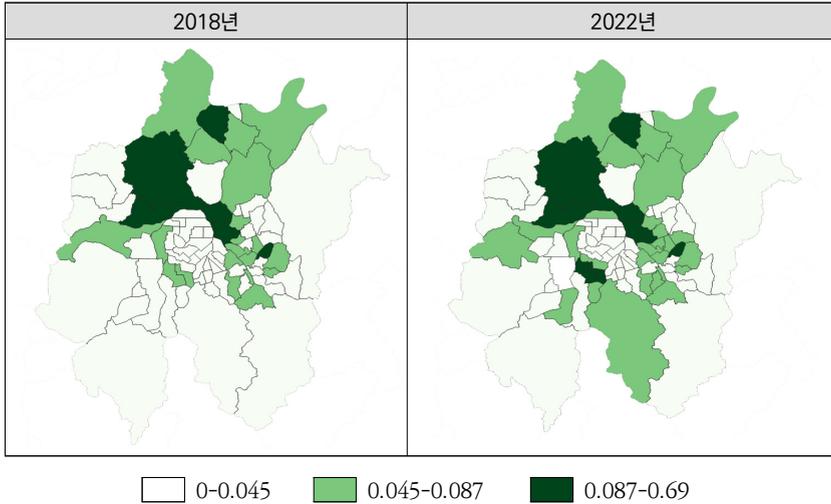


□ 0~0.045    ■ 0.045~0.087    ■ 0.087~0.69

주: 울산시 지역의 상위 읍면동 지역은 <부표 10>에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대전광역시의 서북부에 해당하는 유성구·대덕구 일대는 2018년에도 이미 높은 인구다양성을 보였고, 2022년에는 인구다양성이 높은 지역의 범위가 다소 확장되었다. 유성구는 KAIST, 충남대학교 등 대학·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외국인 유학생, 연구원,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대덕구는 산업단지(대덕연구개발특구 포함)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 중심부(중구, 서구 일부)와 남부 구역은 2018년에는 하위 분위였지만, 2022년에는 중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도심재개발, 교통 인프라 개선, 상업·문화시설 확충 등에 따라, 외국인 인구가 서서히 유입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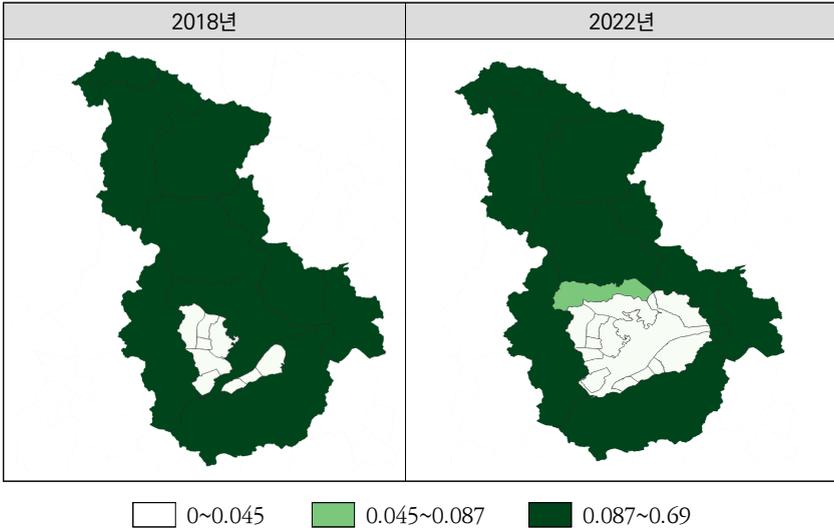
[그림 3-10]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대전광역시(2018, 2022)



주: 대전시 지역의 상위 읍면동 지역은 <부표 11>에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복합중심 지역인 동 지역을 둘러싼 외곽 지역에서 인구다양성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정면이 지속적으로 인구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체로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가족이 대거 이주하면서 행정복합도시 지역은 인구의 동질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곽지역에서는 산업단지 및 농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대체로 다양성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

[그림 3-11]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세종특별자치시 (201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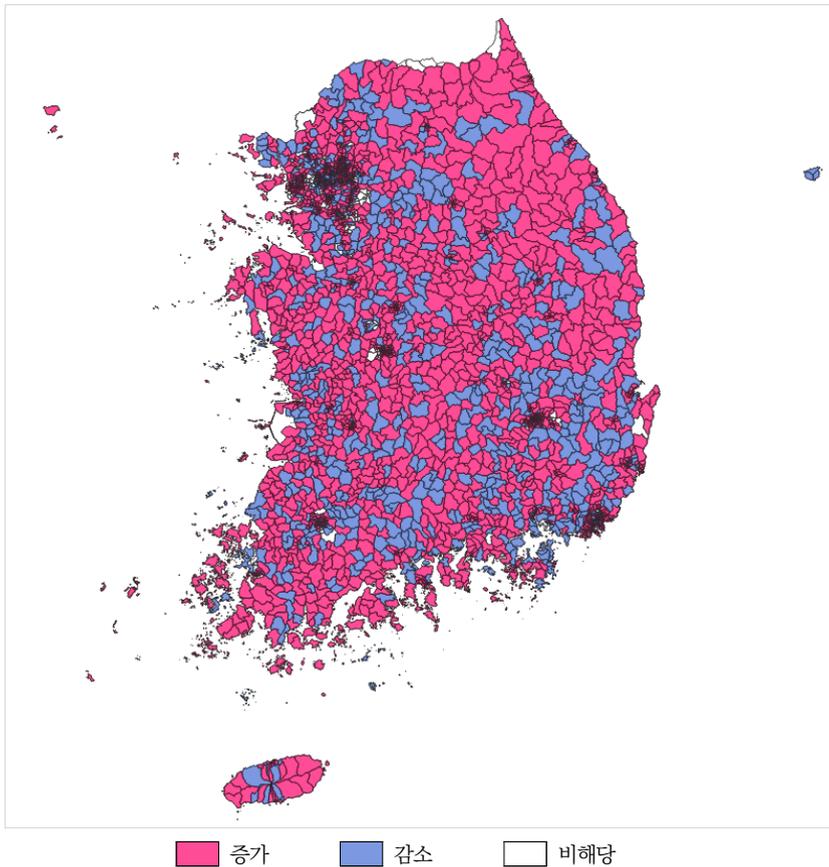
주: 세종시 지역의 상위 읍면동 지역은 <부표 12>에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대비 2022년 지수의 변화량을 추적하였다. 변화량은 두 시점 모두 유효한 관측치가 있는 경우만 계산하였으며, 두 시점 사이에 읍면동이 통합/분리되어 동일한 행정구역 단위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경우, 지도에서 ‘비해당’ 지역으로 표기하였다. [그림 3-12]는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증감 지역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3-13]은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량 상위 및 하위 지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3-12]에서 제시되듯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다양성 지수는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인구다양성이 감소하였는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해남군 등 전라남도 서부 해안 및 도

서 지역,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산간 농촌 지역, 그리고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등 산간 지역에서 인구다양성이 감소하였다. 또한,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등 경상북도 내륙 산간 및 동부 일부 지역도 인구다양성이 감소하였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두드러지며, 외국인 인구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2]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증감 지역 구분(201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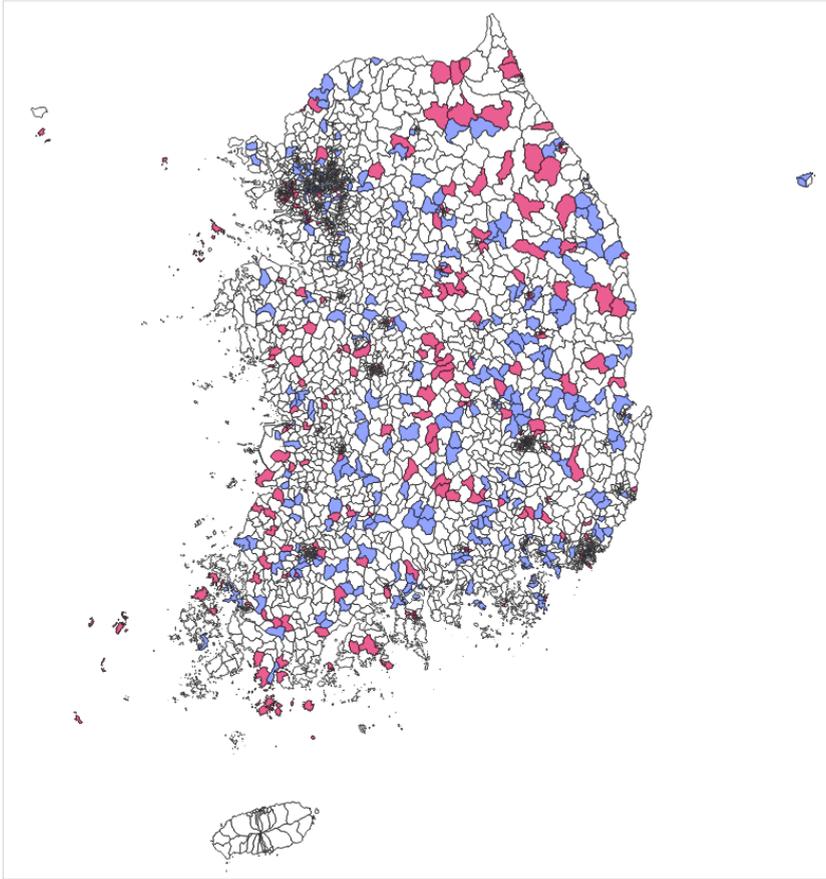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그림 3-13]는 2018년 대비 증감량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지도에서 행정구별 구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일부, 김포시 등 경기도 지역에서 인구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과 부산 중구·남구 및 광주 동구·광산구처럼 관광·상업이 발달한 도심권에선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구가 활발히 유입돼 다양성이 크게 높아졌다. 강원도에서는 태백시 및 삼척시의 산간 및 탄광촌 지역에서 석탄 산업 쇠퇴로 인구가 급감·고령층 위주만 남으면서 다양성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라도 지역에서는 농어촌 고령화·인구 유출이 심한 곳에서 인구다양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교통·산업 여건이 열악한 시골면 단위에서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외국인도 적어, 남은 인구 구조가 고령층 토착인구 위주로 고착화되어 다양성 지수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70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그림 3-13]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량 상위 및 하위지역(2018, 2022)



■ 증가 상위 10%    ■ 감소 하위 10%    □ 비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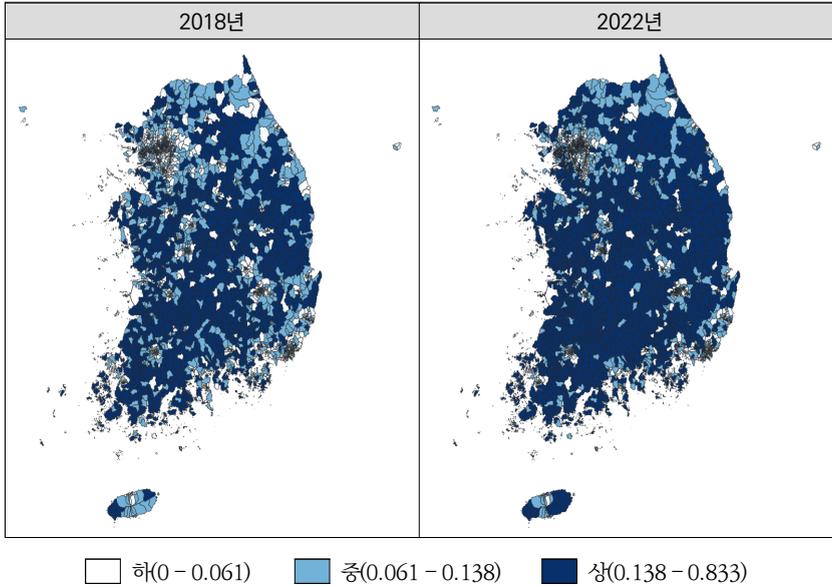
주: 상위 10% 경계값: 38.649814, 하위 10% 경계값: -12.306546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 2. 아동과 성인의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아동(18세 이하)과 성인(19세 이상)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인구다양성을 살펴본다. 18세 이하 아동 인구의 다문화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산출한 다양성 지수는 [그림 3-14]와 같다. 2018년에 비해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인구다양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단지나 대도시 주변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중되는 지역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정착이 잦은 농어촌에서도 아동 인구의 인구다양성이 높아진 지역이 늘어났다. 수도권 대도시 내부(서울 도심, 경기 일부 신도시)는 대학·직장 등 성인 외국인이 주류를 차지해 아동 지수와 큰 차이가 없는 지역도 있으나, 대도시 외곽의 정주 도시(예: 경기 남부, 인천 외곽 등)에서는 아동의 인구다양성이 빠르게 증가해 앞에서 제시한 전체 연령의 인구다양성 지수와는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그림 3-2]에서는 수도권 대도시(서울 강서구, 영등포구 등)나 경기권(안산, 시흥, 평택 등), 그리고 공업단지가 몰린 충남·경남 등 공단·도시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몰리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아동 인구에서는 도시 외곽의 단독주택 지역이나 농촌 이주민이 많은 읍·면에서 다양성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체류하면서 가족을 형성·정착하는 경우가 도시의 원룸촌이나 공단 인근보다 농촌·외곽 생활권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전북, 충남 등 농촌·어촌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의 비중이 증가해 2018년에는 인구다양성이 낮았던 읍면이 2022년에는 ‘중위’ 또는 ‘상위’로 증가하였다.

[그림 3-14] 18세 이하 아동의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상위 지역이 1,167곳이었으나, 2022년에는 1,676곳으로 약 500곳 이상 늘어났다. 전남·경북처럼 기존의 상위권 지역은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는데, 이는 수도권(특히 경기)과 다른 시도에서 상위 지역이 급증해 상대적으로 분포가 분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부산·대구·인천 등 광역시와 세종·울산에서도 상위 지역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 농어촌, 공단 중심에서 관광·서비스업·신도시 등으로 다문화 인구가 전국화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2022년에는 상위 지역의 비중도 증가하고, 지역 간 분포도 더 다양해져 농어촌·공단 중심의 집중 현상에서 벗어나 수도권 전역, 기타 광역시, 중소도시까지 전국적으로 인구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6〉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2018년			2022년		
	시도	상위 읍면동 수	비율	시도	상위 읍면동 수	비율
1	전라남도	185	15.9	전라남도	227	13.5
2	경상북도	172	14.7	경상북도	218	13.0
3	경상남도	140	12.0	경기도	204	12.2
4	전라북도	134	11.5	경상남도	186	11.1
5	경기도	126	10.8	전라북도	168	10.0
6	충청남도	120	10.3	충청남도	156	9.3
7	충청북도	75	6.4	서울특별시	123	7.3
8	서울특별시	72	6.2	충청북도	101	6.0
9	강원도	58	5.0	강원도	87	5.2
10	인천광역시	32	2.7	인천광역시	69	4.1
11	부산광역시	13	1.1	부산광역시	38	2.3
12	대구광역시	9	0.8	대구광역시	26	1.6
13	광주광역시	8	0.7	대전광역시	20	1.2
14	세종특별자치시	7	0.6	광주광역시	16	1.0
15	제주특별자치도	6	0.5	제주특별자치도	16	1.0
16	대전광역시	5	0.4	울산광역시	11	0.7
17	울산광역시	5	0.4	세종특별자치시	10	0.6
	합계	1,167	100.0	합계	1,676	100.0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전체 읍면동 지수에 대하여 시도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2018년(0.124) 대비 2022년(0.169) 다양성 지수는 약 0.045p 상승했다. 두 시점 모두 농어촌·중소도시가 많은 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양성 지수가 높았다. 2018년보다 2022년에 인천광역시(0.096→0.148), 경기도(0.099→0.137), 서울특별시(0.097→0.13)의 수도권 지역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과거에는 농촌·공단 지역에서만 이주민 증가가 두드러졌다면, 최근에는 수도권 도시 전역 및 주변으로도 다문화 인구가 확대되는 추세가

74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지역(공단, 농촌)에만 몰리는 단계를 지나 전국에서 인구다양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광역시나 수도권 주변에서도 다문화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지수 평균이 크게 상승하였다.

〈표 3-7〉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2018년			2022년		
	시도	평균	N	시도	평균	N
1	전라남도	0.188	297	전라남도	0.247	297
2	전라북도	0.175	243	충청남도	0.231	208
3	경상북도	0.171	332	전라북도	0.228	243
4	충청남도	0.169	207	경상북도	0.225	330
5	충청북도	0.151	153	충청북도	0.220	153
6	경상남도	0.146	308	경상남도	0.196	305
7	강원도	0.116	188	강원도	0.157	188
8	경기도	0.099	561	인천광역시	0.148	155
9	서울특별시	0.097	424	경기도	0.137	564
10	인천광역시	0.096	151	제주특별자치도	0.131	43
11	세종특별자치시	0.096	19	서울특별시	0.130	426
12	제주특별자치도	0.091	43	세종특별자치시	0.121	22
13	광주광역시	0.076	95	울산광역시	0.102	56
14	울산광역시	0.074	56	광주광역시	0.098	97
15	대전광역시	0.066	79	부산광역시	0.096	205
16	부산광역시	0.065	206	대전광역시	0.096	82
17	대구광역시	0.061	139	대구광역시	0.093	142
	합계	0.124	3501	합계	0.169	3,516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2018년 안산시 원곡동의 지수가 0.833에서 2022년에 0.853으로 오르는 등, 상위권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지수가 높아졌다. 선부2동, 대림2동, 정왕본동에서도 인구다양성 지수가 증가하여 외국인·이주배경 인구

가 더 다양해지고, 밀집도 역시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표에 없었던 인천 연수구 연수1동, 경북 경주시 성건동이 2022년에 상위권으로 새롭게 진입하였다. 2018년 상위 10위 안에 있던 전남 강진군 옴천면(0.525), 경북 의성군 신평면(0.5) 등 농촌지역은 2022년에는 TOP10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2022년 8위로 경주시 성건동이 들어온 사례처럼, 지방 중소도시가 새롭게 상위권에 진입하였다. 이는 농촌지역 일부에서 이농가구 증가에 따라 인구다양성 지수가 높아졌으나, 수도권·중소도시의 지수 상승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표 3-8〉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경기	안산시	원곡동	0.833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0.853
2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93	경기	안산 단원구	선부2동	0.789
3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0.637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734
4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621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0.727
5	경기	안산시	선부2동	0.585	인천	연수구	연수1동	0.720
6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0.579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707
7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541	경기	시흥시	정왕1동	0.690
8	전남	강진군	옴천면	0.525	경북	경주시	성건동	0.689
9	경기	수원시	고등동	0.503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0.671
10	경북	의성군	신평면	0.500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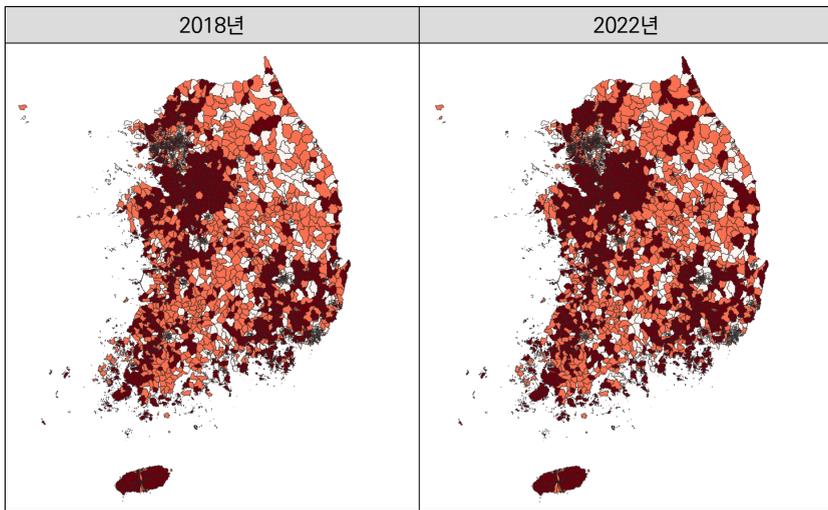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19세 이상 성인 인구의 인구다양성 지수는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다양성 지수(그림 3-2)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특히 서울, 인천, 경기 남부)과 주요 광역시(부산·대구·광주 등), 충청·전라·경상권의 공단 인근 지역은 인구다양성이 높아졌다. 제조

76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업·물류업 등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성인 이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시흥·평택, 충남 아산·당진, 경남 창원·김해 등지에서 성인 인구의 인구다양성이 특히 높았다. 대도시 권역에서도 직장·대학원 유학생, 단기 취업자 등이 몰려 아동보다는 성인의 인구다양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예: 서울 영등포구, 부산 사하구, 사상구, 대구 달서구 등). 공단 지역 중에는 기숙사 생활로 가족 동반율이 낮은 곳이 많아 아동 다양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3-15] 19세 이상 성인의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주: □ 하(0~0.04)    ■ 중(0.04~0.079)    ■ 상(0.079~0.707)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읍면동 지역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2018년과 2022년 모두 경기도 8개 기초지자체가 상위권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2개 기초지자체가 상위

10위권 내에 있다. 동 지수에서 2018년에는 김포시가 1위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안산시가 1위를 기록하였다.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한 계단씩 순위가 내려왔으나 두 개 연도 모두 10위권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9〉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경기	김포시	대곶면	0.707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0.716
2	경기	화성시	양감면	0.688	경기	김포시	대곶면	0.693
3	경기	포천시	가산면	0.666	경기	화성시	양감면	0.658
4	경기	안산시	원곡동	0.664	경기	시흥시	정왕1동	0.657
5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46	경기	안산 단원구	선부2동	0.646
6	경기	화성시	팔탄면	0.646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41
7	경기	시흥시	정왕1동	0.625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0.630
8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0.620	경기	화성시	팔탄면	0.628
9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620	경기	포천시	가산면	0.618
10	경기	안산시	선부2동	0.612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605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19세 이상 다문화 및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다양성 지수가 0.079 이상 인 읍면동이 많은 순으로 시도 순위를 부여하면 2018년, 2022년 모두 경기도가 1위, 서울특별시가 2위이며, 2018년은 대전광역시, 2022년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체 읍면동 지수에 대하여 시도별 평균값을 계산하고 순위를 부여하면 2018년에는 경기도가 1위, 2022년에는 충청남도가 1위이며, 2018년과 2022년 모두 대구광역시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8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표 3-10〉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2018년			2022년		
	시도 구분	상위 읍면동 수	비율	시도	상위 읍면동 수	비율
1	경기도	261	22.4	경기도	258	20.4
2	서울특별시	143	12.3	서울특별시	146	11.5
3	경상남도	131	11.2	경상남도	138	10.9
4	충청남도	116	9.9	충청남도	138	10.9
5	전라남도	111	9.5	전라남도	126	9.9
6	경상북도	85	7.3	경상북도	96	7.6
7	전라북도	71	6.1	전라북도	81	6.4
8	인천광역시	54	4.6	인천광역시	63	5.0
9	충청북도	49	4.2	충청북도	56	4.4
10	부산광역시	34	2.9	부산광역시	37	2.9
11	제주특별자치도	28	2.4	강원도	33	2.6
12	강원도	25	2.1	제주특별자치도	27	2.1
13	대구광역시	15	1.3	대구광역시	18	1.4
14	울산광역시	15	1.3	광주광역시	16	1.3
15	광주광역시	12	1.0	울산광역시	15	1.2
16	세종특별자치시	10	0.9	대전광역시	10	0.8
17	대전광역시	7	0.6	세종특별자치시	9	0.7
	합계	1,167	100.0	합계	1,267	100.0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표 3-11〉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2018년			2022년		
	시도 구분	평균	N	시도 구분	평균	N
1	경기도	0.122	561	충청남도	0.123	208
2	충청남도	0.116	207	경기도	0.118	564
3	제주특별자치도	0.112	43	제주특별자치도	0.112	43
4	서울특별시	0.100	424	서울특별시	0.097	426
5	경상남도	0.094	308	경상남도	0.095	305
6	세종특별자치시	0.091	19	충청북도	0.095	153
7	충청북도	0.089	153	인천광역시	0.091	155
8	인천광역시	0.082	151	전라남도	0.084	297
9	전라남도	0.077	297	세종특별자치시	0.077	22
10	울산광역시	0.073	56	전라북도	0.076	243
11	경상북도	0.072	332	경상북도	0.075	330
12	전라북도	0.071	243	울산광역시	0.070	56
13	광주광역시	0.055	95	강원도	0.060	188
14	강원도	0.054	188	광주광역시	0.060	97
15	부산광역시	0.049	206	부산광역시	0.051	205
16	대전광역시	0.043	79	대전광역시	0.047	82
17	대구광역시	0.042	139	대구광역시	0.045	142
	합계	0.085	3,501	합계	0.087	3,516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 제3절 이주배경 인구의 국적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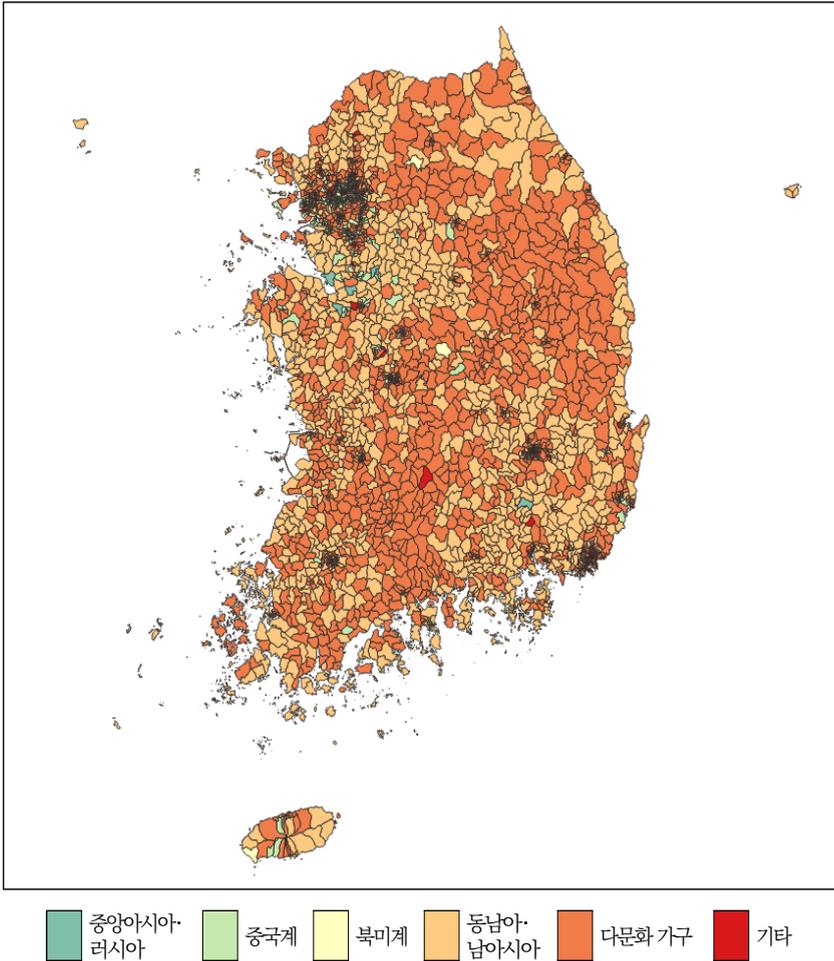
이주배경 인구를 국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국적에 따라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중국계 국적, 중앙아시아 국적, 북미계 국적, 기타 국적 등 몇 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권역에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되며, 중국계 국적으로는 중국, 대만, 중국(한국계), 홍콩 등이 해당된다. 중앙아시아 국적 권역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묶이고, 북미계 국적은 캐나다와 미국 출신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일본, 그 밖의 국적은 기타 국적으로 분류한다.

현재 읍면동별로 다문화 가구의 출신 국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귀화(국적 취득)하거나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다문화 가구(다문화 가구 대상자의 자녀 포함)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 가구를 별도로 분석하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혹은 결혼이민자 집단은 별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22년 기준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구와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적과 중국계 국적 분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남아시아 국적이 전국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하며,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 이주나 산업 현장의 노동 수요가 활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 특히 서울·인천·경기 일대는 중국계 국적이 많이 보이는데, 화교나 조선족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자영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한미군 기지 주변

(평택, 동두천 등)이나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 지역(북미계 국적) 출신 외국인이 주도적이며, 중앙아시아 국적 출신은 제조업 공단이 밀집한 지역(안산, 시흥, 창원 등)에 비교적 모여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6] 전국 최다 국적 분포(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다문화 가구를 제외하면, 경기도는 중국계 국적과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비중이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는 중국계 국적 비중이 가장 높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는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3,516개 지역 중 다문화 가구가 1,965곳으로 가장 많고(약 56%), 그다음은 동남아·남아시아 국적이 1,027곳(약 29%)을 차지한다. 중국계 국적은 415곳, 북미계 국적 53곳, 중앙아시아 국적 29곳, 기타 국적 27곳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로써 전국적으로는 다문화 가구가 가장 골고루 혹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주배경 인구 중 다문화 가구가 가장 큰 규모를 보이지만,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서는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집단이 더 많은 읍면동에서 최다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305개 읍면동 중 163곳에서 동남아·남아시아 국적이 최다 인구 집단을 이루고, 134곳에서 다문화 가구가 가장 많다. 충청남도 또한 총 208개 읍면동 중 110곳이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75곳이 다문화 가구로 나타난다. 반면, 서울특별시의 426개 지역 중 200곳이 다문화 가구, 166곳이 중국계 국적으로 분포되어 다문화 가구와 중국계 국적이 두드러지며, 경기도의 564개 지역 중에는 다문화 가구(278곳), 중국계 국적(133곳), 동남아·남아시아 국적(132곳) 세 집단이 주를 이룬다. 이 밖에 북미계 국적·중앙아시아 국적·기타 국적이 최다 집단인 지역은 많지 않으나, 특정 산업단지나 미군기지 주변에서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3-12〉 2022년 시·도별 이주배경 인구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국적별 읍면동 현황

(단위: 개)

구분	중앙아시아	중국계	북미계	동남아	다문화	기타	전체
강원도	4	1	1	56	126	0	188
경기도	6	133	10	132	278	5	564
경상남도	3	2	0	163	134	3	305
경상북도	2	1	0	130	196	1	330
광주광역시	3	4	0	19	71	0	97
대구광역시	0	6	1	26	109	0	142
대전광역시	0	2	2	12	66	0	82
부산광역시	0	4	2	47	151	1	205
서울특별시	3	166	33	13	200	11	426
세종특별자치시	0	3	0	8	9	2	22
울산광역시	0	9	0	12	35	0	56
인천광역시	1	39	2	23	87	3	155
전라남도	2	2	0	133	160	0	297
전라북도	1	3	0	79	160	0	243
제주특별자치도	0	9	1	12	21	0	43
충청남도	2	20	0	110	75	1	208
충청북도	2	11	1	52	87	0	153
전체	29	415	53	1,027	1,965	27	3,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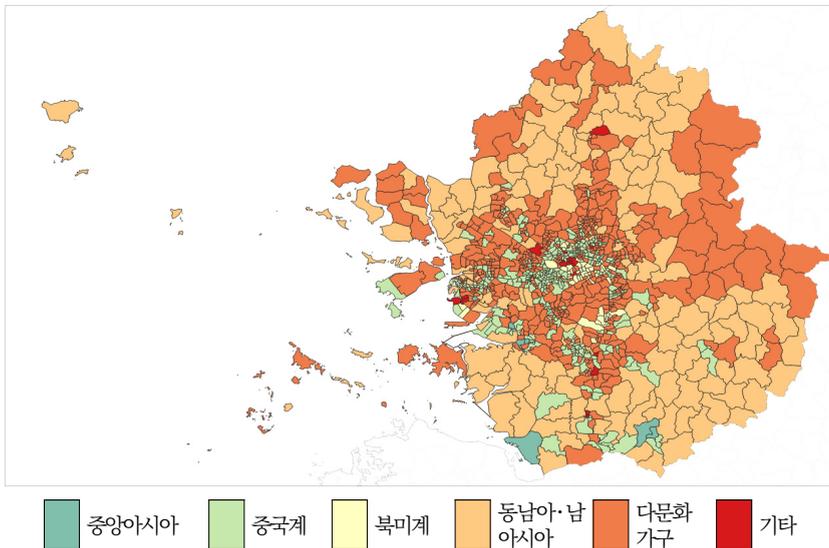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수도권 지역은 전국에서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읍면동 별로 다양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도심권에서는 중국계, 공단이나 상업지역 주변에서는 중앙아시아 국적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도시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은 동남아·남아시아 국적과 다문화 가구가 이주배경 인구 중 가장 높게 제시되었다. 또한 안산·시흥 등 산업단지 인근에는 중앙아시아 국적, 중국계 국적, 동남아·남아시아 국적이 다양하게 최다 국적으로 나타나며, 미군 기지 주변(평택, 동두천 등)에서는 북미계 국적이 다수 국적으로 제시된다.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는 중국계

국적 거주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공단 지역(남동공단, 주안공단 등)에서는 중국계 국적, 중앙아시아 국적 등 국적 분포가 다양하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남권(영등포·구로·금천 주변)은 중국계 국적 비중이 높았다. 특히 대림동과 구로공단 인근은 중국계 국적(조선족 포함),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중앙아시아 국적 등 다양한 국적이 섞여 있으나, 그중 중국계 국적이 가장 많은 동(洞)도 존재한다. 경기 동·북부(양평, 가평, 포천, 연천 등)는 인구밀도가 낮고 농업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동남아·남아시아 국적이 최다인 읍면동이 다수를 이루며, 다문화 가구(결혼이민자)가 최대 분포를 이루는 곳이 많다. 경기 남부(안산·시흥·평택 등)에서는 안산·시흥의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에 중앙아시아 국적 근로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구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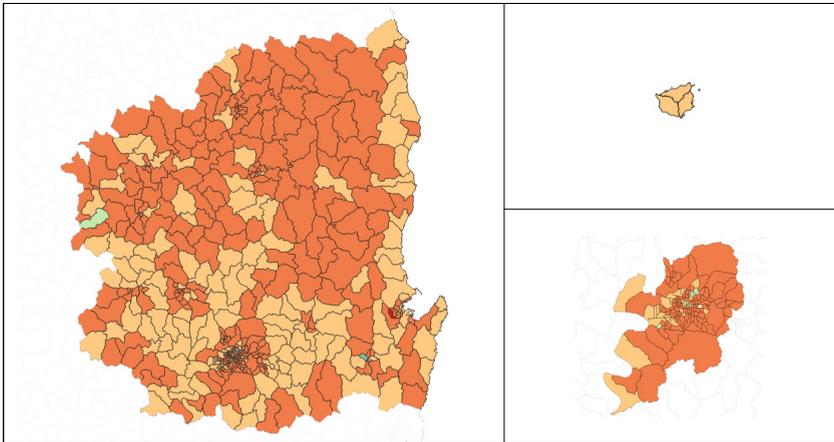
[그림 3-17] 서울, 경기 지역의 최대 국적 분포(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대구·경북 지역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다수 국적이 대체로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지역은 다문화 가구가 해당 지역에서 가장 다수인 이주배경 인구로 표시된다. 경북지역의 경우, 중앙아시아 국적이거나 중국계 국적으로 표시된 곳은 비교적 소수이지만, 특정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북미계 국적 또한 지도에서 드물게 보이며, 일부 지역에만 분포한다.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대구시 내에는 중앙아시아 국적이거나 중국계 국적 등이 나타난다. 즉, 대체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동남아·남아시아, 다문화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일부 도심 및 공단 지역에서 다수 국적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3-18] 대구, 경북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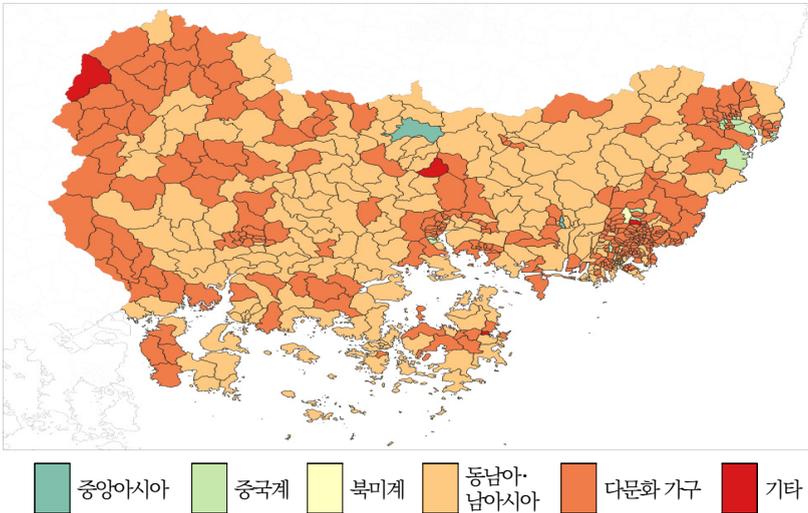


■ 중앙아시아 ■ 중국계 ■ 북미계 ■ 동남아·남아시아 ■ 다문화 가구 ■ 기타

주: 울릉도와 대구시는 별도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대도시(부산·울산 등)와 중공업·조선업 중심지(창원, 거제 등), 그리고 농어촌 지역(경남 서부·남해안 주변)의 특성이 서로 달라, 읍면동마다 국적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산 도심 및 항만 주변(원도심, 북항·남항 일대)은 항만물류와 관광업의 영향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데, 중국계 국적을 비롯해, 동남아·남아시아 국적의 비중이 높다. 울산은 대규모 자동차·조선·화학 공단이 밀집해 있어, 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중앙아시아 국적 거주자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창원·김해·거제·통영 일대에도 산업단지가 자리해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근로자들이 다수 분포한다. 경남 내륙 농어촌 지역(함안·합천·남해·하동 등)은 지역 내 농촌 인력이 부족해, 계절근로자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특정 읍·면에서 동남아·남아시아 국적의 거주 비중이 높게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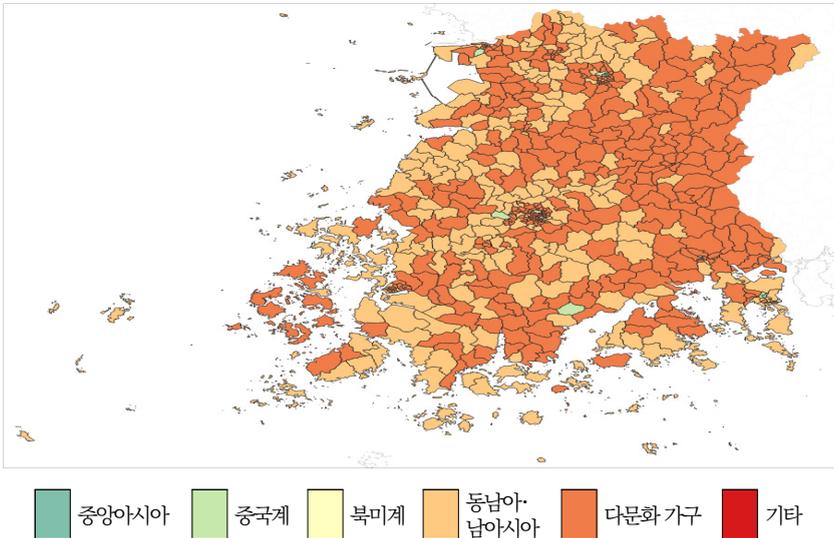
[그림 3-19]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전북·전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어업 비중이 높고, 동시에 군산·군장산단(전북), 여수·광양산단(전남) 등의 중화학공업 단지도 혼재되어 있어, 외국인 거주 형태가 ‘농어촌 지역 중심’과 ‘산업단지 주변’으로 크게 나뉘는 양상을 보인다. 전북 동부 내륙(남원·임실·장수 등)과 농촌·산간 지역 등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농촌 인력 수요로 인해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및 결혼이민 형태의 다문화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남 서부 해안·도서 지역(목포·신안·진도 등)은 어업·양식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높아, 어촌 마을 주변에 동남아·남아시아 국적의 거주 비중이 높다. 전북 중부(전주·익산·군산)는 일부 중국계 국적이 다수로 보이며, 목포는 서남권의 교통·물류 중심지이자 항만도시로, 중국계 국적이거나 다양한 국적의 선원·근로자들이 도시 주변에 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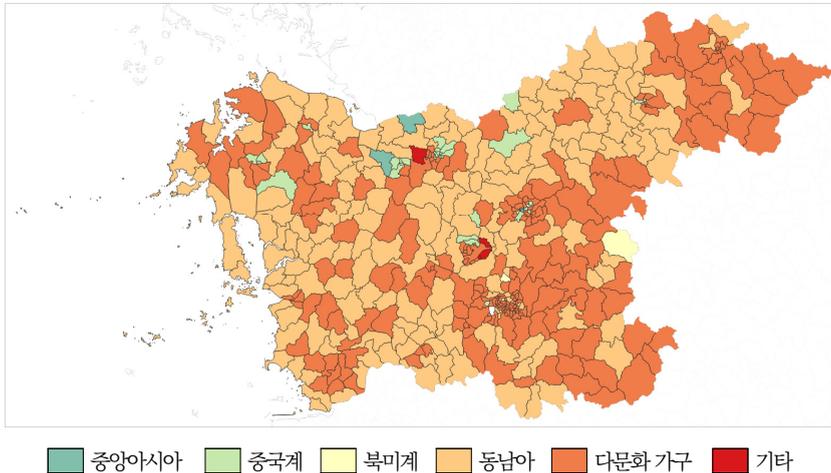
[그림 3-20] 전라권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연구·첨단산업 도시와 전통 농어촌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이주배경 인구 특성이 나타난다. 대전은 정부청사·연구단지·대학가 등이 밀집해 국적의 다양성이 높다. 충남 서북부(천안·아산 일대)는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중앙아시아 국적 근로자의 거주 비중이 높다. 충남 서해안(당진·서산·태안·보령 등) 및 항만·어업 지역은 제철·석유화학 등 중공업 설비와 항만시설이 있어, 중앙아시아 국적과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근로자가 집중된다. 홍성·예산·공주 등 대도시·산단에서 떨어진 충남 내륙 농촌 지역은 결혼 이민 형태와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농업 근로자의 거주 비중이 높다. 충북 중부(청주·오창·충주)는 반도체·바이오·화학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중앙아시아 국적 근로자의 거주 비중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

[그림 3-21] 충청권 지역의 최대 국적 분포(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 제4절 영유아의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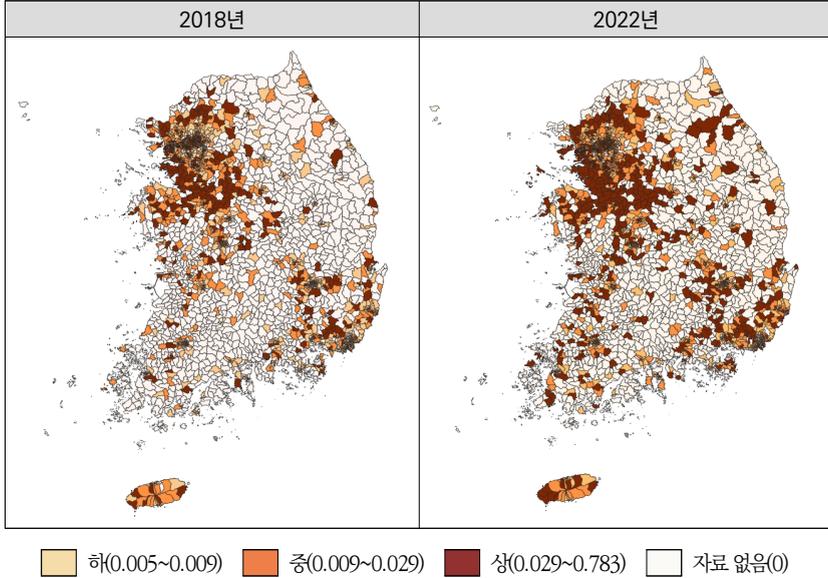
### 1. 영유아 인구의 인구다양성 지수

본 절에서는 2018년과 2022년의 6세 이하 이주배경(외국인) 영유아 수를 토대로 인구다양성 지수(Diversity Index)를 산출하고,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영유아의 인구다양성 지수는 해당 연령의 다문화 가구 영유아 수를 알 수 없어 6세 이하 외국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영유아 수가 '5명 미만'인 읍면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수가 0으로 표시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전체 인구 기준 인구다양성 지수와 마찬가지로 0보다 큰 값을 가진 읍면동만을 대상으로 1/3씩 나누어 3분위(상·중·하)로 구분함으로써 지도나 통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0값으로 처리된 지역은 '자료 없음'으로 지도에 제외 표시를 함으로써 인구다양성 지수가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지역만 분석의 범주로 삼았다.

[그림 3-22]는 2018년과 2022년 전국 읍면동 단위의 영유아 인구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인구다양성은 상승하였으며, 수도권과 광역시 인근을 중심으로 이미 2018년에도 높은 지수를 보여 왔던 지역들이 2022년에는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표 3-13>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영유아 인구의 인구다양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대부분 서울·경기·인천지역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외곽 지역에서도 중간 수준으로 인구다양성이 증가한 읍면동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뿐 아니라 전남 및 전북, 강원도의 농어촌 지역이나 관광지에서도 인구다양성이 확대되었다.

90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그림 3-22]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표 3-13>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08	인천	연수구	연수1동	0.764
2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59	광주	광산구	월곡2동	0.626
3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0.563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04
4	서울	중구	소공동	0.55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603
5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531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0.583
6	인천	연수구	연수1동	0.475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0.582
7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0.447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581
8	서울	용산구	한남동	0.43	경기	평택시	신장2동	0.569
9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0.425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0.555
10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0.416	경기	안산시	이동	0.53

주: 최대값부터 순서대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2022년의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읍면동별 분포를 2018년과 비교하면, <표 3-14>와 <표 3-15>와 같다. <표 3-14>에 따르면, ‘상위’ 읍면동의 수가 2018년 705개에서 2022년 1,042개로 크게 늘어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인접 지역까지 영유아 인구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경기도(210개→251개)와 서울특별시(180개→218개) 등 수도권은 ‘상위’ 읍면동 수 자체는 증가했으나 비중은 소폭 하락했다. 이는 부산·울산·대구를 비롯해 강원·충청권, 그리고 경남·경북 일부 지역 등에서 새로운 상위 진입 지역이 늘어나 전반적인 분포가 보다 고르게 확산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4>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2018년			2022년		
	시도	상위 읍면동 수	비율	시도	상위 읍면동 수	비율
1	경기도	210	29.8	경기도	251	24.1
2	서울특별시	180	25.5	서울특별시	218	20.9
3	인천광역시	63	8.9	인천광역시	86	8.3
4	충청남도	53	7.5	충청남도	77	7.4
5	경상남도	37	5.2	경상남도	71	6.8
6	경상북도	27	3.8	충청북도	45	4.3
7	충청북도	25	3.5	경상북도	44	4.2
8	부산광역시	22	3.1	부산광역시	40	3.8
9	대구광역시	16	2.3	전라북도	39	3.7
10	광주광역시	12	1.7	전라남도	34	3.3
11	전라북도	12	1.7	대구광역시	32	3.1
12	전라남도	11	1.6	강원도	30	2.9
13	강원도	9	1.3	광주광역시	19	1.8
14	대전광역시	8	1.1	대전광역시	19	1.8
15	울산광역시	8	1.1	울산광역시	16	1.5
16	제주특별자치도	8	1.1	제주특별자치도	14	1.3
17	세종특별자치시	4	0.6	세종특별자치시	7	0.7
	합계	705	100.0	합계	1042	100.0

주: 평균은 지수가 0 초과인 읍면동만 대상으로 계산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한편, <표 3-15>에서는 2018년 0.0419였던 전국 평균 지수가 2022년 0.0609로 상승했으며, 대부분 시·도의 평균값 또한 함께 높아졌다. 특히 인천광역시(0.0495→0.0902)와 충청남도(0.0506→0.0863)는 상승 폭이 두드러졌고, 경기도 역시 0.0573에서 0.0780으로 올라 전국 평균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서울특별시 또한 0.0618에서 0.0733으로 상승해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도는 반면,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영유아 인구의 인구다양성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2018년			2022년		
	시도	평균	N	시도	평균	N
1	서울특별시	.0618	411	인천광역시	.0902	133
2	경기도	.0573	493	충청남도	.0863	117
3	충청남도	.0506	115	경기도	.0780	505
4	인천광역시	.0495	131	충청북도	.0755	85
5	충청북도	.0364	71	서울특별시	.0733	415
6	경상남도	.0290	126	경상남도	.0522	146
7	경상북도	.0283	109	경상북도	.0520	124
8	제주특별자치도	.0269	35	광주광역시	.0461	67
9	광주광역시	.0256	63	세종특별자치시	.0417	15
10	전라북도	.0221	82	전라북도	.0404	99
11	울산광역시	.0220	50	제주특별자치도	.0395	38
12	대구광역시	.0214	93	전라남도	.0380	87
13	강원도	.0193	57	대구광역시	.0357	105
14	전라남도	.0192	61	강원도	.0318	80
15	부산광역시	.0177	150	부산광역시	.0302	143
16	세종특별자치시	.0174	13	울산광역시	.0300	52
17	대전광역시	.0167	63	대전광역시	.0264	68
	합계	.0419	2,123	합계	.0609	2,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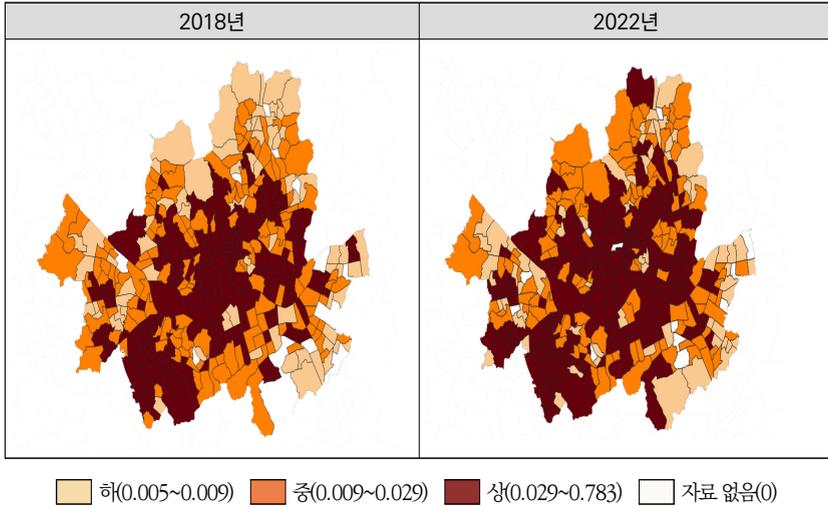
주: 평균은 지수가 0 초과인 읍면동만 대상으로 계산함.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그림 3-23]은 서울시의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서울시의 인구다양성 지수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외국인 거주가 활발했던 서남권(구로구·금천구·관악구·영등포구 일대)을 중심으로 '상위' 지수를 나타내는 지역들이 확대되었다. 2018년을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도 이미 서남권 일부 자치구와 도심(중구·용산구 등) 지역이 높은 지수를 보인다. 2022년으로 가면 서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다양성 지수가 높게 유지되는 동시에, 그 인접 동(洞)으로 확산되었다. 구로구·금천구 인접 지역 내에서도 2018년에는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에 속하거나 '0값' 처리된 동이 2022년에는 '상위' 또는 '중상위' 수준으로 이동한 사례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 영등포구 등 이주배경 인구 유입이 꾸준한 지역은 2022년에 이르러 상위 지수인 동의 분포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도심 지역(중구·용산구)도 상위 분류가 유지되거나 일부 동은 이전보다 더욱 높은 분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관찰된다. 반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동남권'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2018년보다 지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서남권·도심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다양성이 낮아 지역 간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 북부 지역(예: 성북구·도봉구·노원구 일부)에서도 2018년에 비해 증가한 동이 확인된다. 이전에는 5인 미만이라 지수가 0이거나 중위 이하였던 지역들에서 다문화·외국인 영유아 인구가 늘어나며 인구다양성 지수가 가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지도에서는 '상위' 분위 지역이 더욱 확대되고, 중상위 수준 이상의 동 분포 또한 시전역으로 확산된 모습이 두드러져, 서울시 내 영유아의 인구다양성이 점차 공간적으로 넓게 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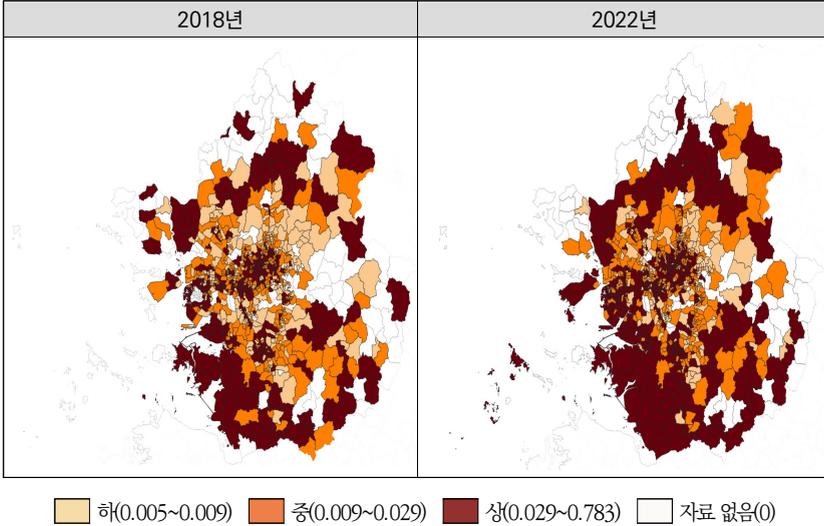
[그림 3-23]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서울특별시(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2018년 대비 ‘중상위’나 ‘상위’ 지역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이미 외국인 거주가 활발했던 서남부(예: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등)의 인구다양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수원·용인·광명·부천·김포 지역에서도 인구다양성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는데, 서울 인접 지역을 넘어 비교적 외곽에 위치한 읍면동까지 영유아의 인구다양성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파주·고양·남양주 등 경기 북부·동부 지역 중 일부에서도 2018년 ‘하위’로 분류되었던 읍면동이 2022년에는 ‘중위’로 전환해 수도권 전역에서 인구다양성의 공간적 범위가 한층 넓어졌음을 보여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8년에도 비교적 지수가 높았던 지역(연수구·남동구·부평구 일부 등)이 2022년 들어 다수의 동(洞)에서 인구다양성이 증가했으며, 외곽·인접 지역(서구·계양구 일부)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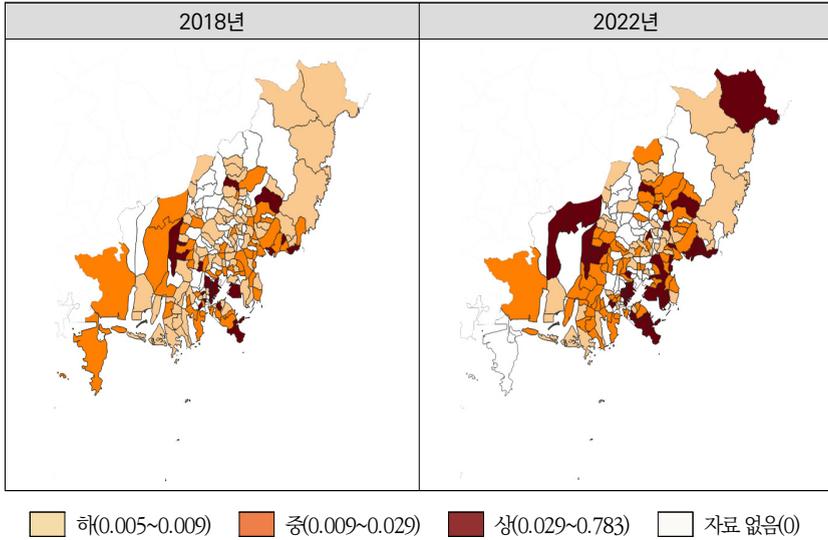
[그림 3-24]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수도권(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산광역시를 살펴보면 2018년에도 이미 외국인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서·남부권(예: 사하구, 사상구 일대)과 부산 도심부 일부 지역에서 영유아의 인구다양성 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2022년에는 이들 ‘상위’ 지역이 유지·확대되는 것은 물론, 북부나 동부 외곽 지역(예: 북구·금정구·기장군 일부 등)에서도 지수 상승이 확인된다. 2018년 지도를 보면, 서부권(사하구, 사상구 등)을 중심으로 인구다양성이 확대되었고, 해운대나 수영구, 남구 등 동부·남부권 일부 동에서도 ‘중상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이들 지역의 지수 상승이 뚜렷해졌으며, 주변 동이나 북부·외곽 지역(특히 금정구·기장군 등) 역시 지수가 상승하였다. 또한, 부산 도심 및 서부권의 외국인 유동 인구가 도심 바깥 지역으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북구·금정구 일부 등이 2018년 대비 뚜렷하게 지수가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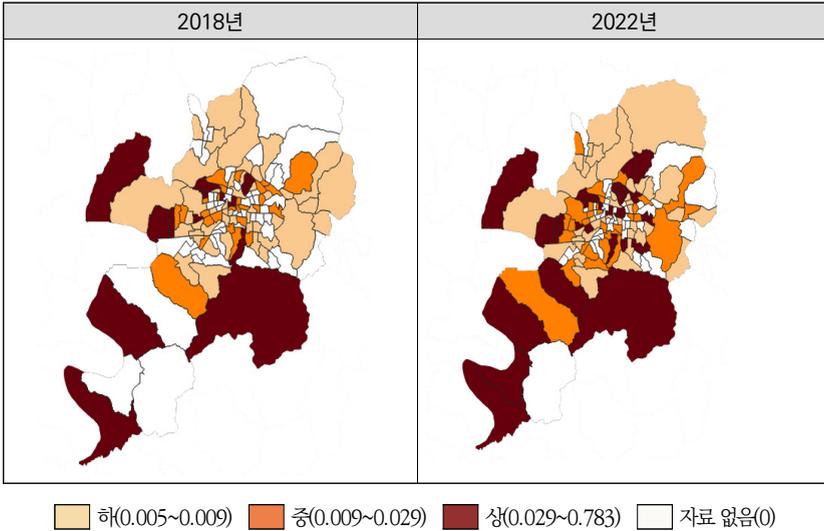
[그림 3-25]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부산광역시(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대구광역시에에서도 2018년에 높은 지수를 보이던 읍면동에서 2022년에 그 범위와 수준이 한층 증가된 모습이 관찰된다. 남서부(달성군, 달서구 일부 등)와 북서부 일부 지역은 2018년에도 ‘상위’ 분위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나 외국인 근로자 집거지 등이 분포해 외국인 거주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2022년으로 오면서 해당 권역 내에서 인구다양성이 증가하였다. 달성군 유가읍·화원읍 등지에서는 2018년에 ‘중간’에 가까웠던 일부 동이 2022년에는 짙은 상위나 중위로 지수가 상승하였으며, 달서구 서부·남부 일부 동에서도 지수가 높아졌다. 북구, 동구에서도 2018년에 비해 중상위 수준의 읍면동이 늘어나 외곽·인접 지역까지 인구다양성 지수가 확산된 모습을 보인다. 반면 도심 부(중구, 남구 일부)는 인구다양성의 수준과 변화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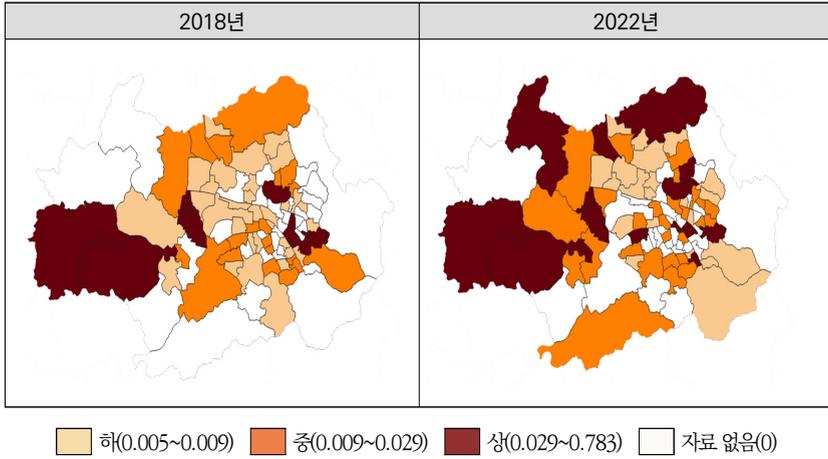
[그림 3-26]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대구광역시(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광주광역시는 2018년에는 광산구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일대는 공단·대학·공항 등이 인접하여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이미 2018년부터 이주배경 영유아가 상당수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광산구 서·남부 지역뿐 아니라 북부나 동쪽 일부 동(洞)에서도 인구다양성이 증가하였다. 반면 도심 중앙부(북구·서구·동구·남구 일부)에서는 여전히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동이 많아, 광산구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인구다양성이 낮다. 일부 지역은 2018년 기준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인구다양성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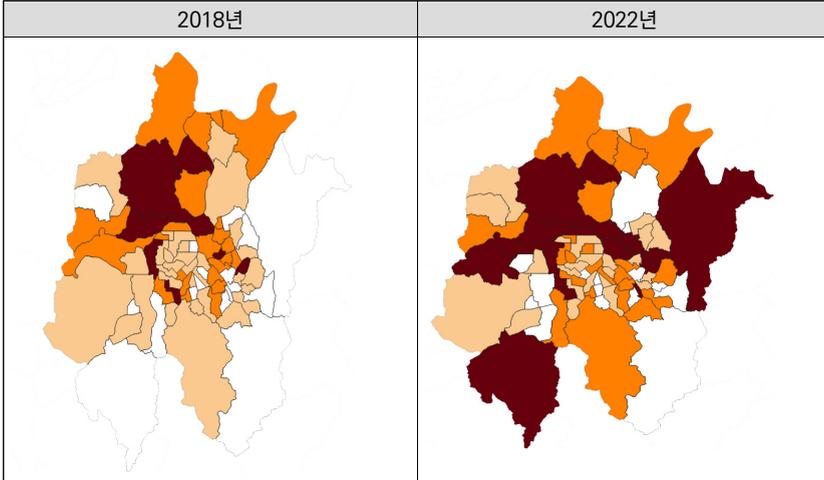
[그림 3-27]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광주광역시(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대전광역시의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는 2018년에는 도심 북부와 서부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그 외 지역은 주로 ‘중간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에는 북부, 서부 외곽의 인구다양성이 높은 지역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성구 북서부나 대덕구 일부 지역에서 2018년에는 하위로 분류되던 지역이 2022년 들어 중간 이상으로 분류되어 외국인 영유아의 거주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구·서구 등 도심 주변 동 가운데 일부도 2018년 대비 인구다양성이 증가하여 이주배경 영유아가 분포하는 공간적 범위가 도심 바깥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 전역을 놓고 보았을 때 여전히 광범위하게 ‘상위’ 지수를 보이는 지역은 수도권이나 부산·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이는 대전광역시 내 이주배경 영유아가 특정 지역(도심 외곽, 산업단지 주변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권역에 비해 분포가 다소 국지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림 3-28]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대전광역시(2018, 2022)



하(0.005~0.009)    중(0.009~0.029)    상(0.029~0.783)    자료 없음(0)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 2. 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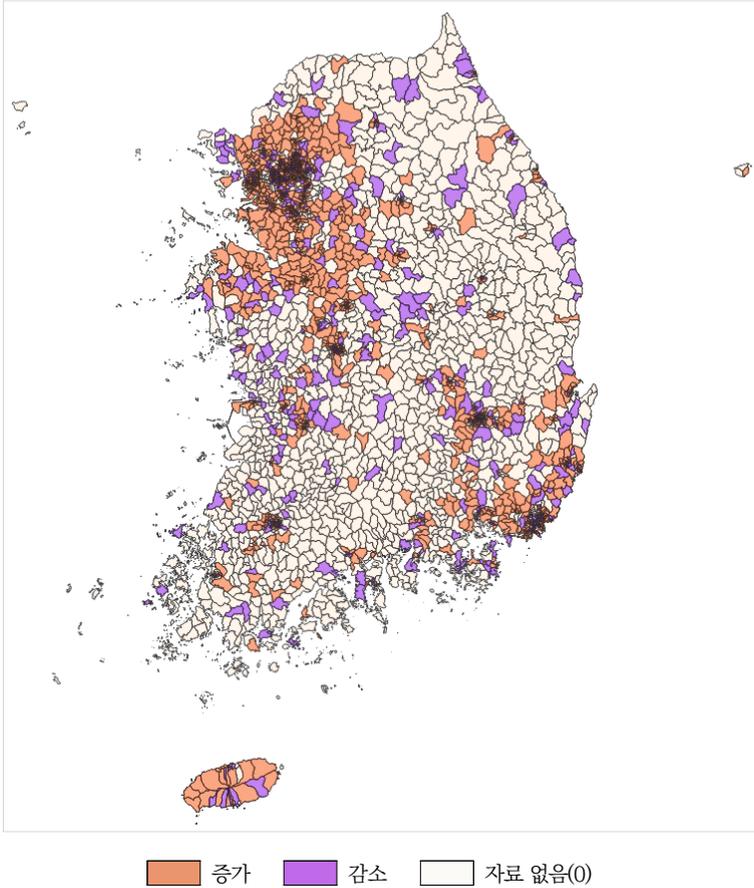
[그림 3-29]는 앞에서 살펴본 인구다양성 변화 양상을 종합한 결과로서 2018년 대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가 ‘증가’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을 제시하였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다양성이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안산·시흥·화성·평택(경기)이나 연수·남동·서구(인천), 부산·울산·대구 주변 지역 들에서도 인구다양성이 더 높아졌거나 인접 읍면동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울·인천에서 경기도 내외곽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전역, 그리고 경부축(대전-대구-부산) 인근 시군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나 결혼이민 경로가 주요 산업·교통 축을 따라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인력난 해소나 지역 활성화 정책 등으로 외국인 거주가 점차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영유아의 인구다양성 지수가 하락한 지역은 대도시 주변부 중 일부 동(洞)에서 이주배경 영유아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거나 산업 구조나 주거환경 변동 등으로 인구 이동 패턴이 달라진 지역들이다. 울산 중구 중앙동, 대전 서구 도마1동, 대구 중구 남산2동, 부산 영도구 봉래2동 등 도심에서도 영유아의 인구다양성 지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들 지역은 기존 외국인 집단이 교통·주거환경 등의 이유로 도심 외곽 혹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거나, 영유아가 초등생 이상으로 성장하며 통계상 6세 이하 집계에서 제외된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30]에서는 변동 폭이 특히 큰 상위 10%와 하위 10% 지역을 표시하였다. 2018년 대비 2022년에 영유아의 인구다양성 지수가 크게 오른 상위 10% 지역은 수도권이나 경부축(대전-대구-부산)을 따라 형성된 산업·교통 요충지 외에도, 동해안·남해안 일부 시·군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인구다양성 지수가 현저히 하락한 하위 10% 지역은 대도시 도심부나 주변 동 중 주거환경·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외국인 거주자 비중이 축소된 지역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울산 중구 중앙동, 대전 서구 도마1동, 대구 중구 남산2동, 부산 영도구 봉래2동 등과 같은 사례들이 전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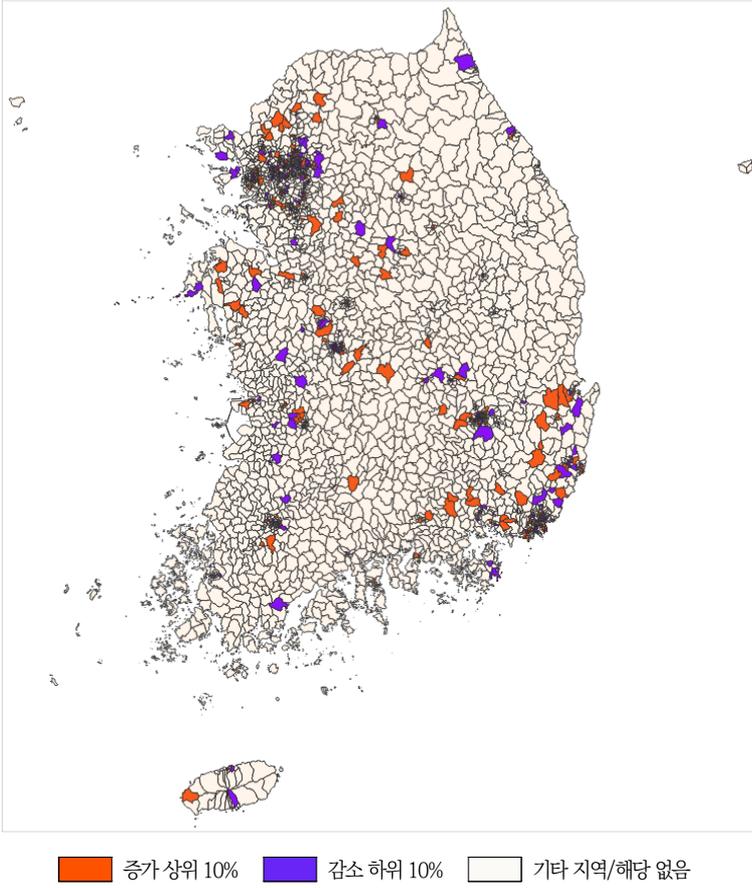
[그림 3-29]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증감 지역 구분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102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그림 3-30]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증가량 상위/하위 지역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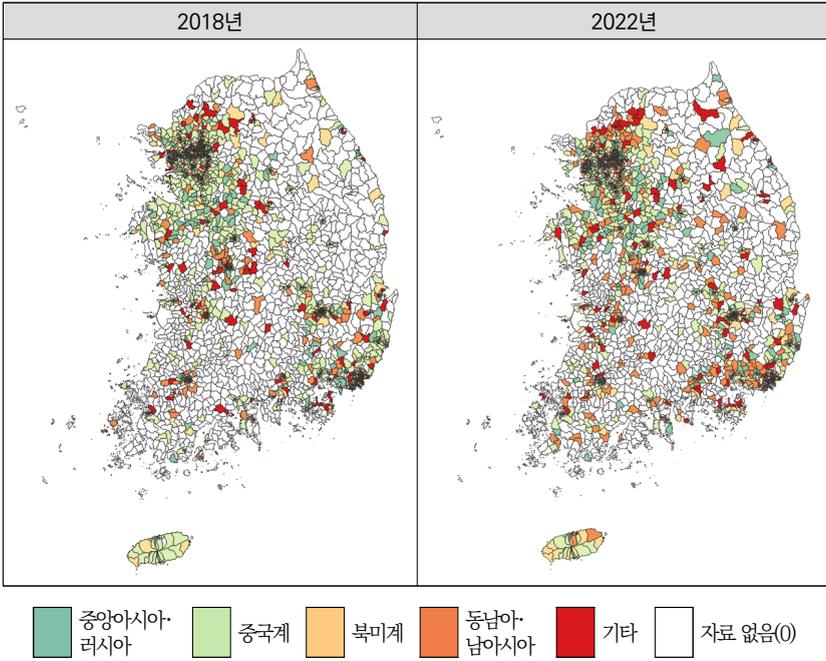
### 3. 국적별 분포

[그림 3-31]은 2018년과 2022년에 읍면동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국적을 표시한 것이다.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시·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는 중국계 이주민이나 동남아 출신 근로자가 거주하는 비중이 높는데, 영유아 인구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공단이나 제조업·서비스업 밀집지,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곳에서 중국계나 동남아 출신 가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농촌 지역에서는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영유아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의 2세, 혹은 외국인 계 절근로자 및 이주노동자 가정에서 출생한 영유아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북 김제·익산·군산, 전남 영암·나주·해남, 그리고 경북 일부 시·군(구미·영천 등) 같은 영농·공단 지역에서 이주배경 영유아가 크게 증가하였다. 충청권 농공단지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도 동남아·남아시아 출신 영유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와 함께 공단 지역(예: 충북 음성·진천, 경남 창원·함안, 전남 나주, 전북 김제, 경북 구미 등)에서는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및 러시아' 출신 영유아의 비율이 2018년보다 높아진 곳이 많다.

경남 창원(마산·진해)·김해·거제 등 제조업·조선업이 발달한 지역에는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국적 근로자가 많아, 이들 국적의 영유아 역시 높게 나타난다. 특히 김해 진영읍과 한림면 등지에서는 동남아·중앙아시아 가정이 상당한 비율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업이 회복되고 중국인 관광객 및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여전히 '중국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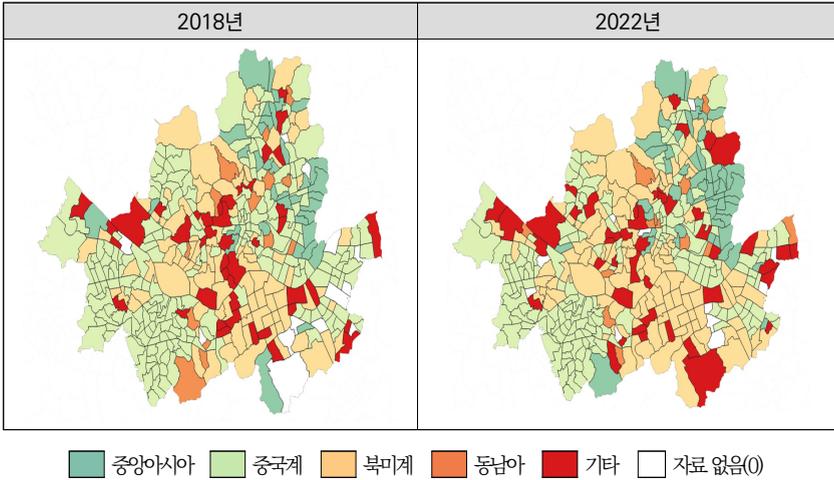
[그림 3-31] 외국인 영유아의 전국 최다 국적 분포(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서울특별시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출신 영유아는 성인과는 달리 서울시 내에서 최다 국적인 동이 거의 없었다. 반면,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나 구로구 일부 지역, 중구·동대문구 등 기존에 중국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도 중국계가 최다 국적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중앙아시아·러시아 출신 영유아는 서북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북미 지역 출신 국적이 최다인 동은 비교적 적으며, 주로 강남권이 나 외국인 거주 선호도가 높은 용산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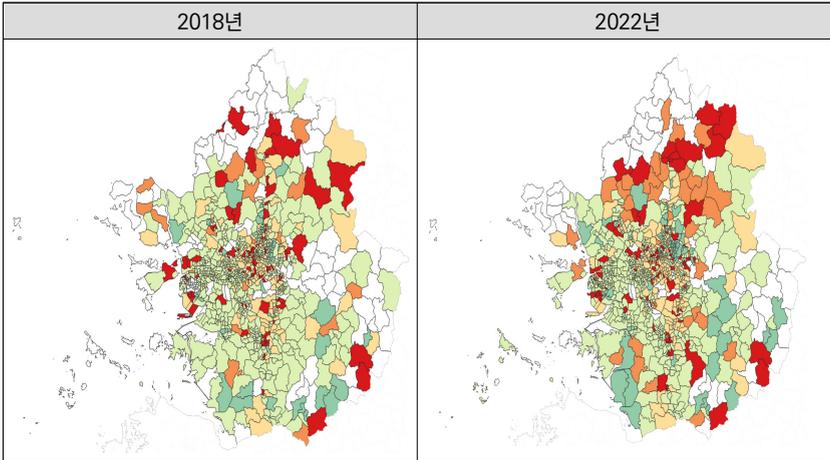
[그림 3-32] 외국인 영유아의 지역별 최다 국적 분포: 서울특별시(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면, 동남아와 남아시아 출신 영유아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2018년에 비해 증가했다. 파주시, 남양주시 등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영유아 연령층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계 거주 비율이 높았던 인천이나 안산 원곡동, 시흥 정왕동, 수원 매산·고등동, 김포시나 부천시 일대는 2022년에도 중국계 거주 비율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인천 미추홀구 주변이나 경기 북부 일부 도시 등에서는 중국계가 최다 국적인 동(洞)도 있으나, 전체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수도권에서 중앙아시아·러시아계는 특정 권역에 밀집하기보다는 도심과 외곽 여러 시군구에 분산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2018년에 비해 중국계 대신 ‘동남아·남아시아계’ 또는 ‘기타’가 최다 국적으로 바뀐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북미 출신이 최다 국적을 차지하는 읍면동은 서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대체로 인구다양성이 낮았다.

[그림 3-33]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수도권(201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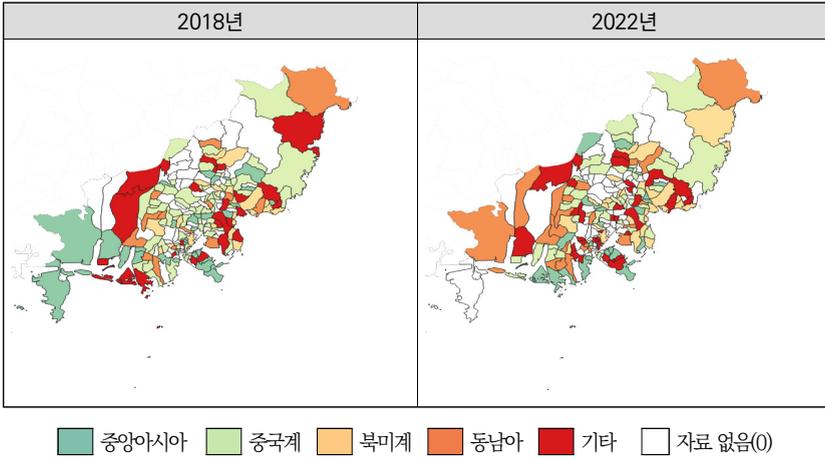


■ 중앙아시아 ■ 중국계 ■ 북미계 ■ 동남아 ■ 기타 □ 자료 없음(0)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산광역시의 경우 ‘동남아·남아시아계’ 및 ‘기타’가 최다 국적인 구·군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부산 서부(사상구·강서구 등)나 북부 일부(기장군)를 중심으로 동남아·남아시아계 영유아 비중이 증가했다. 2018년에 비해 2022년에는 ‘기타’로 분류되는 다국적 집단 또한 분포 범위가 확대되었다. 반면, 중구·동구·영도구 등 전통적으로 중국계가 다수 거주해 온 도심 지역에서는 중국계가 최다 국적을 유지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러시아계 출신은 특정 권역에 집중되기보다는 부산항 인접 지역이나 도심·외곽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나타났다. 북미 지역 출신이 최다 국적인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앞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구다양성이 낮은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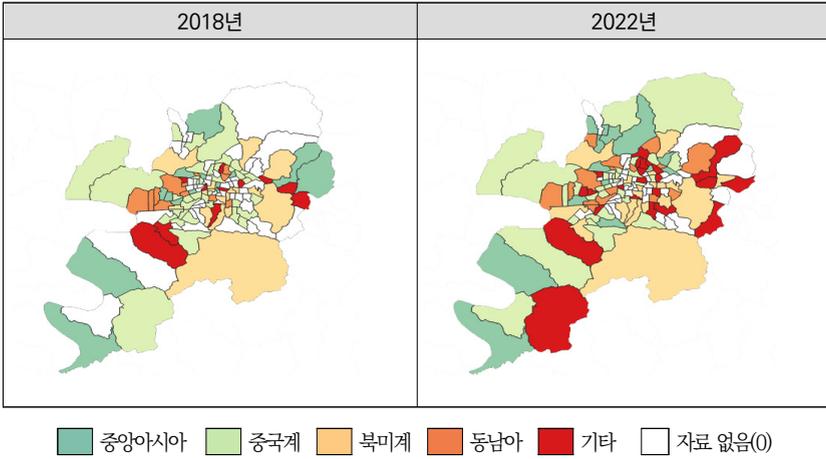
[그림 3-34]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부산광역시(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대구광역시의 외국인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계는 동구(신암동 등 구도심 일대), 달성군, 북구 일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동남아·남아시아계는 산업단지와 공단이 위치한 달서구 서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앙아시아·러시아계는 비교적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달성군 지역과 동구 일부, 달서구·달성군 외곽 지역에서는 중앙아시아·러시아 국적 영유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북미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영유아 수 자체가 적어 통계적으로 높게 보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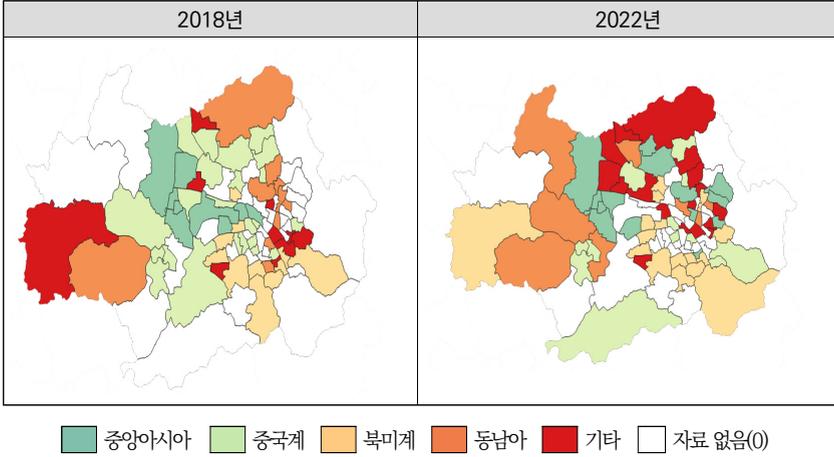
[그림 3-35]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대구광역시(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 11. 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광주광역시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중국계는 동구와 남구의 도심 일부, 그리고 북구 일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다. 북구나 서구의 일부 지역에서는 2018년에 중국계가 최다 국적이었던 곳이 2022년에는 동남아시아 국적으로 바뀌었다. 동남아·남아시아계는 광산구 북부(송정·월곡 인근)와 북구 외곽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서구 외곽과 광산구 전반으로 분포가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앙아시아·러시아계는 도심 주변(서구·남구 경계부, 북구 일부)이나 교통 요충지에서 간헐적인 분포를 나타낸다. 한편, 광주에서도 북미 지역 출신이 최다 국적인 등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적게 제시되었다. 이들 지역은 실제 인구다양성이 낮은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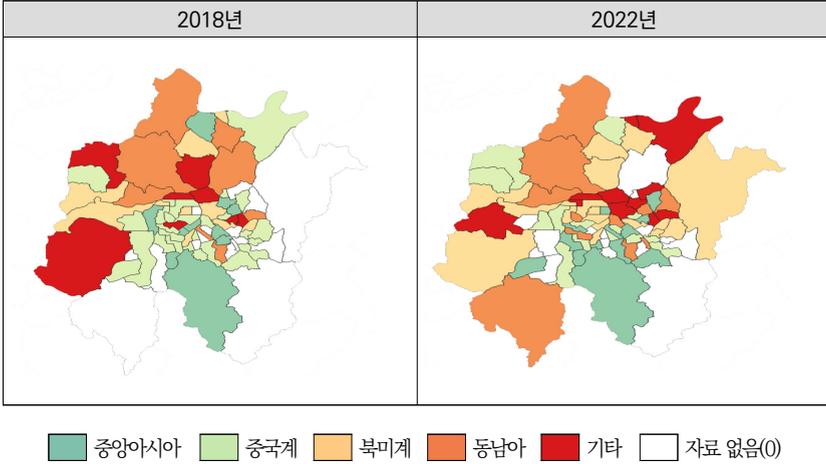
[그림 3-36]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광주광역시(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대전광역시의 경우, 중국계는 중구 일부 동(예: 은행동·선화동 일대)나 동구 구도심권(대동·홍도동·가양동 등), 대덕구 일부 동 등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여전히 중국계가 최다 국적으로 남아 있으나, 일부 지역은 다른 국적으로 변환되었다. 예컨대 대덕구(법동·송촌동 일대)나 동구의 일부 동은 2018년에 중국계가 우세했으나, 2022년에는 ‘기타’ 또는 동남아·남아시아계가 최다 국적으로 전환되었다. 동남아·남아시아 출신은 대덕구 북부나 서구 일부(도마동·정림동 주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거주가 많은 동에서 비중이 높았다. 2022년에는 유성구 북부, 대덕구 전반, 서구 남서부(관저·가수원·기성동 인근) 등으로 확대되었다. 중앙아시아·러시아계는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유성구(노은·전민동 등), 서구 둔산동 일대, 대덕구 동 일부 등으로 산재된 형태를 보인다.

[그림 3-37]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대전광역시(2018, 2022)



출처: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 제5절 소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다양성 지수는 전체 인구(+0.006 p), 만 18세 이하 아동(+0.045 p), 만 19세 이상 성인(+0.002 p), 영유아(+0.019 p)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수도권, 산업단지, 향만도시 등 일부 거점지역에 집중되었던 다양성이, 2022년에는 중소도시나 관광지 등 기존 비도시권까지 확산되면서, 상위 분위에 속한 읍면동은 전체 인구 기준 1,167곳에서 1,321곳으로, 영유아 기준 705곳에서 1,042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이미 인구다양성이 높았으나 이러한 경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충청, 전라, 강원 지역에서도 산업단지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남아시아계 이주민이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 내부의 동질화로 평균 지수가 하락했고, 부산, 울산, 경남은 조선·제조업 분야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영유아와 아동층의 지수 상승 폭이 성인보다 훨씬 가팔랐다. 이는 결혼이민과 가족 동반 체류의 결과로 보인다. 국적별로는 동남아·남아시아 출신이 전국적으로 가장 넓게 퍼져 농어촌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집단을 형성했고, 중국계는 수도권 서남부·인천 차이나타운·부산 원도심 등에 집중됐다. 중앙아시아·러시아계는 경기 남부와 경남 해안 지역 제조업 지대에서 급증했으며, 북미계와 기타 국적은 미군기지·대학·연구단지 주변에서 제한적으로 분포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도시, 산업단지, 농어촌의 다양성 양상이 서로 달라 교육·복지·정주 지원체계를 권역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특히 지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진 영유아·아동층을 대상으로 다문화 유아교육과 언어 지원, 보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산업단지 주변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주택·의료·통번역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이주배경 인구의 정착과 노동시장 안착을 돕는 핵심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주배경 인구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자원이 되고 있는 농어촌에서는 일자리·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합 설계해 지역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제4장

###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제1절 지역별 보육 수요와 이용률 변화

제2절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제3절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 제 4 장

#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 제1절 지역별 보육 수요와 이용률 변화

#### 1. 보육서비스 수요 및 이용률 현황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 요인으로 영유아 인구의 변화를 살펴본다. 2016년 전국 0~5세 영유아 인구는 약 264만 7천 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약 16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표 4-1>에 제시되듯, 2016년 기준 83.2%의 0~5세 영유아가 동(洞)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읍부 및 면부에 거주하는 아동은 각각 약 10%, 6% 수준이었다. 도시 지역으로의 집중은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8년에는 동부에 82.9%가 거주했으나 2023년에는 83.9%로 매년 조금씩 동부로의 집중도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주배경 영유아의 절대 수는 늘어나 전체 영유아 중 비중이 커졌다. 이주배경 영유아의 경우, 인구총조사에서 공개하는 연령 단위가 외국인인 5세 단위로 공개하고 있어 영유아 인구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의 변화 양상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가지므로 공개된 범주에서 통계를 살펴본다. 먼저, 외국인 0~4세 영유아는 <표 4-2>와 같다. 2015년 약 2만 3천 명에서 2019년 약 3만 9천 명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로는 감소세가 이어져 2023년에는 3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구 유입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읍부, 면부, 동부를 살펴 보면 모든 지역에서 2019년을 전후로 감소 전환이 뚜렷하며, 그 폭과 시점은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표 4-1〉 0~5세 영유아 인구 추이

(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전국	2,647,419	2,536,879	2,390,711	2,257,728
읍부	277,964 (10.5)	269,029 (10.6)	260,223 (10.9)	244,770 (10.8)
면부	166,910 (6.3)	165,767 (6.5)	147,787 (6.2)	137,939 (6.1)
동부	2,202,545 (83.2)	2,102,083 (82.9)	1,982,701 (82.9)	1,875,019 (83.0)
	2020	2021	2022	2023
전국	2,107,481	1,937,651	1,777,852	1,650,724
읍부	228,776 (10.9)	214,404 (11.1)	189,062 (10.6)	171,823 (10.4)
면부	127,957 (6.1)	113,376 (5.9)	100,430 (5.6)	93,310 (5.7)
동부	1,750,748 (83.1)	1,609,871 (83.1)	1,488,360 (83.7)	1,385,591 (83.9)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3, 영유아수별 가구 및 연령별 영유아 - 시도. (2025.02.2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C1601&conn\\_path=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C1601&conn_path=h=12) 에서 추출

〈표 4-2〉 0~4세 외국인 인구 추이

(단위: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23,273	25,775	27,022	32,275	39,818	37,164	34,205	33,269	30,374
읍부	1,576 (6.8)	1,910 (7.4)	2,135 (7.9)	2,735 (8.5)	3,721 (9.3)	3,613 (9.7)	3,757 (11.0)	3,756 (11.3)	3,682 (12.1)
면부	979 (4.2)	1,092 (4.2)	1,154 (4.3)	1,513 (4.7)	1,915 (4.8)	1,820 (4.9)	1,919 (5.6)	2,025 (6.1)	2,067 (6.8)
동부	20,718 (89.0)	22,773 (88.4)	23,733 (87.8)	28,027 (86.8)	34,182 (85.8)	31,731 (85.4)	28,529 (83.4)	27,488 (82.6)	24,625 (81.1)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3, 성 및 연령별 외국인 - 시도. (2025.02.2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A1502&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A1502&conn_path=12)에서 추출

결혼 및 귀화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 인구에 대한 통계는 0~5세 외국인 주민 추이를 살펴본다. 외국인 주민 자료는 연령별 시군구 자료가 공개된다. 다만, 외국인 주민은 다문화 가구를 대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 가구와는 차이가 있다. <표 4-3>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16년 약 8만 명에서 2022년 약 7만 2천 명까지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아동의 약 73.9%가 도시 지역인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였으나, 2022년에는 약 75.6%로 도시 지역 거주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 영유아는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읍부 및 면부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게 제시된다.

<표 4-3> 0~5세 외국인 주민 추이

(단위: 명,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80,020	78,798	81,288	79,974	79,108	74,731	71,877
농어촌	6589	6187	5963	5779	5557	5101	4735
	(8.2)	(7.9)	(7.3)	(7.2)	(7.0)	(6.8)	(6.6)
중소 도시	42,690	42,487	44,377	43,683	43,183	40,875	39,528
	(53.3)	(53.9)	(54.6)	(54.6)	(54.6)	(54.7)	(55.0)
대도시	16,437	16,449	17,312	16,711	16,159	15,275	14,836
	(20.5)	(20.9)	(21.3)	(20.9)	(20.4)	(20.4)	(20.6)

주: 국내 출생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이주배경 인구 중 결혼을 통해 형성된 이주배경 주민 자녀를 지칭함.

출처: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 2023, 시군구별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2025.02.2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25\\_A043\\_A&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25_A043_A&conn_path=I2)에서 추출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공급 요인으로 보육시설 수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14년 43,742개소에서 2023년 28,954개소로 33.8%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은 2014년 23,318개소에서 2023년 10,692개소로 54.1% 감소하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민간어린이집은 14,822개소에서 8,886개소로 40.0% 줄어, 가정어린이집 다음으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정부의 확충 정책에 힘입은 국공립어린이집은 2014년 2,489개소에서 2023년 6,187개소로 148.6% 증가하였다.

〈표 4-4〉 보육시설 변화 추이

(단위: 개)

	어린이집	가정	민간	국공립	유치원
2014	43,742	23,318	14,822	2,489	8,826
2015	42,517	22,074	14,626	2,629	8,930
2016	41,084	20,598	14,036	2,859	8,987
2017	40,238	19,656	14,045	3,157	9,029
2018	39,171	18,651	13,518	3,602	9,021
2019	37,317	17,117	12,568	4,324	8,837
2020	35,352	15,529	11,570	4,598	8,705
2021	33,246	13,891	10,603	5,327	8,660
2022	30,923	12,109	9,726	5,801	8,562
2023	28,954	10,692	8,886	6,187	8,441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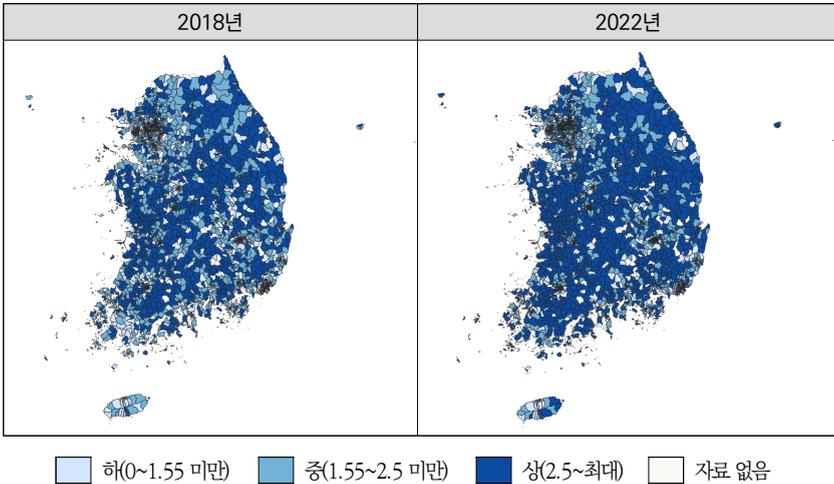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에서 추출

수요 대비 공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영유아 인구 수 대비 보육시설 수와 정원 수를 살펴본다. 영유아 인구 100명당 보육시설 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은 2018년 1.98개에서 2022년 2.18개로 늘었다. 대도시(특·광역시 등)는

1.78개에서 1.98개, 중소도시도 2.11개에서 2.26개로 증가하였으며, 농어촌은 2.18개에서 2.69개로 가장 크게 늘었다. [그림 4-5]에서 나타나듯,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서 2018년에 비해 2022년의 인구 대비 공급률이 더 높아졌다. 전체 어린이집 수 자체는 줄었어도, 영유아 수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100명당 환산치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원래도 인구밀도가 낮아 보육시설 1개당 영유아 수가 비교적 적었는데, 최근 영유아 수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면서 대도시보다 100명당 시설 수가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0~5세 영유아 인구 백 명당 보육시설 수

(단위: 개)



주: 자료 없음은 행정구역 변동으로 변화를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임.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2018, 2022).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120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표 4-5〉 0~5세 영유아 인구 백 명당 보육시설 수 변화(2018~2022)

(단위: 개)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98	2.00	1.94	2.13	2.18
대도시	1.78	1.80	1.77	1.93	1.98
중소도시	2.11	2.12	2.03	2.23	2.26
농어촌	2.18	2.25	2.29	2.52	2.69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2018, 2022).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영유아 인구 100명당 정원 수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보육시설 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전국 평균은 2018년 110명에서 2022년 128.6명으로 늘어났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가 낮은 지역이 2018년 대비 2022년에 확연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유형별로는 대도시는 106명에서 124.2명, 중소도시는 112.7명에서 130.8명, 농어촌은 113.5명에서 136.3명으로 모두 상승하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 대비 정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시설 정원이 소폭 감소했더라도 그 이상으로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6〉 0~5세 영유아 인구 백 명당 보육시설 정원 수 변화(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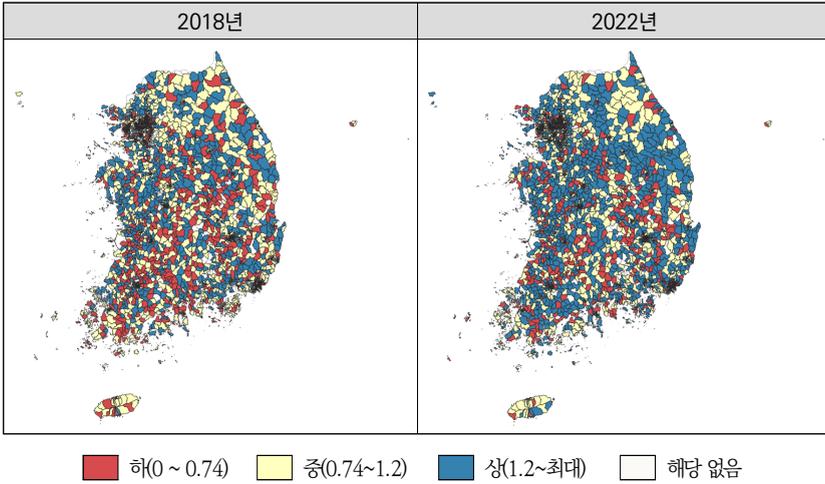
(단위: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10.0	112.7	113.5	123.6	128.6
대도시	106.0	108.7	110.8	119.7	124.2
중소도시	112.7	115.1	114.7	125.8	130.8
농어촌	113.5	117.6	118.9	128.4	136.3

출처: “보육통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육부.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2018, 2022).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그림 4-2] 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정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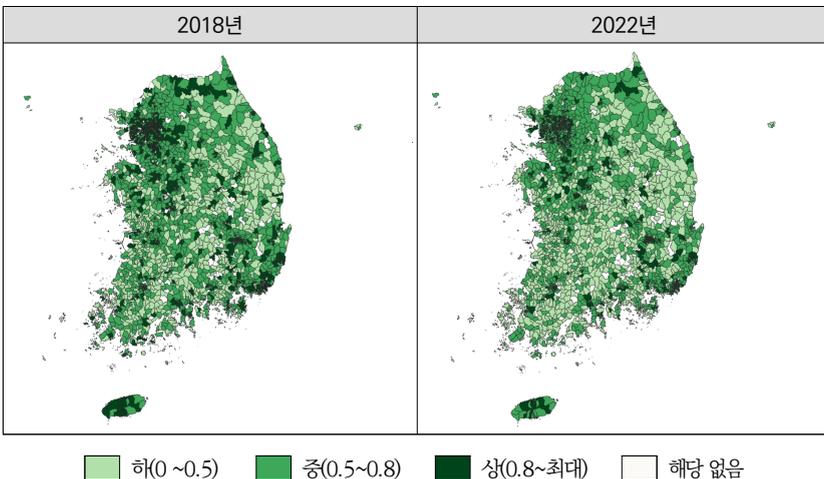
주: 자료 없음은 행정구역 변동으로 변화를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임.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2018, 2022).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앞에서 영유아 수 대비 보육시설 수와 정원 수를 통해 보육시설의 충분성을 수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보육시설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이 현저히 낮아 많은 정원이 미충원 상태로 남게 된다. 초기에는 공급이 넉넉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충원률이 낮으면 운영 수입이 감소하여 시설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처럼 지속적인 저충원 상태는 결국 시설 폐원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보육 인프라가 상실되고, 장기적으로는 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보육 접근성을 평가할 때는 단순한 시설공급량뿐만 아니라 정원충족률을 함께 고려해야 각 지역의 보육 수급 상황과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2018년 79.13%에서 2022년 72.41%로 하락하였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2018년 72.64%에서 2022년 65.66%로 대도시나 중소 도시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영유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 비해 기존 보육시설 정원이 크게 축소되지 않아, 각 시설에 필요한 수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정원의 약 72%만이 충원되고 있으며, 농어촌은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정원충족률 하락은 향후 보육 정책에서 수급 조정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수 있다.

[그림 4-3] 정원충족률

(단위: %)



주: 정원충족률은 현원 ÷ 정원 × 100으로 계산. 자료 없음은 행정구역 변동으로 변화를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임.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에서 추출

〈표 4-7〉 정원충족률 변화(2018~2022)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79.13	77.89	75.16	74.38	72.41
대도시	79.46	78.29	75.70	74.92	73.02
중소도시	79.90	78.72	75.66	74.77	72.81
농어촌	72.64	70.43	68.51	68.25	65.66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에서 추출

## 2.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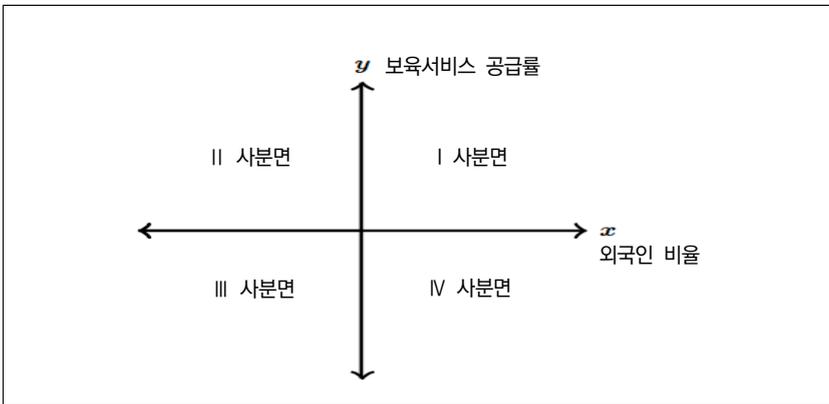
영유아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육서비스가 충분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 내 아동 수 대비 보육시설 수나 정원 수를 산출하여 분석한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절대 수가 매우 적어,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보육서비스가 충분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역 내 보육시설의 충분성과 외국인 영유아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외국인 영유아의 비율과 보육서비스 공급률의 상대적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분석 대상은 외국인이며, 내국인의 경우 0~5세 아동 수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역별로 외국인 영유아의 비중과 보육시설 충분성을 각 지표의 평균을 기준으로 x축, y축을 나누어 4사분면으로 분류하였다. 1사분면은 외국인 영유아의 비율이 높고, 공급률이 높은 지역, 2사분면은 외국인 영유아의 비율이 낮고 공급률이 높은 지역, 3사분면은 외국인 영유아의 비율이 낮고 공급률이 낮은 지역, 4사분면은 외국인 영유아의 비율이 높고 공급률이 낮은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은 4사분면에 속한 지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영유아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도 보육서비스 공급률이 낮아, 외국인 영유

아를 위한 보육정책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보육시설 충분성 지표는 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 시설 수, 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 그리고 정원충족률이다. 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와 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의 경우,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공급의 양”을 보여주는 물리적 공급량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원충족률은 앞의 두 지표와는 구분되는가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원충족률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두 지표와 다르게 정원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이용 아동이 정원에 근접해 있어 여유 정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충분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4사분면이 아닌 1사분면이 충분성 측면에서 주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4] 외국인 영유아의 비중과 보육서비스 공급률의 관계: 4사분면 분류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원충족률 지표에 대해서도 4사분면을 주요하게 살펴본다. 이는 전국적인 저출산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원충족률

이 2019년 이후 80% 이하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한 정원충족률이 80%임을 감안할 때, 전체 평균이 70%에 근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원충족률이 평균보다 높다고 해서 여유 정원이 없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 역시 빈 자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정원충족률이 70% 이하에 장기간 머무르면 운영 수지가 악화돼 폐원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원충족률은 보육시설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영유아 비중이 높은 4사분면 지역 중에서도 정원충족률이 평균 이하인 지역을 향후 보육서비스 충분성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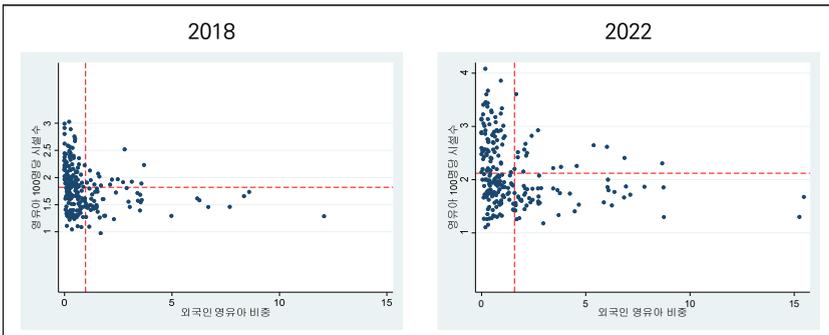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와 외국인 영유아 비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4-5]와 같다. 2018년에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영유아 비중이 매우 낮은(0%대)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여 2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았다. 평균값 점선 자체가 x축의 왼쪽에 크게 치우쳐 있고, 높은 외국인 영유아 비율과 낮은 보육시설 공급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4사분면에 포함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에 2022년으로 가면서 외국인 영유아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x축 방향(외국인 영유아 비율)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지역들이 일부 확인된다. 이로 인해 1사분면과 4사분면 모두 2018년에 비해 그 범위가 다소 넓어졌다.

영유아 100명당 보육시설 수는 2018년에는 1.5~2개소 전후에 시군구가 몰려 있다. 2022년에는 y축 방향으로 좀 더 분산이 확대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의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보육서비스 공급률이 평균 이하이면서

외국인 영유아 비중이 높은 4사분면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분산이 더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외국인 영유아가 증가한 지역 중 일부에서 보육시설 공급률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5] 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와 외국인 영유아 비중 간의 관계

(단위: 개, %)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표 4-8〉은 각 사분면의 지역 수와 그 평균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시한 결과이다. 1사분면(외국인 영유아 비율 높음, 보육시설 공급률 높음)의 경우, 2018년 15개 지역에서 2022년에 18개 지역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해당 사분면 내 외국인 영유아의 비중은 2%대에서 3%대를 넘어 2022년에 3.39%까지 증가했고, 보육시설 공급률 또한 2.01개에서 2.53개(아동 100명당)로 상승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외국인 영유아가 늘어난 동시에, 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공급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뤄진 지역들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사분면(외국인 영유아 비율 낮음, 보육시설 공급률 높음)은 2018년 97개 지역에서 2022년에 74개 지역으로 감소하였다. 해당 사분면의 외국인 영유아 비중은 0.28%에서

0.44%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보육시설 공급률은 같은 기간 2.17개에서 2.80개로 상승하였다.

〈표 4-8〉 각 사분면의 연도별 변화(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

(단위: 개, %,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1사분면	지역 수	15	13	13	17	18
	외국인 비중	2.16 (0.87)	3.06 (1.20)	2.92 (1.38)	3.06 (1.58)	3.39 (2.08)
	아동 대비 시설 수	2.01 (0.18)	2.09 (0.18)	2.15 (0.23)	2.36 (0.21)	2.53 (0.35)
2사분면	지역 수	97	89	83	75	74
	외국인 비중	0.28 (0.23)	0.41 (0.36)	0.39 (0.35)	0.40 (0.35)	0.44 (0.33)
	아동 대비 시설 수	2.17 (0.29)	2.29 (0.32)	2.38 (0.37)	2.64 (0.40)	2.80 (0.44)
3사분면	지역 수	70	76	81	86	85
	외국인 비중	0.42 (0.27)	0.57 (0.35)	0.58 (0.35)	0.64 (0.37)	0.69 (0.40)
	아동 대비 시설 수	1.51 (0.20)	1.58 (0.21)	1.53 (0.23)	1.69 (0.23)	1.72 (0.25)
4사분면	지역 수	46	50	51	50	51
	외국인 비중	2.89 (2.48)	3.61 (3.18)	3.53 (2.92)	3.83 (3.06)	4.06 (3.08)
	아동 대비 시설 수	1.50 (0.19)	1.55 (0.21)	1.50 (0.22)	1.58 (0.20)	1.65 (0.20)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3사분면(외국인 영유아 비율 낮음, 보육시설 공급률 낮음)은 2018년 70개 지역에서 2022년에 85개 지역으로 크게 늘어났다. 외국인 영유아 비중은 0.42%에서 0.69%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보육시설 공급률 자체는 1.51개에서 1.72개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외국인 영유아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전반적인 보육시설 공급

를 역시 낮아 전 지역에 걸쳐 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 지역은 농어촌 지역과 일부 도심 지역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외국인 영유아 비율 높음, 보육시설 공급률 낮음)은 2018년 46개 지역에서 2022년에 51개 지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외국인 영유아 비중도 2.89%에서 4.06%로 상당히 높아졌다. 아동 대비 보육시설 수 또한 1.50개에서 1.65개로 소폭 오르는 했으나, 여전히 1사분면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 영유아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에서 지적한 대로 보육정책적 우선 지원이 시급한 지역군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9〉는 4사분면에 속한 지역명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 아동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데 비해 지역 내 보육시설이 적은 지역이다. 시 지역은 상당수 도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서울 서초구, 강남구 등과 같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 보육시설 감소를 경험한 지역과 도시 외곽 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4-9〉 4사분면에 속한 지역(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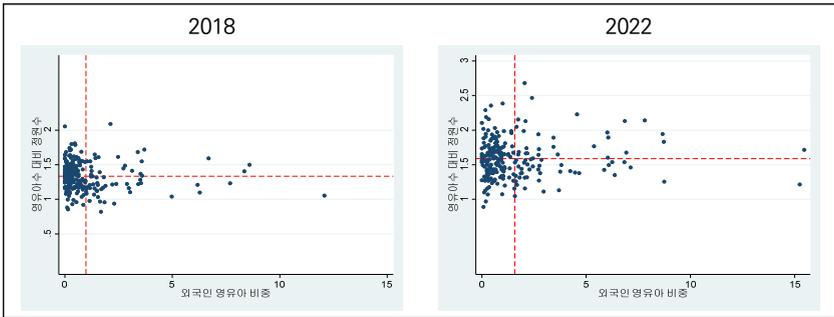
지역 구분	지역명
광역시 지역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서울 마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광진구, 서울 강북구, 서울 중구, 서울 금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금정구, 부산 동구, 대구 달성군,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울산 동구, 울산 울주군
도 지역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경기 평택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군포시, 경기 시흥시, 경기 화성시, 경기 김포시, 충남 아산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천안시, 충북 진천군, 충북 청주시, 충북 증평군, 경북 경주시, 경북 경산시, 경남 김해시, 경남 거제시, 제주도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다음으로, [그림 4-6]은 보육서비스 공급률 지표를 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로 살펴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그림 4-5]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시설 수가 아닌 정원 수로 살펴봤을 때 전체적인 분산이 다소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2022년에는 2018년 대비 외국인 영유아 비중과 정원 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분산이 더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와 외국인 영유아 비중 간의 관계

(단위: 명, %)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표 4-10>은 지역 내 아동 수 대비 정원을 기준으로 사분면을 분류한 결과이다. 1사분면(외국인 영유아 비율 높음·정원 여력 높음)의 경우 2018년 22개 지역에서 2022년에 29개 지역으로 증가했고, 아동 대비 정원이 1.54에서 1.90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반면 2사분면(외국인 영유아 비율 낮음·정원 여력 높음)은 같은 기간 지역 수가 90개에서 78개로 줄어들었지만, 아동 대비 정원은 1.49에서 1.79로 상승폭이 컸다. 3사분면(외국인 영유아 비율 낮음·정원 여력 낮음)은 77개에서 81개로 늘었으며, 아동 대비 정원은 1.19에서 1.38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130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히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4사분면(외국인 영유아 비율 높음·정원 여력 낮음)은 39개에서 40개로 거의 변화가 없으나, 외국인 영유아 비중은 2.54%에서 3.57%까지 오르고 아동 대비 정원 역시 1.15에서 1.39로 다소 개선되었다. 보육 ‘시설 수’ 기준의 사분면 결과와 견주어 보면,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고(高) 외국인 영유아 지역과 저(低) 정원 지역이 여전히 상당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각 사분면의 연도별 변화(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

(단위: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1사분면	지역 수	22	21	24	28	29
	외국인 비중	3.03 (2.20)	3.97 (2.65)	3.82 (2.69)	4.05 (2.75)	4.33 (3.11)
	아동 대비 정원	1.54 (0.17)	1.62 (0.16)	1.64 (0.16)	1.77 (0.23)	1.90 (0.27)
2사분면	지역 수	90	84	81	82	78
	외국인 비중	0.32 (0.23)	0.51 (0.36)	0.50 (0.36)	0.51 (0.38)	0.61 (0.39)
	아동 대비 정원	1.49 (0.13)	1.54 (0.13)	1.59 (0.15)	1.70 (0.18)	1.79 (0.18)
3사분면	지역 수	77	81	83	79	81
	외국인 비중	0.37 (0.29)	0.46 (0.37)	0.48 (0.36)	0.54 (0.38)	0.54 (0.39)
	아동 대비 정원	1.19 (0.11)	1.23 (0.10)	1.23 (0.13)	1.32 (0.15)	1.38 (0.15)
4사분면	지역 수	39	42	40	39	40
	외국인 비중	2.54 (2.22)	3.26 (3.00)	3.16 (2.68)	3.33 (2.77)	3.57 (2.65)
	아동 대비 정원	1.15 (0.12)	1.19 (0.13)	1.19 (0.13)	1.31 (0.12)	1.39 (0.14)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표 4-11〉은 4사분면에 속한 지역명을 제시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영유아 100명당 보육시설 수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공업지역이나 일부 농업지역에서 보육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11〉 4사분면에 속한 지역(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 2022)

지역 구분	지역명
광역시 지역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서울 마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광진구, 서울 강북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금정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 인천 연수구, 울산 동구
도 지역	경기 성남시,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경기 평택시, 경기 군포시, 경기 시흥시, 경기 화성시, 경기 김포시, 충북 진천군,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천안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군,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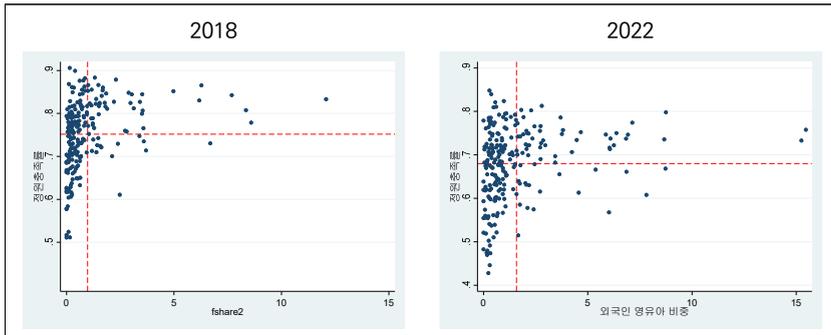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그림 4-7]은 정원충족률과 외국인 영유아 비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정원충족률 지표의 경우, 앞의 공급률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원충족률이 높은 것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사분면이 아닌 1사분면이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분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원충족률이 낮다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정원충족률이 낮다는 것은 기관의 입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과 폐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4사분면은 앞에서 제시한 아동 수 대비 정원 수와 다른 의미로 정책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4사분면에 해당하는 지역의 어린이집은 지역 내 외국인 영유아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지표가 가지

는 의미는 다르지만, 정원충족률 지표에서도 4사분면을 주요하게 해석한다.

[그림 4-7] 정원충족률과 외국인 영유아 비중 간의 관계

(단위: %)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전체적인 변화는 앞의 ‘보육시설 수 대비 외국인 영유아 비중’과 유사하게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정원충족률 지표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원충족률이 하락한 경향을 보인다. 2018년에는 정원충족률도 평균 근처에 밀집된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2022년에는 평균선을 기준으로 각 사분면이 더욱 넓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정원충족률이 평균 이하이면서 외국인 영유아 비중이 높은 4사분면 영역이 이전보다 더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는 외국인 영유아 비중과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사분면을 분류한 결과이다. 먼저, 1사분면은 지역 수가 2018년 47개에서 2022년 49개로 큰 변동이 없으나, 외국인 영유아 비중이 2.79%에서 4.06%로 상승한 반면 정원충족률은 0.82에서 0.74로 낮아졌다. 2사분면(외국인 영

유아 비율 낮음+정원충족률 높음) 역시 같은 기간 외국인 영유아 비중이 0.42%에서 0.65%로 증가했지만, 정원충족률은 0.80에서 0.74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3사분면은 지역 수가 87개에서 81개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외국인 영유아 비중은 0.27%에서 0.50%로 상승했음에도 정원충족률은 0.67에서 0.60으로 점차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2018년 14개 지역에서 2022년에 20개 지역으로 늘고, 외국인 영유아 비중 또한 2.45%에서 3.46%로 높아졌으나 정원충족률은 0.72에서 0.62로 떨어져, ‘높은 외국인 영유아 비중-낮은 정원충족률’ 구조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4-12〉 각 사분면의 연도별 변화 (정원충족률)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1사분면	지역 수	47	49	50	49	49
	외국인 비중	2.79 (2.39)	3.55 (3.13)	3.61 (2.90)	3.72 (3.01)	4.06 (3.07)
	정원충족률	0.82 (0.03)	0.81 (0.03)	0.77 (0.03)	0.76 (0.03)	0.74 (0.03)
2사분면	지역 수	80	78	75	82	78
	외국인 비중	0.42 (0.27)	0.55 (0.34)	0.56 (0.35)	0.60 (0.38)	0.65 (0.40)
	정원충족률	0.80 (0.04)	0.79 (0.04)	0.77 (0.04)	0.75 (0.04)	0.74 (0.04)
3사분면	지역 수	87	87	89	79	81
	외국인 비중	0.27 (0.23)	0.42 (0.37)	0.43 (0.36)	0.45 (0.37)	0.50 (0.37)
	정원충족률	0.67 (0.06)	0.65 (0.06)	0.64 (0.06)	0.62 (0.06)	0.60 (0.06)
4사분면	지역 수	14	14	14	18	20
	외국인 비중	2.45 (1.51)	3.31 (1.85)	2.66 (1.55)	3.40 (2.03)	3.46 (2.28)
	정원충족률	0.72 (0.03)	0.69 (0.04)	0.66 (0.05)	0.65 (0.04)	0.62 (0.04)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2018, 2022).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표 4-13〉은 4사분면에 속한 지역명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표 4-9〉, 〈표 4-11〉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도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정원충족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4-13〉 4사분면에 속한 지역 (정원충족률, 2022)

지역 구분	지역명
광역시 지역	서울 중구, 서울 금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강남구, 서울 종로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울산 울주군
도 지역	경기 동두천시, 경기 가평군, 충북 괴산군, 충북 증평군, 충북 음성군, 충남 예산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사천시, 전남 영암군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 3.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보육서비스의 공급률이 높다고 해서 이주배경 영유아가 실제로 보육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언어와 문화적 장벽 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이주배경 영유아와 그 가족들이 보육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공급률)만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이용률)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인구총조사로 파악한 지역별 영유아 수를 분모로 삼고, 보육통계로 확인한 해당 지역의 실제 이용자 수를 분자로 두어, 어린이집 이용률(%)을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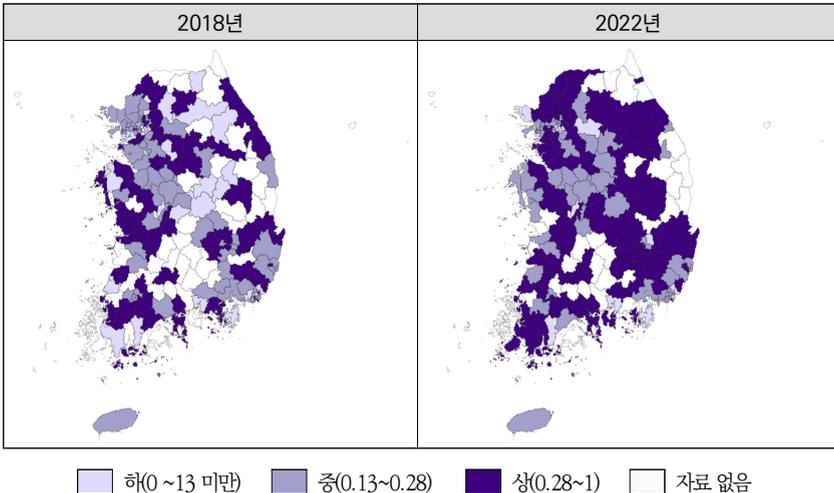
[그림 4-8]은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2018년 지도에서는 일부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이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중간 수준에 머무는 곳이 적지 않다. 반면 2022년 지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진한 색상의 지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몇 년 사이에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상당히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표 4-14〉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이용률을 전체 및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018년 23.8%에서 2019년 21.3%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0년 24%, 2021년 28.5%를 거쳐 2022년 40.9%로 크게 상승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5년 사이에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4-8]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보육통계)

(단위: %)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대도시가 68.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8~2021년까지는 농어촌 지역이 40%대를 넘나들며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2022년 들어 대도시의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2018년 27%, 2019년 21%, 2020년 25.9%, 2021년 29.7%에서 2022년 40.4%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대도시만큼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농어촌 지역은 2018년에 41.2%로 비교적 높은 출발선을 보였으나, 2021년에 54%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에는 40.7%로 다소 감소했다.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18~2022)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23.8	21.3	24.0	28.5	40.9
대도시	22.9	21.1	23.3	27.7	68.7
중소도시	27.0	21.0	25.9	29.7	40.4
농어촌	41.2	35.0	44.1	54.0	40.7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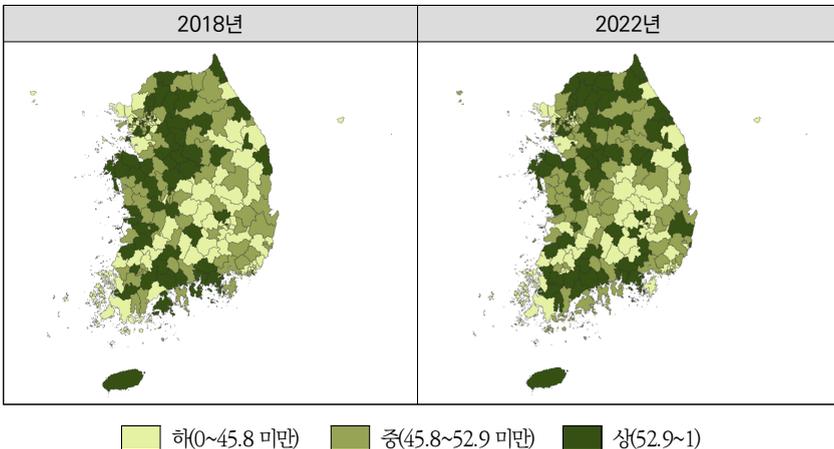
[그림 4-9]와 〈표 4-15〉는 외국인과의 비교를 위해 내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이다. 내국인은 2018년 58.3%에서 2022년 60.6%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2019년까지 소폭 상승하다가 2020년에 다소 하락(56.0%)한 후 다시 증가했으나, 2022년에도 57.4%로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중소도시는 같은 기간 내 가장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다가 2021~2022년 사이에 크게 상승(62.7% → 63.0%)하여 지역 간 격차

가 더욱 커졌다. 농어촌 역시 2018년 57.3%에서 2022년 60.6%로 꾸준히 증가해, 대도시와의 격차가 줄어든 모습이다.

앞에서 제시된 외국인 영유아와의 전반적인 이용률 수준 및 지역별 분포 양상을 비교하면, 이용률 경향은 상당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 대도시는 2022년 기준 57.4%로 다른 지역(중소도시 63.0%, 농어촌 60.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무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같은 시점에 대도시가 68.7%까지 급등하였다. 특히 2021년(27.7%)에서 2022년(68.7%) 사이에 대도시의 외국인 영유아의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 내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 강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여전히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20%p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며, 두 집단 간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9] 내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보육통계)

(단위: %)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I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표 4-15〉 내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18~2022)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58.3	59.2	58.2	60.5	60.6
대도시	55.9	57.1	56.0	57.6	57.4
중소도시	60.3	61.1	59.9	62.7	63.0
농어촌	57.3	57.4	57.3	59.8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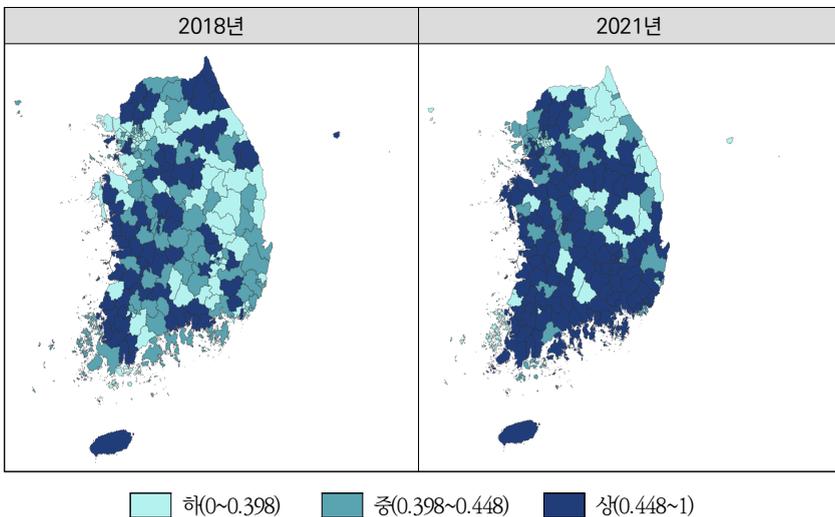
출처: “보육통계,” 교육부,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S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SL.jsp)에서 추출 및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로 분석

[그림 4-10]은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률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영유아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통계 자료에 포함된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자료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계산하였다. 신혼부부통계는 혼인신고 후 5년 내 가구만을 표본에 포함하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된 영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 자료는 앞에서 제시된 보육통계 자료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비교를 위해 이주배경 내국인(다문화 가구)과 이주배경이 없는 내국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참고로, 다문화 실태조사에서만 5세 이하 다문화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018년에는 76%, 2021년은 71.9%로 행정통계와 조사통계의 차이가 보인다(여성가족부, 2019, 2022).

2018년에 상대적으로 진한 색상(이용률이 높은 구간)을 보이는 지역은 중소도시와 일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대도시 지역의 상당수는 중간 이하 수준에 머무는 양상을 보인다. 2021년은 전반적으로 진한 색상의 분포가 크게 확산되어,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이전보다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표 4-16〉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2018년에 전체 이용률은 43.7%였으나, 2019년에 41.9%로 소폭 하락한 뒤, 2020년 42.5%, 2021년 48.7%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42.5%→48.7%)하여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몇 년 새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2018년 41.1%에서 2019년 41.5%로 다소 오르다가 2020년에 38.8%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45.2%로 다시 상승하였다. 중소도시는 같은 기간 44%대에서 출발하여 2020년에 42.8%로 소폭 떨어졌으나, 2021년에는 50.2%로 크게 올라 전체 평균(48.7%)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농어촌도 2018년 42.2%에서 2021년 46.9%로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며, 대도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였다.

[그림 4-10]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신혼부부통계)



출처: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원자료], 통계청 SDC 센터에서 분석

〈표 4-16〉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신혼부부통계, 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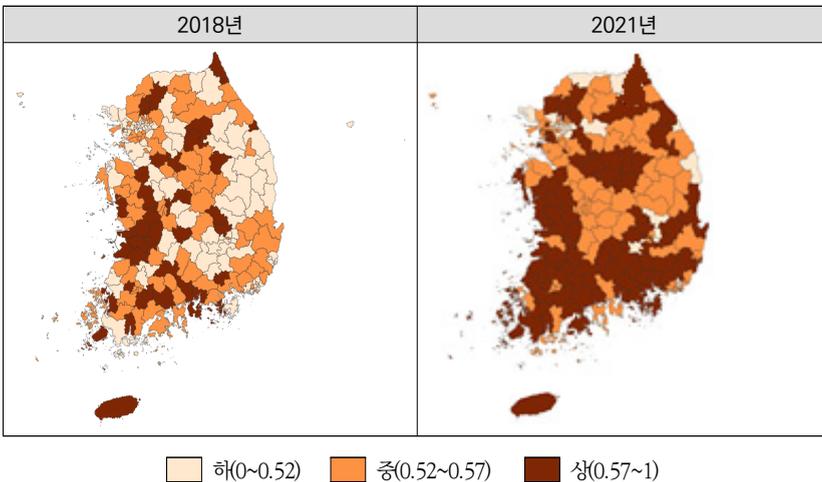
(단위: %)

	2018	2019	2020	2021
전체	43.7	41.9	42.5	48.7
대도시	41.1	41.5	38.8	45.2
중소도시	44.2	44.7	42.8	50.2
농어촌	42.2	42.4	40.3	46.9

출처: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원자료], 통계청 SDC 센터에서 분석

[그림 4-11]과 〈표 4-17〉은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은 영유아의 보육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 기준으로 2018년 52.5%에서 2019년 54.5%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53%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2021년 54.2%, 2022년 55.5%로 다시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1] 내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신혼부부통계)



출처: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2018,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원자료], 통계청 SDC 센터에서 분석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2018년 51.5%에서 2019년 53%로 소폭 오르다가 2020년 51.9%로 하락한 뒤, 2022년에는 54.3%로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소도시는 같은 기간 내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55.2%에서 2019년 56.7%, 2021년 57.5%, 2022년 58.6%로 비교적 꾸준하고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 농어촌 또한 2018년 52.7%에서 2022년 56.9%로 상승하여 대도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한국 국적 이주배경 가구 영유아의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통계 분석 자료는 대체로 영아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4-17〉 내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신혼부부통계, 2018~2021)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52.5	54.5	53.0	54.2	55.5
대도시	51.5	53.0	51.9	52.9	54.3
중소도시	55.2	56.7	55.8	57.5	58.6
농어촌	52.7	52.9	52.7	55.8	56.9

출처: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 [원자료], 통계청 SDC 센터에서 분석

이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 국적 미취득 이주배경(또는 외국인) 영유아와 비교할 때, 이용률 수준이나 지역 분포 양상이 상이함을 시사한다. 내국인 영유아는 대체로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그 뒤를 농어촌, 대도시가 차례로 잇는 구조가 지속되는 반면, 이주배경 영유아는 최근 대도시 이용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지역별 격차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 제2절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 1. 분석 방법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은 조사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시군구별로 외국인 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하기 위해, 보육통계와 인구총조사 자료 및 시군구 수준 통계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측정하기 위해 보육통계에 수록된 시군구별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자 수를 추출한 뒤, 이를 해당 지역의 전체 외국인 영유아 수로 나누어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하였다. 유치원 통계에서는 외국인 아동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워,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시군구 단위의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역별 인구·경제·사회적 특성과 보육 인프라 및 정책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외국인 영유아가 실제로 얼마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변수의 정의와 자료 출처는 <표 4-18>에 요약되어 있다.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외국 국적을 가진 0~5세 아동 중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인구총조사에서 확인한 해당 지역의 전체 외국인 영유아 수로 나눈 값(%)”이다. 단, 읍면동 차원의 자료가 부재하여 시군구 단위로만 측정이 가능한 한계가 있다.

독립변수로는 지역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두 가지 지표로 나누어 활용하였다. 하나는 지자체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 영유아 수를 반영한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총조사에서 추출한 외국인

가구 영유아 수로 산출한 지표다. 이 외에도 외국인(한국 국적 미취득자)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과 다문화 가구 아동(외국인 주민 자녀) 비율을 통해, 지역 내 문화·국적 배경의 다양성이 보육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수 비율을 공급 충분성 지표로 삼고,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 시행 여부 등을 보육 인프라 및 정책 변수로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인구밀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립도, 인구 1인당 지역 총예산 지출, 시군구 내 전체 기업 수 등 다양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지역 특성이나 정책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4-18〉 변수별 정의 및 자료 출처(외국인 영유아)

구분	변수명	설명 및 단위	출처
종속 변수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률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통계청, 「인구총조사」
독립 변수	다양성 지수 ① (다문화 가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0~5세 자녀를 포함한 다양성 지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인구 현황」
	다양성 지수 ① (외국인)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0~5세 외국인(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가구 제외)으로 산출한 다양성 지수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	지역 내 0~5세 다문화 가구 비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0~5세 자녀의 비중(%)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인구 현황」
	지역 내 0~5세 외국인 비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0~5세 외국인(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가구 제외) 비중(%)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구분	변수명	설명 및 단위	출처
독립 변수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	해당 지역 영유아(0~5세)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수 비율(%)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정책	외국인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정책	외국인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정책 시행 여부(더미변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수정 집계
통제 변수	지역 내 0~5세 주민등록인구	해당 지역 0~5세 주민등록상 인구수(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민등록연앙인구	해당 지역 연앙(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수(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인구	인구밀도	주민등록인구/도시 면적(명/km <sup>2</sup>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제 변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천 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지역 경제	인구 1인당 지역 총예산 지출	인구 1인당 지역 총예산(천 원)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전체 기업 수	시군구 내 전체 기업 수(개)	

출처: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통계 자료],” 고용노동부, 2018-2022, 고용노동부.  
 “보육통계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8-20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수정 집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8-2022, 보건복지부.  
 “인구동향조사 [통계 자료],” 통계청, 2018-2022,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 자료],” 통계청, 2018-2022,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8-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 자료],” 행정안전부, 2018-202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인구 현황 [통계 자료],” 행정안전부, 2018-202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통계 자료],” 행정안전부, 2018-2022,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통계 자료],” 행정안전부, 2018-2022, 행정안전부.

분석 모형은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을 적용한다. 기존의 일반 선형회귀분석(OLS)은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며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전제하므로, 0~1 범위의 비율 자료나 카운트 데이터 같은 형태에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GEE는 반복측정 구조에서 발생하는 오차항 간 상

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종속변수의 분포 특성(비율·카운트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본 연구의 자료 특성에 보다 적합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결합(pooled data)하여 사용하였는데, 5년이라는 시계열 폭이 충분히 길지 않아 고정효과 모형(Within-Estimation)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GEE는 이러한 짧은 패널 구조에서도 시점 간 상관 구조를 통제하면서 일반화 회귀모형의 장점을 유지해,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또한, 개체(시군구)별 불변 특성을 명시적으로 제거하는 고정효과 모형과 달리, 전체 집단의 평균적 효과를 추정하는 이른바 '마진(marginal) 모형' 접근을 취한다는 점도 본 연구 목적과 부합한다.

이처럼 GEE를 활용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시계열적(패널) 관점을 반영하여 지역별 인구다양성 수준이나 보육정책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변화가 보육서비스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영유아에게 친화적인 보육 환경을 갖춘 지역을 식별하고, 보육료 지원정책 및 인프라 수준이 보육서비스 이용률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시군구 단위의 보육 접근성 격차를 진단하고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표 4-19〉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비롯해 인구다양성 지수, 인구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를 연도별로 요약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먼저,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1%에서 2019년 27%로 다소 하락한 뒤

2020년 28%로 반등하였으며, 2021년 33%, 2022년 41%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인다. <표 4-19>는 전체 이용률을 산출한 결과이며, <표 4-19>에서 이용률은 시군구별 평균을 산출한 결과로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 영유아(내·외국인 포함) 수는 2018년 평균 11,897명에서 2022년 9,151명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저출산 및 인구 구조 변화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성 지수 ①(다문화 가구 중심)은 2018년 0.1227에서 2022년 0.1532로, 다양성 지수 ②(외국인 중심)는 2018년 0.0211에서 2022년 0.0344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내 다문화·외국인 구성 비중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외국인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지역 내 0~5세 외국인 주민 비중과 외국인 비중 또한 2018년 각각 6%, 1%에서 2022년 7%, 2%로 소폭 증가했다.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수는 2018년 0.96명에서 2022년 1.1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정원 확충과 공공 보육서비스 강화가 함께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정책은 2018년과 2019년에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2020년 1%, 2021년 2%, 2022년 5.1%로 시행 지역 비율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는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나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최근 들어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인구 관련 지표표를 보면, 0~5세 주민등록인구는 2018년 11,897명에서 2022년 9,151명으로 점차 감소한 반면, 주민등록연앙인구(전체)는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2018년 246,101명 → 2022년 252,139명)하였다. 혼인율은 2018년 4.56%에서 2021년 3.39%까지 하락한 뒤 2022년 3.42%로 소폭 반등하였고, 초혼 연령은 30.37세에서 31.27세로 높아졌다. 인구밀도는 2018년 0.0052명/㎢(1000명/㎢로

환산 시 약 5명/km<sup>2</sup>)에서 2022년 0.0058명/km<sup>2</sup> 정도로, 큰 변화 없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한다.

사회경제적 지표로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2018년 52.32%에서 2022년 53.73%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체 기업 수는 2018년 19,641개에서 2022년 30,021개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기업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조사방식이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경제총조사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파악되지 않던 1인 미디어 창작자나 온라인 판매업 등 등록 기반 사업체가 새롭게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주민 1인당 지방세는 2018년 496.78천 원에서 2022년 691.74천 원으로, 인구 1인당 지역 총예산 지출도 5,544백만 원에서 8,430백만 원으로 각각 증가하여 지역 재정의 확장 추세를 보여준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2018년 28.37%에서 2022년 25.14%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9〉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기술통계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률(%)	0.31 (0.24)	0.27 (0.22)	0.28 (0.22)	0.33 (0.25)	0.41 (0.24)
다양성 지수 ①	0.1227 (0.059)	0.1370 (0.063)	0.1409 (0.065)	0.1492 (0.07)	0.1532 (0.073)
다양성 지수 ②	0.0211 (0.031)	0.0278 (0.039)	0.0283 (0.038)	0.0308 (0.04)	0.0344 (0.043)
지역 내 0~5세 외국인 주민 비중(%)	0.06 (0.03)	0.06 (0.03)	0.06 (0.03)	0.07 (0.04)	0.07 (0.04)
지역 내 0~5세 외국인 비중(%)	0.01 (0.02)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02)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명)	0.96 (0.14)	0.99 (0.15)	0.98 (0.16)	1.05 (0.17)	1.10 (0.19)
지역 내 0~5세 주민등록인구(명)	11897 (12021)	10845 (11315)	10337 (10652)	9561 (9972)	9151 (9447)
주민등록연앙인구(명)	246101 (222260)	241927 (223521)	248182 (226545)	246695 (226231)	252139 (229317)

148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혼인율(%)		4.56 (1.02)	4.24 (0.90)	3.78 (0.88)	3.39 (0.81)	3.42 (0.75)
초혼 연령(세)		30.37 (0.69)	30.61 (0.70)	30.68 (0.65)	30.99 (0.72)	31.27 (0.68)
인구밀도		0.0052 (0.007)	0.0056 (0.008)	0.0057 (0.009)	0.0059 (0.009)	0.0058 (0.009)
도시 규모 (%)	대도시	0.30 (0.46)	0.31 (0.46)	0.29 (0.46)	0.29 (0.46)	0.29 (0.46)
	중소도시	0.37 (0.48)	0.37 (0.48)	0.37 (0.48)	0.37 (0.48)	0.37 (0.48)
	농어촌	0.33 (0.47)	0.33 (0.47)	0.33 (0.47)	0.33 (0.47)	0.34 (0.47)
여성고용률(%)		52.32 (5.38)	53.65 (5.57)	52.99 (6.23)	53.05 (7.17)	53.73 (7.20)
전체 기업 수(개)		19641 (16700)	19644 (16957)	29033 (25306)	29101 (25161)	30021 (25724)
1인당 지방세(만 원)		496.78 (311.26)	525.67 (330.01)	602.44 (320.27)	616.66 (314.80)	691.74 (348.33)
재정자립도(%)		28.37 (13.44)	27.47 (13.52)	26.19 (12.93)	25.68 (12.70)	25.14 (12.52)
인구 1인당 지역 총예산 지출(만 원)		5544 (4099)	6582 (4911)	7238 (5255)	7538 (5377)	8430 (6518)
외국인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정책 여부(비중)		-	-	0.010 (0.10)	0.020 (0.14)	0.051 (0.22)
N		205	209	201	204	196

주: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음.

### 3. 추론통계 분석 결과

지역의 인구다양성이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표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설명변수를 포함하되, 모형 ①과 ②에 포함된 다양성 지수1은 결혼이민자 자녀를 포함한 다양성 지수를 의미한다. 모형 ③, ④는 결혼이민자 자녀를 제외

하고 지역 내 외국인 인구만으로 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②와 ④는 시군구 내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정책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 가구 자녀를 포함하여 산출한 다양성 지수는 대체로 양(+)의 계수가 관찰되지만, 모형 ①에서는 10% 유의수준( $p=0.069$ )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인 반면, 정책 도입 변수를 추가로 포함한 모형 ②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의 인구가 다양해질수록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어느 정도 포착되기는 하나, 실제로는 이 다양성 효과가 '정책 도입 여부'라는 보다 강력한 변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도입 변수가 모형에 추가되었을 때 다양성 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이유는 정책 도입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 혹은 매개효과 가능성이다. 만약 지자체가 주로 인구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정책을 우선 도입했다면, 다양성 지수와 정책 도입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정책 도입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다양성이 결과 변수(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듯 보이나, 사실상 그 영향은 '다양성 → 정책 도입 →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경로에서 정책 도입과 뒤섞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도입 변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면, 그 효과가 독립적으로 추정되므로 다양성 지수의 독립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된다. 이는 선택 편향 혹은 매개효과 등의 기제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보다 엄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정책 도입의 결정 과정이나 인구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책 우선 배분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는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미한 양(+)의 관계로 나타난다(모형 ①:  $p=0.047$ , 모형 ②:  $p=0.037$ ). 이는 지역 보육시

설 정원이 영유아 규모에 비해 충분할수록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뜻이다. 즉, 공급 측면에서 시설 여유도가 높아질수록 외국인 가구도 보육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구밀도, 혼인율, 초혼 연령, 지역 구분(중소도시·대도시 더미) 등은 일부 계수가 유의수준에 근접하거나 미미하게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고용률은 약한 양(+) 효과가 나타나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약간 증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정자립도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여,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라 하더라도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는 단순히 지자체의 재정이 여유 있다고 해서 외국인 영유아 보육 이용률이 꼭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며, 지역별 복지 정책 우선순위나 외국인을 위한 지원 의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연도 더미를 보면, 2019년과 2020년은 기준연도 대비 이용률이 낮은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2021년과 2022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계수 크기가 작다.

모형 ②와 ④에서만 포함된 외국인 영유아 지원정책 변수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인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시행될 경우 실제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아동 대상 정책적 뒷받침이 확실한 지역에서는 공급적 여건(정원 수)뿐 아니라 제도·행정적 지원이 결합되어 보육서비스 활용이 한층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모형 ①과 모형 ②와 모형 ③과 ④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다양성 지수의 유의성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모형 1·2에서는 정책 변수를 포함하

기 전후로 다양성 지수의 영향이 바뀌는 패턴(매개 효과나 선택 편향 가능성)이 드러나지만, 모형 3·4에서는 애초에 다양성 지수가 유의하지 않아 그런 해석이 필요 없게 된다. 대신 정책 변수와 보육시설 정원 수가 두 그룹의 모형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한다.

(표 4-20)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  
(다양성 지수1)

		모형 ①			모형 ②		
		계수	강건한 S.E	p-value	계수	강건한 S.E	p-value
다양성 지수 ①		0.382	0.210	0.069	0.309	0.211	0.143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		0.173	0.087	0.047	0.182	0.087	0.037
0~5세 주민등록인구 (로그)		0.050	0.069	0.469	0.044	0.069	0.52
주민등록연앙인구 (로그)		-0.008	0.087	0.924	-0.002	0.087	0.982
혼인율		-0.004	0.018	0.813	-0.004	0.018	0.814
초혼 연령		0.003	0.017	0.836	0.004	0.017	0.821
인구밀도		-5.685	3.088	0.066	-5.652	3.100	0.068
지역 구분	중소도시	-0.098	0.053	0.065	-0.100	0.053	0.06
	대도시	-0.126	0.071	0.078	-0.133	0.072	0.064
여성 고용률		0.005	0.003	0.053	0.005	0.003	0.058
기업수 (로그)		0.027	0.041	0.510	0.022	0.041	0.58
재정자립도		-0.004	0.001	0.001	-0.004	0.001	0.002
1인당 지자체 예산 (로그)		0.061	0.042	0.141	0.059	0.041	0.155
연도 터미	2019	-0.070	0.020	0.000	-0.069	0.020	0.000
	2020	-0.064	0.030	0.033	-0.062	0.030	0.037
	2021	-0.035	0.035	0.322	-0.035	0.035	0.317
	2022	0.035	0.038	0.353	0.031	0.038	0.413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 여부		-	-	-	0.130	0.033	0
절편		-1.119	0.817	0.171	-1.089	0.814	0.181

〈표 4-21〉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  
(다양성 지수2)

	모형 ③			모형 ④			
	계수	강건한 S.E	p-value	계수	강건한 S.E	p-value	
다양성 지수 ②	0.101	0.284	0.722	-0.053	0.258	0.837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	0.178	0.087	0.041	0.186	0.087	0.032	
지역 내 0~5세 주민등록인구 (로그)	0.015	0.070	0.827	0.011	0.070	0.876	
주민등록연앙인구 (로그)	0.023	0.088	0.791	0.028	0.088	0.753	
혼인율	-0.003	0.019	0.875	-0.002	0.019	0.930	
초혼 연령	0.001	0.017	0.948	0.002	0.017	0.922	
인구밀도	-5.682	3.213	0.077	-5.702	3.205	0.075	
지역 구분	중소도시	-0.106	0.052	0.042	-0.106	0.052	0.042
	대도시	-0.137	0.070	0.051	-0.142	0.070	0.043
여성 고용률	0.005	0.003	0.035	0.005	0.003	0.041	
기업수 (로그)	0.032	0.041	0.438	0.028	0.040	0.494	
재정자립도	-0.004	0.001	0.002	-0.004	0.001	0.003	
1인당 지자체 예산 (로그)	0.066	0.041	0.110	0.062	0.041	0.133	
연도 터미	2019	-0.069	0.020	0.001	-0.067	0.020	0.001
	2020	-0.065	0.030	0.031	-0.062	0.030	0.039
	2021	-0.035	0.036	0.328	-0.034	0.036	0.348
	2022	0.034	0.039	0.378	0.031	0.038	0.415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 여부	-	-	-	0.147	0.032	0.000	
절편	-1.202	0.819	0.142	-1.161	0.815	0.154	

모형 ⑤, 모형 ⑥과 모형 ⑦, 모형 ⑧은 앞에서 제시된 시군구 단위 분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이번에는 지역 내 ‘다문화 자녀 비중’(모형 ⑤, 모형 ⑥)과 ‘외국인 자녀 비중’(모형 ⑦, 모형 ⑧)을 각각 투입하여 비교하였다.

다문화 가구(이주배경 내국인) 영유아 비중은 모형 ⑤·⑥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로 나타나(각각  $p=0.006$ ,  $p=0.011$ ), 해당 지역의 다문화 영유아가 많을수록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외국인 자녀 비중을 투입한 모형 ⑦·⑧에서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외국 국적 영유아의 절대적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자동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는 네 가지 모형에서 모두 5~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보육시설 공급 여건이 충분할수록 외국인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함을 재확인해 준다. 재정자립도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나, 지자체의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곧바로 외국인 영유아 보육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외국인 영유아 지원정책 변수를 포함한 모형(⑥·⑧)에서는 지자체의 보육료 지원정책이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미쳐, 보육료 지원 제도가 보육서비스 이용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외국 국적 인구의 절대 규모가 큰 지역이 반드시 높은 보육 이용률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구가 실제로 많이 분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 지원 체계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지역일수록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과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핵심적인 경로는 같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이민자 혹은 다문화 가구와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짐이 확인되었다. 즉, 초기에 1~2명의 이주배경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해당 보육시설이 이주배경 영유아를 적극적으로 보육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이후 같은 네트워크 내의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90% 이상의 원아가 이주배경 영유아인 보육시설 사례도 관찰되었으며, 이는 특정 보육시설이 다문화 가구의 신뢰를 얻고, 자연스럽게 이용률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결혼이민 형태의 다문화 가구가 최근에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정책 효과를 광범위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다양성 지수 이상의 직접적 효과를 발휘하여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

〈표 4-22〉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  
(다문화 가구 영유아 비중)

	모형 ⑤			모형 ⑥			
	계수	강건한 S.E	p-value	계수	강건한 S.E	p-value	
다문화 영유아 비중	1.541	0.559	0.006	1.433	0.566	0.011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	0.156	0.087	0.072	0.166	0.087	0.057	
지역 내 0~5세 주민등록인구 (로그)	0.069	0.067	0.300	0.067	0.067	0.316	
주민등록연앙인구 (로그)	-0.034	0.086	0.695	-0.030	0.086	0.729	
혼인율	0.002	0.018	0.927	0.001	0.018	0.957	
초혼 연령	0.005	0.017	0.751	0.006	0.017	0.729	
인구밀도	-5.936	2.983	0.047	-5.881	2.986	0.049	
지역 구분	중소도시	-0.086	0.054	0.115	-0.088	0.055	0.107
	대도시	-0.110	0.073	0.133	-0.116	0.073	0.112
여성 고용률	0.004	0.002	0.090	0.004	0.002	0.098	
기업수 (로그)	0.034	0.041	0.414	0.028	0.041	0.495	
재정자립도	-0.004	0.001	0.002	-0.004	0.001	0.002	

	모형 ⑤			모형 ⑥			
	계수	강건한 S.E	p-value	계수	강건한 S.E	p-value	
1인당 지자체 예산 (로그)	0.051	0.041	0.217	0.049	0.041	0.236	
연도 터미	2019	-0.065	0.019	0.001	-0.065	0.019	0.001
	2020	-0.058	0.030	0.050	-0.057	0.030	0.054
	2021	-0.028	0.035	0.419	-0.029	0.035	0.404
	2022	0.045	0.038	0.230	0.040	0.037	0.283
외국인 영유아 지원정책				0.129	0.031	0	
절편	-1.044	0.805	0.195	-1.009	0.803	0.209	

〈표 4-23〉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  
(외국인 영유아 비중)

	모형 ⑦			모형 ⑧			
	계수	강건한 S.E	p-value	계수	강건한 S.E	p-value	
외국인 영유아 비중	0.210	0.524	0.688	-0.076	0.470	0.871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	0.178	0.087	0.040	0.186	0.087	0.032	
지역 내 0~5세 주민등록인구 (로그)	0.016	0.070	0.821	0.011	0.070	0.87	
주민등록연앙인구 (로그)	0.023	0.088	0.794	0.027	0.088	0.756	
혼인율	-0.003	0.019	0.869	-0.002	0.019	0.924	
초혼 연령	0.001	0.017	0.947	0.002	0.017	0.921	
인구밀도	-5.678	3.212	0.077	-5.697	3.204	0.075	
지역 구분	중소도시	-0.106	0.052	0.042	-0.106	0.052	0.042
	대도시	-0.137	0.070	0.051	-0.142	0.070	0.043
여성 고용률	0.005	0.003	0.035	0.005	0.003	0.042	
기업 수 (로그)	0.032	0.041	0.440	0.027	0.040	0.497	
재정자립도	-0.004	0.001	0.002	-0.004	0.001	0.003	
1인당 지자체 예산 (로그)	0.066	0.041	0.110	0.062	0.041	0.133	
연도 터미	2019	-0.069	0.020	0.001	-0.067	0.020	0.001
	2020	-0.065	0.030	0.031	-0.062	0.030	0.039
	2021	-0.035	0.036	0.326	-0.034	0.036	0.346
	2022	0.034	0.039	0.380	0.031	0.038	0.417
외국인 영유아 지원정책				0.146	0.032	0	
절편	-1.201	0.819	0.143	-1.160	0.815	0.154	

### 제3절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 1. 분석 자료와 방법

다문화 영유아(이주배경 내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은 신혼부부통계를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 신혼부부통계는 개인 단위 미시 행정통계로,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를 대상으로 가구와 자녀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신혼부부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공적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결혼 이후 출산 시점과 보육 방식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에도 용이하다. 신혼부부통계는 남편과 아내의 교육 수준, 혼인 신고 당시 직업, 현재 취업 여부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를 개인 및 가구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특히 가구별 읍면동 주소까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단위 분석에 비해 보다 세밀한 수준에서 보육시설 접근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가구 단위 자료로 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 단위의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이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으로 일컬어지는데, 결혼 또는 귀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신혼부부통계가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 등록을 마친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가구는 제외되며 다문화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만 분석에 포함된다. 가구 내 영유아 자녀 중 1명 이상 보육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 등)를 이용하고 있는

지를 1(이용)과 0(미이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독립변수로는 지역적·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먼저, 다문화 가구 여부와 모(母)의 출신 국적은 가구가 다문화 가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결혼이민자(모)가 어느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가구 내부 특성이 보육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다양성 지수는 ① 결혼이민·귀화 등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 가구에 속한 0~5세 영유아와 외국인 영유아를 포함하여 산출한 다양성 지수와 ② 외국인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다양성 지수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역 내 0~5세 다문화 가구 비중과 외국인 비중 역시 다문화 가구 또는 외국인 아동의 상대적 규모가 커질수록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포함한다.

〈표 4-24〉 변수별 정의 및 자료 출처 (다문화 영유아)

구분	변수명	설명 및 단위	출처
종속 변수	이주배경 내국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보육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 증인지 여부	교육부 「보육통계」
독립 변수	다문화 가구 여부	다문화 가구에 속하는지 여부	통계청 인구·가구 DB 「신혼부부통계」
	모의 국적	모의 출신 국적	
	다양성 지수 ① (전체 이주배경 인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0~5세 자녀를 포함한 다양성 지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인구 현황」
	다양성 지수 ② (외국인 인구)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0~5세 외국인(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가구 제외)으로 산출한 다양성 지수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지역 내 다문화 가구 비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 가구 비중(%)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인구 현황」

158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구분	변수명	설명 및 단위	출처		
	지역 내 0~5세 외국인 비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0~5세 외국인(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가구 제외) 비중(%)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독립 변수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	해당 지역 영유아(0~5세)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수 비율(%)	교육부 「보육통계」		
정책	다문화센터 여부	해당 읍면동에 다문화센터가 있는지 여부(더미변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수정 집계		
통제 변수	아내 학력, 남편 학력	혼인신고 당시 부모의 학력	통계청 인구·가구 DB (인구동향, 가구동향, 주민등록등록 통계 등)	신혼 부부 통계	
	아내 직업, 남편 직업	혼인신고 당시 부모의 직업			
	혼인 연도	혼인신고 당시 연도			
	6세 이하 자녀 수	가구 내 만 6세 이하 아동 수(명)			
	7세 이상 자녀 수	가구 내 만 7세 이상 자녀 수(명)			
	부부 동거 여부	배우자와 동일 거처 거주 여부			
	조부모 동거 여부	자녀 기준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최근 1년 내 거주지 이동	최근 1년 안에 현 거주 지역으로 전입했는지 여부			
	거처 종류	현재 거주하는 주택 유형			
	자료 수집 연도	통계수집 연도			
	맞벌이 여부	맞벌이, 남편 외벌이, 아내 외벌이, 공식 일자리 없음			고용노동부, 일자리행정 통계 DB
	주택가격	소유주택의 익년 1.1 기준 공시가격			주택소유통계 DB
지역 구분	인구 규모 및 밀도를 활용한 행정구역 분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출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통계청 행정통계과, (2024.12.10.)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5&act=view&list\\_no=434122](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5&act=view&list_no=434122)을 기반으로 수정 작성, 신혼부부통계 외 분석 자료는 <표 4-18>과 출처 동일

정책 변수로는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와 다문화센터 여부를 고려한다.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는 해당 지역의 보육시설 공급 충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이며, 보육시설 접근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가구 영유아의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센터 여부는 해당 읍면동에 다문화센터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더미변수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 제공·상담 지원 등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통제변수는 가구 특성과 거주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부부의 학력(아내 학력, 남편 학력)과 직업(아내 직업, 남편 직업)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며, 혼인 연도는 결혼 기간 및 가구 형성 시점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6세 이하 자녀 수와 7세 이상 자녀 수는 가구 내 자녀 구성 상태를 나타내고, 부부 동거 여부와 조부모 동거 여부는 보육서비스 요구 수준 및 가구 지원 체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최근 1년 내 거주지 이동은 이주 가구의 정착 수준과 정보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거처 종류는 주택 유형에 따른 생활 환경 차이를, 자료 수집 연도는 패널 또는 시계열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맞벌이 여부는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맞벌이, 남편 외벌이, 아내 외벌이, 공식 일자리 없음)를, 주택가격은 거주자의 경제적 수준을, 지역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은 인구 규모·밀도 차이에 따른 지역 특성을 각각 반영한다.

분석은 멀티레벨 로짓(Multilevel Logistic) 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는 가구(개인) 단위와 읍면동(지역) 단위 변수가 동시에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진 데이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이항 로짓분석만으로는 가구 수준 특성과 지역 수준 특성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 반면, 멀티레벨 로짓 분석은 1수준(가구)에서의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과 2수준(읍면동)에서의 지역 특성을 분리하여 추정함으로써, 각 수준별 변수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룹 간(지역 간) 차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분석을 위해서는 가구별 특성과 거주 지역의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멀티레벨 로짓분석을 사용하면 가구 수준에서 발생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부모 특성, 다문화 가구 여부 등)과 지역 수준에서 발생하는 정책·인프라 요인(다문화 센터 여부, 영유아 수 대비 정원 수 등)을 동시에 투입해, 이들의 상호작용 및 상대적 중요도를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신혼부부 중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가구 단위 기술통계를 비교한다. 이때 자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통합한 자료이다. 먼저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서 일반 가구는 평균 57.7%가 보육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 등)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주배경 가구는 47.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일반 가구와 이주배경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단위 변수를 살펴보면, 지역 내 이주배경 인구 비중에서 이주배경 가구가 속한 지역은 동남아(평균 1.6%), 중국계(2.0%), 중앙아시아·러시아(0.4%) 등 전반적으로 이주배경 국적 비중이 일반 가구 지역보다 높다. 예를 들어, 동남아 국적 비중은 일반 가구 지역이 0.9%인 반면, 이주배경 가구 지역은 1.6%로 나타나, 이주배경 가구가 상대적으로 외국 국적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 내 다문화 가구 비중 역시 일반 가구 지역은 평균 1.2%이지만, 이주배경 가구 지역은 1.6%로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주배경 가구가 이미 밀집하거나 활발히 형성된 지역에 몰리는 현상을 보여주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아동 수 대비 정원 수, 즉 정원충족률은 일반 가구 지역이 평균 0.781, 이주배경 가구 지역은 0.746으로, 이주배경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보육시설 정원 대비 아동 수가 조금 더 많은 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동 인구 증가에 비해 정원 확충이 더디게 진행된 지역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센터 유무는 일반 가구 지역이 9.0%, 이주배경 가구 지역이 10.4%로, 이주배경 가구가 사는 지역에 다문화센터나 가족센터가 설치되어 있을 확률이 약간 더 높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이주배경 가구가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보육서비스 접근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다.

부부의 연령을 살펴보면, 일반 가구의 남편 평균 연령은 35.40세, 아내는 33.22세인 반면, 이주배경 가구는 남편 40.44세, 아내 30.57세로 확인된다. 즉 이주배경 가구는 남편이 더 나이가 많고, 아내가 더 젊은 형태가 두드러진다. 또한 부부 학력의 경우, 일반 가구 남편은 대학 졸업(69.9%)이 가장 많고, 이주배경 가구 남편은 고졸(41.4%)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내 역시 일반 가구는 대학 졸업(65.5%)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이주배경 가구는 고졸(43.1%), 중졸 이하(12.6%)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직업 분포 또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 가구 남편은 사무직(25.9%), 관리자·전문가(32.4%) 비중이 높은 반면, 이주배경 가구 남편은 장치·기계조작(22.6%), 단순노무(6.8%) 등 상대적으로 육체노동 직종 비중이 높다. 아내 직업의 경우 일반 가구 아내는 사무직(25.8%), 관리자·전문가(27.4%) 등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은 반면, 이주배경 가구 아내는 학생·가사·무직(49.6%)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러한 차이는 맞벌이 여부에도 반영된다. 일반 가구는 맞벌이 47.1%, 남편 외벌이 42.0%, 아내 외벌이 5.0%, 부부 모두 무직 5.9%로 나타난다. 반면 이주배경 가구는 맞벌이 26.9%, 남편 외벌이 50.8%, 부부 무직 15.1%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일자리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 수는 6세 이하 자녀가 일반 가구는 평균 1.22명, 이주배경 가구는 1.16명으로 큰 차이는 없으며, 7세 이상 자녀는 각각 0.05명 내외로 유사하다.

부부 동거 여부를 보면, 일반 가구는 부부 동거 91.2%, 해외 거주 미동거 1.1%인 반면, 이주배경 가구는 부부 동거 79.7%, 해외 거주 미동거 18.4%로,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를 둔 경우가 일반 가구에 비해 상당히 많다. 최근 1년 내 거주지 이동 여부를 보면, 이주배경 가구는 '미이동'이 87.1%로 일반 가구(80.7%)보다 높아, 거주지 이동이 일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난다.

주거 형태에서 일반 가구는 아파트(74.9%) 거주 비중이 가장 높고, 단독주택(11.5%)은 낮다. 반면 이주배경 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중이 49.7%, 단독주택이 29.6%로 나타나, 일반 가구보다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월등히 높다. 주택 가격 면에서도 '주택 없음' 응답 비율은 일반 가구 53.2%, 이주배경 가구는 65.4%로 이주배경 가구의 자가 보유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지역 구분을 보면, 일반 가구는 대도시(69.7%), 중소도시(25.2%), 농어촌(5.1%) 순이며, 이주배경 가구는 대도시(64.0%), 중소도시(26.8%), 농어촌(9.2%) 순이다. 이는 농어촌에 전통적으로 다문화 가구가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이주한 이주배경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25)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분석 기술통계표

구분		일반 가구		이주배경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0.577	0.494	0.472	0.499
다양성지수		0.059	0.106	0.031	0.06
지역 내 이주배경 인구 비중	동남아 국적 비중	0.009	0.016	0.016	0.027
	중국계 국적 비중	0.011	0.024	0.02	0.05
	중앙아, 러시아국적 비중	0.002	0.007	0.004	0.013
	북미계 국적 비중	0.001	0.003	0.001	0.003
	기타 국적 비중	0.002	0.005	0.003	0.008
지역 내 다문화 가구 비중		0.012	0.009	0.016	0.013
정원충족률		0.781	0.126	0.746	0.141
정원 대비 아동 수		0.955	0.794	1.131	1.058
다문화, 가족센터 유무		0.09	0.285	0.104	0.305
남편 연령 (세)		35.401	4.654	40.437	7.088
아내 연령 (세)		33.215	4.299	30.573	5.593
남편 학력	초졸 이하	0.036	0.186	0.105	0.311
	중졸	0.009	0.096	0.111	0.314
	고졸	0.185	0.389	0.414	0.492
	대졸	0.699	0.459	0.322	0.467
	대학원 졸	0.071	0.257	0.049	0.215
아내 학력	초졸 이하	0.036	0.185	0.078	0.268
	중졸	0.01	0.1	0.048	0.214
	고졸	0.224	0.417	0.431	0.495
	대졸	0.655	0.475	0.395	0.489
	대학원 졸	0.075	0.264	0.048	0.214
남편 직업	사무직	0.259	0.438	0.129	0.335
	관리자·전문가	0.324	0.468	0.236	0.425
	서비스업, 판매직	0.172	0.377	0.176	0.381
	농업	0.009	0.094	0.044	0.205
	장치, 기계조작	0.121	0.326	0.226	0.418
	단순노무	0.021	0.145	0.068	0.252
	군인	0.015	0.121	0.011	0.102
	학생, 가사, 무직	0.034	0.182	0.032	0.176

164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구분		일반 가구		이주배경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내 직업	미상	0.045	0.207	0.079	0.27
	사무직	0.258	0.438	0.084	0.278
	관리자·전문가	0.274	0.446	0.091	0.287
	서비스업, 판매직	0.132	0.339	0.105	0.306
	농업	0.001	0.036	0.018	0.131
	장치, 기계조작	0.012	0.111	0.037	0.189
	단순노무	0.005	0.072	0.046	0.21
	군인	0.009	0.097	0.02	0.14
	학생, 가사, 무직	0.26	0.439	0.496	0.5
미상	0.046	0.21	0.103	0.305	
혼인 연도		2016.68	1.96	2016.93	1.89
맞벌이 여부	맞벌이	0.471	0.499	0.269	0.443
	남편 외벌이	0.42	0.494	0.508	0.5
	아내 외벌이	0.05	0.218	0.072	0.259
	부부 공식 일자리 없음	0.059	0.235	0.151	0.358
6세 이하 자녀 수 (명)		1.221	0.433	1.164	0.385
7세 이상 자녀 수 (명)		0.051	0.298	0.054	0.292
모의 국적	한국인	100	0	0.109	0.311
	동남아	.	.	0.593	0.491
	중국계	.	.	0.217	0.412
	중앙아·러시아	.	.	0.025	0.157
	북미	.	.	0.028	0.164
	기타	.	.	0.028	0.166
부부 동거 여부	부부 동거	0.912	0.284	0.797	0.402
	부부 미동거: 국내 거주	0.077	0.266	0.019	0.136
	부부 미동거: 해외 거주	0.011	0.106	0.184	0.388
조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0.908	0.288	0.799	0.401
	동거	0.092	0.288	0.201	0.401
최근 1년 내 거주지 이동	미이동	0.807	0.395	0.871	0.335
	도내 이동	0.139	0.346	0.092	0.289
	도외 이동	0.055	0.227	0.036	0.187

구분		일반 가구		이주배경 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거처 종류	단독주택	0.115	0.319	0.296	0.456
	아파트	0.749	0.434	0.497	0.5
	연립주택	0.018	0.133	0.026	0.158
	다세대주택	0.084	0.277	0.125	0.331
	기타1)	0.035	0.183	0.056	0.23
주택가격	0.6억 이하	0.03	0.171	0.067	0.25
	0.6억~1.5억 원 이하	0.126	0.331	0.13	0.337
	1.5억~3억 원 이하	0.165	0.371	0.091	0.287
	3억~6억 원 이하	0.106	0.307	0.041	0.199
	6억 원 초과	0.042	0.201	0.017	0.13
	주택 없음	0.532	0.499	0.654	0.476
연도	2018	0.241	0.427	0.2	0.4
	2019	0.219	0.413	0.204	0.403
	2020	0.197	0.398	0.21	0.407
	2021	0.178	0.383	0.203	0.403
	2022	0.165	0.371	0.182	0.386
지역 구분	농어촌	0.051	0.219	0.092	0.289
	중소도시	0.252	0.434	0.268	0.443
	대도시	0.697	0.46	0.64	0.48
N		2,763,370		142,165	

주: 남편 연령, 아내 연령, 6세 이하 자녀 수, 7세 이상 자녀 수 제외한 변수의 단위는 비중으로 백분율 이전의 단위임.

출처: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SDC 센터 이용.

종합적으로, 일반 가구와 비교했을 때 이주배경 가구는 남편의 연령이 더 높고 아내의 연령은 더 낮은 특징을 보이며, 전반적인 학력 수준은 낮고 맞벌이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아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학생·가사·무직’ 상태가 절반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주배경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주거 형태에서도 이주배경 가구는 단독주택 등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자가 보유가 어려운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주택 없음’ 비중

역시 일반 가구보다 크다. 이러한 경제·사회·주거 조건의 복합적 차이는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일반 가구(57.7%)에 비해 이주배경 가구(47.2%)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 3. 추론통계 분석 결과

#### 가. 개인 단위 분석

영유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중 최소 1명 이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우선 가구 수준 변수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보육서비스 이용에 어떤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 가구 여부가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 중 한쪽이 한국인인 가구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가구 모두 내국인 부부에 비해 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이주배경 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언어·문화적 장벽이나 정보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 특성 변수 중 부부가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 최근 거주지 이동 여부, 거처 종류 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었고, 조부모와 동거할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다만, 주택가격은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6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서는 오즈비가 0.687로 추정되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부부의 연령을 보면, 남편의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약 0.6%(오즈비 1.006,  $p < 0.001$ ) 정도로 유의하게 상승한 반면, 아내 연령은 1세 증가 시 약 0.7%(오즈비 0.9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적 여건이나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보육서비스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아내가 나이가 들수록 직접 육아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고용 패턴이 달라져 보육서비스 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남편과 아내 모두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중졸·고졸 집단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졌으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용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도 출되었다. 즉, 대학 미만의 학력을 가진 경우, 학력이 올라갈수록 이용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지만, 대학 졸업 이상이 되면 오히려 이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중적 패턴을 보인다.

부모 직업 특성을 살펴보면, 혼인 당시 남편의 직업에서 '농업' 종사자가 오즈비 0.101로 참조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이용 확률을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판매직'(1.182), '장치·기계조작'(1.134), '단순노무'(1.219) 등에서는 이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내 직업은 '관리자·전문가'(0.963)나 '농업'(0.962) 집단에서 사무직 대비 이용 확률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는 한편, '서비스업·판매직'(1.019)이나 '학생·가사·무직'(1.226) 분류에서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직업 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 수요가 달라지고, 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일수록 외부 보육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혼인 연도는 2011~2015년 사이에 혼인한 부부가 기준연도(2009년) 대비 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2013년

(4.577)과 2014년(3.373)이 두드러진다. 반면, 2017년 이후 혼인한 집단(2017년: 0.331, 2018년: 0.162, 2019년: 0.075 등)은 이용 확률이 낮게 추정되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혼인 시점이 최근일수록 아직 영유아 자녀가 매우 어리거나 출산 이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여부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에 비해 남편 외벌이(0.531)나 부부가 모두 공식 일자리가 없는 경우(0.523)에는 이용 가능성이 큰 폭으로 낮았다. 반면, 아내 외벌이 상태일 경우(오즈비 1.0 이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약간 높아 오히려 맞벌이 가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확인되었다. 6세 이하 자녀가 1명 늘어날 때 오즈비가 4.277로 매우 크게 상승하고, 7세 이상 자녀도 1명 증가 시 1.288 정도로 양(+)의 효과를 보이지만 영유아 자녀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이는 영유아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육아 부담이 커 외부 보육서비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을 뒷받침한다.

연도 더미는 혼인 연도와 별개로 연차별 제도·사회 환경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되었는데, 2018년에 비해 매년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1년 오즈비가 9.976로 매우 높게 나타나, 해당 시기 육아·보육 정책이 강화되었거나 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오즈비가 1.116으로 보육서비스 이용이 약간 높은 반면, 농어촌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규모와 보육시설 접근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영유아 보육서비스 활용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6) 전체 가구 로짓 분석 결과(이주배경 가구 여부)

변수		오즈비	표준오차	한계효과	Z값	P값
이주배경 가구여부 (기준= 내국인)	외국인+내국인	0.541	0.004	-0.110	-76.49	0.000
	외국인+다문화 가구	0.711	0.013	-0.061	-18.62	0.000
남편 연령		1.006	0.000	0.001	14.31	0.000
아내 연령		0.993	0.000	-0.001	-15.85	0.000
남편 교육 수준 (기준=초졸 이하)	중졸	1.231	0.026	0.036	9.8	0.000
	고졸	1.124	0.019	0.020	6.86	0.000
	대졸	0.895	0.015	-0.020	-6.52	0.000
	대학원 졸	0.746	0.013	-0.052	-16.61	0.000
아내교육 수준(기준= 초졸 이하)	중졸	1.191	0.024	0.031	8.74	0.000
	고졸	1.153	0.019	0.025	8.65	0.000
	대졸	0.883	0.014	-0.022	-7.6	0.000
	대학원 졸	0.758	0.013	-0.049	-16.08	0.000
남편의 혼인 당시 직업 (기준= 사무직)	관리자·전문가	1.024	0.004	0.004	5.96	0.000
	서비스업, 판매직	1.182	0.006	0.030	34.68	0.000
	농업	1.101	0.016	0.017	6.51	0.000
	장치, 기계조작	1.134	0.006	0.022	24.08	0.000
	단순노무	1.219	0.013	0.035	19.25	0.000
	군인	1.005	0.012	0.001	0.42	0.677
	학생, 가사, 무직	1.147	0.010	0.024	16.22	0.000
아내의 혼인 당시 직업 (기준= 사무직)	미상	1.047	0.014	0.008	3.29	0.001
	관리자·전문가	0.963	0.004	-0.007	-9.08	0.000
	서비스업, 판매직	1.019	0.005	0.003	3.65	0.000
	농업	0.962	0.030	-0.007	-1.24	0.214
	장치, 기계조작	0.999	0.013	0.000	-0.09	0.93
	단순노무	0.995	0.017	-0.001	-0.29	0.774
	군인	1.124	0.016	0.021	8.06	0.000
실제 혼인 연도 (기준= 2009)	학생, 가사, 무직	1.226	0.005	0.036	46.24	0.000
	미상	1.045	0.014	0.008	3.35	0.001
	2010	1.147	0.090	0.021	1.74	0.082
	2011	1.987	0.152	0.098	8.98	0.000
	2012	2.635	0.186	0.131	13.69	0.000
	2013	4.577	0.310	0.183	22.49	0.000
	2014	3.373	0.227	0.156	18.09	0.000
	2015	1.720	0.115	0.079	8.08	0.000
2016	0.751	0.050	-0.047	-4.26	0.000	
2017	0.331	0.022	-0.193	-16.49	0.000	
2018	0.162	0.011	-0.322	-27.09	0.000	

170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변수		오즈비	표준오차	한계효과	Z값	P값
	2019	0.075	0.005	-0.448	-38.53	0.000
	2020	0.032	0.002	-0.556	-50.87	0.000
	2021	0.010	0.001	-0.647	-66.76	0.000
	2022	0.004	0.000	-0.688	-74.67	0.000
맞벌이 여부 (기준= 맞벌이)	남편 외벌이	0.531	0.002	-0.112	-199.46	0.000
	아내 외벌이	1.038	0.007	0.006	5.57	0.000
	공식 일자리 없음	0.523	0.003	-0.115	-102.94	0.000
6세 이하 자녀 수		4.277	0.018	0.257	345.36	0.000
7세 이상 자녀 수		1.288	0.007	0.045	47.82	0.000
부부 동거 (기준= 동거)	따로 거주: 국내	0.973	0.005	-0.005	-5	0.000
	따로 거주: 국외	0.856	0.009	-0.028	-14.73	0.000
조부모 동거 여부		0.971	0.005	-0.005	-5.91	0.000
거주지 이동 (기준= 마이동)	도내 이동	0.956	0.004	-0.008	-11.18	0.000
	도외 이동	0.828	0.005	-0.034	-30.91	0.000
거처 종류 (기준= 단독 주택)	아파트	1.011	0.005	0.002	2.29	0.022
	연립주택	1.018	0.011	0.003	1.64	0.101
	다세대주택	1.022	0.007	0.004	3.42	0.001
	기타 주택	0.828	0.007	-0.034	-22.22	0.000
주택 가격 (기준= 0.6억 이하)	0.6억~1.5억 원 이하	1.004	0.009	0.001	0.4	0.688
	1.5억~3억 원 이하	0.953	0.008	-0.008	-5.44	0.000
	3억~6억 원 이하	0.874	0.008	-0.024	-14.52	0.000
	6억 원 초과	0.687	0.007	-0.067	-34.94	0.000
	주택 없음	0.921	0.008	-0.015	-9.96	0.000
연도 더미 (기준= 2018)	2019	2.184	0.010	0.121	175	0.000
	2020	4.215	0.022	0.226	280.85	0.000
	2021	9.976	0.059	0.354	386.9	0.000
	2022	23.705	0.162	0.461	464	0.000
지역구분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1.116	0.008	0.019	15.61	0.000
	농어촌	0.943	0.006	-0.010	-8.72	0.000
상수항(_cons)		0.017		-19.83	0	
N		2,908,102	Pseudo R <sup>2</sup>	0.2268	LL	-1535420.8

출처: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 SDC 센터 이용.

〈표 4-27〉은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지만, 이전 모델에서 사용했던 ‘이주배경 가구 여부’ 대신 ‘아내의 국적’을 포함하였다. 즉, 한국인 부부와 외국 국적 아내를 둔 가구를 직접 비교하여, 아내 국적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부부의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맞벌이 여부, 거주 종류, 주택가격 등 대부분의 통제변수들은 앞에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한 방향성을 유지하며, 아내 국적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는 모두 1 미만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동남아(0.497), 중국계(0.602), 중앙아시아·러시아(0.558), 북미(0.53), 기타(0.633) 국적 아내를 둔 가구일수록, 한국 국적 아내를 둔 가구에 비해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아내가 외국 국적일 경우 자녀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확인된 ‘이주배경 가구 여부’와 유사한 맥락으로, 언어·문화적 장벽이나 정보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보육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7〉 전체 가구 로짓 분석 결과(모의 국적)

변수		오즈비	표준오차	한계효과	Z값	P값
아내 국적 (기준=한국인)	동남아	0.497	0.005	-0.125	-69.9	0.000
	중국계	0.602	0.008	-0.091	-36.81	0.000
	중앙아·러시아	0.558	0.022	-0.104	-14.56	0.000
	북미	0.530	0.020	-0.113	-16.66	0.000
	기타	0.633	0.024	-0.082	-12.21	0.000
남편 연령		1.006	0.000	0.001	13.54	0.000
아내 연령		0.989	0.000	-0.002	-24.31	0.000
남편 교육 수준 (기준=초졸 이하)	중졸	1.212	0.026	0.034	9.05	0.000
	고졸	1.118	0.019	0.019	6.53	0.000
	대졸	0.896	0.015	-0.019	-6.49	0.000
	대학원 졸	0.744	0.013	-0.052	-16.69	0.000
아내	중졸	1.180	0.024	0.029	8.26	0.000

172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변수		오즈비	표준오차	한계효과	Z값	P값
교육 수준 (기준= 초졸 이하)	고졸	1.161	0.019	0.026	9.02	0.000
	대졸	0.902	0.015	-0.018	-6.26	0.000
	대학원 졸	0.776	0.013	-0.045	-14.68	0.000
남편의 혼인 당시 직업 (기준= 사무직)	관리자·전문가	1.020	0.004	0.003	4.95	0.000
	서비스업, 판매직	1.179	0.006	0.029	34.15	0.000
	농업	1.109	0.016	0.018	6.98	0.000
	장치, 기계조작	1.133	0.006	0.022	23.88	0.000
	단순노무	1.213	0.012	0.034	18.77	0.000
	군인	0.995	0.012	-0.001	-0.45	0.000
	학생, 가사, 무직	1.140	0.010	0.023	15.55	0.000
아내의 혼인 당시 직업 (기준= 사무직)	미상	1.049	0.015	0.009	3.49	0.000
	관리자·전문가	0.961	0.004	-0.007	-9.55	0.000
	서비스업, 판매직	1.013	0.005	0.002	2.59	0.01
	농업	0.974	0.030	-0.005	-0.86	0.391
	장치, 기계조작	0.993	0.013	-0.001	-0.58	0.563
	단순노무	0.977	0.017	-0.004	-1.32	0.186
실제 혼인 연도 (기준= 2009)	군인	1.115	0.016	0.019	7.49	0.000
	학생, 가사, 무직	1.218	0.005	0.035	44.73	0.000
	미상	1.041	0.014	0.007	3.02	0.003
	2010	1.137	0.089	0.020	1.63	0.103
	2011	1.958	0.150	0.095	8.8	0.000
	2012	2.594	0.183	0.128	13.48	0.000
	2013	4.551	0.307	0.181	22.43	0.000
	2014	3.344	0.224	0.154	17.98	0.000
	2015	1.698	0.114	0.077	7.9	0.000
	2016	0.738	0.049	-0.050	-4.53	0.000
	2017	0.322	0.022	-0.197	-16.88	0.000
	2018	0.157	0.011	-0.327	-27.6	0.000
	2019	0.072	0.005	-0.453	-39.14	0.000
2020	0.031	0.002	-0.561	-51.61	0.000	
2021	0.010	0.001	-0.652	-67.64	0.000	
2022	0.004	0.000	-0.692	-75.65	0.000	
맞벌이 여부 (기준= 맞벌이)	남편 외벌이	0.531	0.002	-0.112	-199.24	0.000
	아내 외벌이	1.028	0.007	0.005	4.14	0.000
	공식 일자리 없음	0.517	0.003	-0.117	-104.64	0.000
6세 이하 자녀 수	4.260	0.018	0.256	344.54	0.000	
7세 이상 자녀 수	1.048	0.007	0.008	7.45	0.000	
아내의 초혼 여부	0.636	0.005	-0.078	-58.8	0.000	
부부동거	국내 거주	0.973	0.005	-0.005	-4.86	0.000

변수		오즈비	표준오차	한계효과	Z값	P값
(기준=동거)	국의 거주	0.801	0.008	-0.039	-21.27	0.000
조부모 동거 여부		0.970	0.005	-0.005	-6.26	0.000
거주지 이동	도내 이동	0.955	0.004	-0.008	-11.44	0.000
	도외 이동	0.827	0.005	-0.034	-31.06	0.000
거처 종류	아파트	1.013	0.005	0.002	2.74	0.006
	연립주택	1.017	0.011	0.003	1.51	0.13
	다세대주택	1.022	0.007	0.004	3.44	0.001
	기타 주택	0.827	0.007	-0.034	-22.38	0.000
주택 가격	0.6억~1.5억 원 이하	1.005	0.009	0.001	0.53	0.599
	1.5억~3억 원 이하	0.955	0.008	-0.008	-5.22	0.000
	3억~6억 원 이하	0.876	0.008	-0.023	-14.26	0.000
	6억 원 초과	0.687	0.007	-0.067	-34.95	0.000
	주택 없음	0.920	0.008	-0.015	-10.08	0.000
연도 터미	2019	2.195	0.010	0.122	176	0.000
	2020	4.261	0.022	0.227	282.56	0.000
	2021	10.155	0.061	0.356	389	0.000
	2022	24.317	0.167	0.463	466.05	0.000
지역 구분	중소도시	1.112	0.008	0.019	15.09	0.000
	농어촌	0.941	0.006	-0.011	-8.97	0.000
상수항(const)		0.441	0.032		-11.45	0.000
N		2,908,102	Pseudo R <sup>2</sup>	0.2274	LL	-1534253.5

출처: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 SDC 센터 이용.

〈표 4-28〉은 이주배경 가구만을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 중 1인 이상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짓 모형으로 추정 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 전체 가구(한국인 부부 + 이주배경 가구)를 모두 포함했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일부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효과 방향이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전 분석에서는, 아내가 외국 국적일수록 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배경 가구만 따로 살펴본 이번 결과에서는, 국적별로 양(+) 또는 음(-)의 효과가 엇갈리는 현상이 발견된다. 가령, 동남아·중국계·중앙아시아·러시아·기타 국적의 아내가 있는 가구는 오즈비가 모두 1을 넘

어, 한국 국적 아내를 둔 이주배경 가구와 비교했을 때 보육서비스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 북미 출신 아내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 등, 이주배경 가구 내부에서도 국적에 따라 이용 행태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가 외국 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주배경 가구를 단일 범주로 보는 시각이 놓칠 수 있는 이질성을 보여준다. 이는 앞의 전체 가구 분석에서 “외국 국적 아내”를 하나의 범주로 묶었을 때 주로 음(-)의 효과로 나타났던 결과와 대조되며, 이주배경 가구에 한정해 국적별로 세분화하면 일부 국적군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실제로 국적·문화권 배경에 따라 보육서비스 정보 획득 경로나 정책 혜택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주민 커뮤니티나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도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남편 연령은 유의한 양(+)의 효과를 유지하지만 아내 연령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결과와 부분적으로 다른 패턴을 드러낸다. 부부의 학력 수준 역시 ‘대졸 이상’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은 유사하면서도, 세부값이나 유의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편·아내의 직업 특성에서는, 전체 가구 분석과 어느 정도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는 직종이 있는 한편, 이주배경 가구만 추출했을 때 ‘관리자·전문가’ 직종이 아내에게서만 유의한 음(-)의 효과를 주는 등 차별적 결과가 관찰된다.

〈표 4-28〉 이주배경 가구 대상 로짓 분석 결과

변수		오즈비	표준 오차	한계 효과	Z값	P값
아내 국적	동남아	1.074	0.028	0.013	2.74	0.006
	중국계	1.191	0.030	0.033	7.04	0.000
	중앙아·러시아	1.126	0.051	0.022	2.62	0.009
	북미	0.943	0.040	-0.011	-1.38	0.168
	기타	1.224	0.052	0.038	4.8	0.000
남편 연령		1.005	0.001	0.001	4.78	0.000
아내 연령		0.998	0.001	0.000	-1.17	0.242
남편 교육 수준	중졸	0.981	0.046	-0.004	-0.41	0.679
	고졸	0.968	0.038	-0.006	-0.84	0.403
	대졸	0.834	0.033	-0.034	-4.54	0.000
	대학원 졸	0.702	0.035	-0.067	-7.15	0.000
아내 교육 수준	중졸	1.089	0.038	0.016	2.46	0.014
	고졸	1.102	0.034	0.018	3.15	0.002
	대졸	0.928	0.030	-0.014	-2.27	0.023
	대학원 졸	0.804	0.036	-0.041	-4.92	0.000
남편의 혼인 당시 직업	관리자·전문가	1.001	0.022	0.000	0.04	0.967
	서비스업, 판매직	1.099	0.026	0.018	4.03	0.000
	농업	1.117	0.042	0.021	2.97	0.003
	장치, 기계조작	1.102	0.025	0.018	4.26	0.000
	단순노무	1.136	0.035	0.024	4.08	0.000
	군인	0.942	0.060	-0.011	-0.93	0.351
	학생, 가사, 무직	1.073	0.042	0.013	1.8	0.072
미상	0.982	0.044	-0.004	-0.42	0.676	
아내의 혼인 당시 직업	관리자·전문가	0.916	0.028	-0.016	-2.87	0.004
	서비스업, 판매직	0.979	0.029	-0.004	-0.73	0.464
	농업	1.082	0.057	0.015	1.51	0.131
	장치, 기계조작	1.014	0.041	0.003	0.34	0.733
	단순노무	1.010	0.039	0.002	0.26	0.793
	군인	1.104	0.053	0.019	2.06	0.039
	학생, 가사, 무직	1.092	0.027	0.017	3.55	0.000
미상	1.033	0.041	0.006	0.83	0.407	
혼인 연도	2010	0.785	0.249	-0.044	-0.76	0.445
	2011	1.023	0.309	0.004	0.07	0.94
	2012	1.647	0.465	0.086	1.77	0.077
	2013	4.514	1.228	0.227	5.54	0.000
	2014	3.806	1.027	0.207	4.96	0.000
	2015	1.975	0.532	0.115	2.53	0.011
	2016	0.925	0.249	-0.014	-0.29	0.771

176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변수		오즈비	표준 오차	한계 효과	Z값	P값
	2017	0.440	0.118	-0.151	-3.05	0.002
	2018	0.222	0.060	-0.272	-5.58	0.000
	2019	0.101	0.027	-0.392	-8.49	0.000
	2020	0.047	0.013	-0.482	-11.31	0.000
	2021	0.023	0.006	-0.538	-13.69	0.000
	2022	0.018	0.005	-0.551	-13.6	0.000
맞벌이 여부	남편 외벌이	0.612	0.009	-0.094	-32.29	0.000
	아내 외벌이	1.035	0.027	0.007	1.3	0.194
	공식 일자리 없음	0.548	0.012	-0.115	-28.15	0.000
6세 이하 자녀 수		3.485	0.063	0.236	68.99	0.000
7세 이상 자녀 수		1.166	0.027	0.029	6.61	0.000
아내의 초혼 여부		0.743	0.013	-0.056	-16.67	0.000
부부 동거	국내 거주	1.217	0.055	0.037	4.37	0.000
	국외 거주	0.828	0.014	-0.036	-11.07	0.000
조부모 동거 여부		0.895	0.014	-0.021	-6.98	0.000
거주지 이동	도내 이동	0.935	0.020	-0.013	-3.17	0.002
	도외 이동	0.900	0.029	-0.020	-3.23	0.001
거처 종류	아파트	1.098	0.017	0.018	6.03	0.000
	읍면부 주택	1.044	0.042	0.008	1.07	0.283
	단독/연립주택	1.082	0.023	0.015	3.63	0.000
	기타 주택	0.867	0.025	-0.027	-4.92	0.000
주택 가격	0.6억~1.5억 원 이하	1.073	0.031	0.013	2.41	0.016
	1.5억~3억 원 이하	1.063	0.034	0.012	1.93	0.054
	3억~6억 원 이하	1.010	0.039	0.002	0.25	0.8
	6억 원 초과	0.696	0.037	-0.068	-6.73	0.000
	주택 없음	0.943	0.024	-0.011	-2.3	0.021
연도 더미	2019	2.007	0.042	0.105	33.37	0.000
	2020	3.399	0.080	0.193	52.3	0.000
	2021	8.810	0.232	0.358	82.76	0.000
	2022	21.658	0.642	0.499	103.74	0.000
지역 구분	중소도시	1.014	0.025	0.003	0.58	0.56
	농어촌	0.887	0.021	-0.023	-5	0.000
상수항(_cons)		0.174	0.049		-6.16	0.000
N		146,461	Pseudo R <sup>2</sup>	0.1937	LL	-79440.259

출처: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 SDC 센터 이용.

## 나. 지역 단위 분석

〈표 4-29〉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멀티레벨 로짓 회귀모형(melogit)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 수준 변수는 앞서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므로, 본 해석에서는 지역 수준 변수에 중점을 두고 결과를 설명한다. 모형 ①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구다양성 지수를 사용한 경우로, 인구다양성 지수는 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전체 인구 구성의 다양성이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역 내 아동 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수는 보육서비스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의 수용 능력이 클수록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모형 ②는 6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인구다양성 지수를 사용한 분석이다. 이 경우 역시 인구다양성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아동 수 대비 정원 수 변수는 동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전체 인구 기준이든, 영유아 인구 기준이든 인구다양성이 보육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보육시설 정원의 여유도는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표 4-29〉 전체 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다층모형 분석 결과(인구다양성 지수)

	모형 ① 전체인구다양성				모형 ② 6세 이하 인구다양성			
	오즈비	표준 오차	한계 효과	P값	오즈비	표준 오차	한계 효과	P값
인구다양성 지수	1.026	0.055	0.005	0.627	0.945	0.052	-0.01	0.311
정원 대비 아동 수	1.011	0.003	0.002	0.000	1.011	0.003	0.002	0.000
총정원충족율	0.975	0.015	-0.004	0.112	0.975	0.015	-0.004	0.107
_cons	0.219	0.016		0.000	0.220	0.016		0.000
var(_cons)	0.052	0.002			0.052	0.002		
N	2905535				2905535			
group	3,417				3417			
LL	-1526337				-1526337			

출처: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 SDC 센터 이용.

다음으로, 이주배경 가구를 대상으로 한 멀티레벨 로짓 회귀모형(melogit) 분석을 살펴본다. 읍·면·동 단위 무작위 절편을 적용한 결과, 모형 ③에서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오즈비(0.95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의 인구다양성이 보육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시사한다. 모형 ④는 ‘다문화 가구 비중’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는데, 해당 변수의 오즈비는 1.003(p=0.713)으로 추정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③에서 다문화센터 존재 여부의 오즈비는 1.0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으나, 모형 ④로 확장하면 오즈비가 0.867(p<0.001)로 바뀌어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

(표 4-30) 이주배경 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다층모형 분석 결과

	모형 ③				모형 ④			
	오즈비	표준 오차	한계 효과	P값	오즈비	표준 오차	한계 효과	P값
다문화 가구 비중	-	-	-	-	1.003	0.007	0.000	0.713
인구다양성 지수	0.953	0.096	-0.009	0.629	0.970	0.097	-0.006	0.759
정원 대비 아동 수	1.007	0.007	0.001	0.297	0.968	0.054	-0.006	0.559
충정원충족률	0.977	0.055	-0.004	0.673	1.078	0.033	0.014	0.014
다문화센터 존재 여부	1.091	0.033	0.016	0.005	0.867	0.029	-0.026	0.000
_cons	0.093	0.027		0.000	0.101	0.030		0.000
var(_cons)	0.085	0.006			0.082	0.006		
N	142,165				142,165			
group	3,346				3,346			
LL	-79118.02				-79108.7			

출처: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 SDC 센터 이용.

흥미로운 점은, 전체 가구 대상 분석과 달리 이주배경 가구만을 분리해서 보면, 아동 수 대비 정원 수는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p=0.297, 0.559$ ). 이는 이주배경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결정짓는 데 시설 공급의 여유도(정원충족도)가 핵심적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다문화센터 존재 변수는 모형에 따라 방향이 달라졌으므로, 센터가 위치한 지역적 맥락이나 다문화 가구 밀집도와 상호작용하는 추가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과의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이주배경 가구나 외국인 가정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서류 작성·행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한국어에 능통한 이주배경 부모가 대신 통역을 해주거나,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지역 다문화센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표 4-32〉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인구다양성 지수 대신 지역 내 주요 국적별 인구의 비중과 이주배경 가구의 비중을 포함해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내 중국계 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오즈비 = 0.389,  $p = 0.006$ ) 이주배경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북미계 인구 비중 역시 오즈비가 0에 수렴할 정도로 매우 작고( $p < 0.001$ ), 이용 확률에 강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기타 국적·동남아·중앙아시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아동 수 대비 정원 수로 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향을 지역 보육 인프라 특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 국적 집단의 분포 자체가 결정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중국계 또는 북미계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산업·고용 구조나 사회문화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다문화 가구 인구 비중의 오즈비는 727.41로 매우 크게 나타나, 다문화 가구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극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보육서비스 관련 정보 교류가 더욱 활발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다. 실제로 외국인 영유아 분석에서 “이주배경 영유아의 비중이 높은 보육시설일수록, 부모들은 주변인의 소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아동 수 대비 보육시설 수와 총정원충족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다문화센터가 있는 지역(오즈비 = 1.092,  $p = 0.003$ )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센터가 보육서비스 관련 정보 접근성과 상담·연계 기능을 제공하여 다문화 가구의 공식 보육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을 재확인해준다.

(표 4-31) 다문화 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다층모형 분석 결과(국적별 비중)

모형 ⑤	오즈비	표준 오차	한계 효과	Z값	P값
동남아 출신 인구 비중	0.917	0.319	-0.016	-0.25	0.802
중국계 출신 인구 비중	0.389	0.133	-0.176	-2.76	0.006
중앙아시아 출신 인구 비중	0.195	0.243	-0.304	-1.31	0.189
북미계 출신 인구 비중	0.000	0.000	-4.738	-7.88	0
기타 국적 출신 인구 비중	3.688	6.763	0.243	0.71	0.477
다문화 가구 인구 비중	727.410	888.260	1.225	5.4	0
아동 수 대비 보육시설 수	1.004	0.007	0.001	0.62	0.534
총정원충족률	1.012	0.057	0.002	0.2	0.838
다문화센터 존재 여부	1.092	0.033	0.016	2.93	0.003
_cons	0.085	0.025		-8.46	0
var(_cons)	0.074	0.006			
N	142,165		Wald	26358.38	
group	3,346		LL	-79062.3	

출처: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통계청,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 SDC 센터 이용.

정리하면, 지역별 국적 구성은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국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주배경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낮아지는 음(-)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북미계 인구 비중도 이용률을 크게 떨어뜨렸지만(계수가 0에 수렴), 표본 수가 극히 적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동남아·중앙아시아·기타 국적 비중은 일관되게 유의하지 않았다.

다문화 가구 비중은 모형에 따라 효과가 달랐는데, 다문화 가구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이용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집단적 정보 교류나 상호 돌봄 네트워크 효과를 시사한다. 다문화센터 존재 여부 역시 세 모형 두에서 대체로 양의 방향을 보였으며, 특히 모형 ③과 모형 ⑤에서 유의미했다. 다문화센터가 보육 관련 정보·상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공식 보육 서비스 활용을 촉진한다는 현장 인터뷰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시설 공급 여건(아동 수 대비 정원 수)과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는 이주배경 가구 모델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총정원충족률은 일부 모형에서만 제한적으로 유의했다. 즉, 다문화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은 물리적 공급량보다 다문화센터와 같은 지원 인프라 및 집단적 네트워크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구 밀집 지역의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고, 다문화센터의 보육 정보·홍보·통역 기능을 체계화하는 정책이 보육서비스 이용률 제고에 핵심적일 것으로 보인다.



# 제5장

##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제언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변동 속에서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다양성 지수로 측정된 지역사회 다양성이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민자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형성된 동질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육 이용률에 작용하는지, 제도적 지원이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 읍·면·동의 인구다양성 지수는 평균 0.0527에서 0.0568로 7.8% 상승하며 전국적인 인구다양성은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컸는데, 산업단지 및 공단이 밀집한 경기 남부와 충청·경상권과 농어업·관광 의존도가 높은 전남·강원 등의 중소농어촌에서도 인구다양성이 증가한 지역이 다수 나타나, 제조·물류업 외에 계절근로·서비스업 유입이 지역 다양성 확대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 서부 도서 지역, 무주·인제 등 산간 내륙 일부는 고령화·인구 유출로 지수가 하락해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광역 단위로는 인천(+22%), 대전(+18%), 전남·전북(+17%) 등 중부권과 남해안권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고, 세종(-9.5%)과 서울(-0.9%)처럼 신규 행정동 편입 또는 기존 외국인 거주지 재편이 진행된 지역은 소폭 감소했다. 인구다양성은 산업·농업·관광 클러스터를 따라 주변 생활권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도서·산간 고령 지역의 '다양성 정체'가 병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다양성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통계 분석 결과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체 외국인 인구 비중'보다 '다문화 가구 비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국적상 외국인 비중이 큰 곳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결혼이민이나 귀화를 통해 일정한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다문화 가구가 많이 분포할수록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뚜렷이 상승하였다. 이는 기존 해외 연구(Fram & Kim, 2008; Yoshikawa & Kalil, 2011; Johnson et al., 2017; Boggess & Garcia, 202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주배경 가구가 언어·문화적 장벽에 대해 자국 출신 간 긴밀한 결속으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보육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보육료 지원, 외국인 가구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앙정부가 아직 외국인 영유아 지원제도를 충분히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육료 지원정책은 이용률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보였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보육서비스 격차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실증분석에서도, 다문화 가구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우선순위나 동등 기회를 부여하는 정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국인 대비 낮은 이용률이 이어졌다. 이는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언어·문화 장벽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어렵고, 다문화·외국인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다언어 정보 제공, 문화 매개자 배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다문화 가구 내부 분석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 가구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가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함이 재확인되었다. 동질적 네트워크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각종 지원 제도 활용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실제 읍면동 단위에서 다문화가족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면 보육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시설 공급 측면에서 영유아 수 대비 보육 정원은 다른 지역 특성에 비해 다문화 가구에서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 결과도 나타나, 시설이 충분해도 문화·언어적 접근성이 낮으면 실제 이용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Fram & Kim, 2008; Yoshikawa & Kalil, 2011; Boggess & Garcia, 2022).

결국 본 연구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 수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구 밀집도, 보육시설 접근성, 다문화센터 같은 지원 기제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인구다양성'이라는 거시 지표가 높아도, 정작 다문화 가구의 정보 교환·문화 매개·제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낮은 이용률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다언어 정보 제공이나 문화적 차이를 보완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통합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를 행정통계 자료(인구총조사, 보육통계, 신혼부부통계 등)를 통해 지역 수준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지역 단위(시군구)와 가구 단위(신혼부부 가구)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이주배경 영유아가 실제로 보육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인구다양성 지수', '다문화 가구 비중', '외국인 가구 비중' 등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구가 일정 규모로 밀집된 지역일수록 이용률이 높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FGI 조사를 통해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문하는 계기가 주변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가정의 추천을 통해서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센터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 역시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개입이 실제 이용률 격차를 완화할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영유아 수 대비 보육 정원 등 전통적인 보육 공급지표가 지역 전반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주배경 가구에 국한했을 때 단순히 '충분한 공급'만으로는 이용률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제적·문화적 지원체계가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설을 늘리더라도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음을 재확인해주는 결과로, 정책적 함의가 크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이민·다문화 분야에서 사용 사례가 많지 않았던 읍면동 단위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활용하고, 이를 보육 인프라·지자체 조례·다문화 네트워크 특성과 연계하여 다층적 분석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도 방법론적

진전을 보였다. 보육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이민자 아동의 학업 성취와 사회통합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Magnuson et al., 2006; Eremenko & Unterreiner, 2023)을 뒷받침하면서, 이민정책과 보육정책을 통합 모델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 역시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한다. 첫째, 분석 범위를 보육서비스 영역에 한정함으로써 이주배경 인구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한 정주 여건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향후에는 학령기 아동이나 노인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실제 생활공간에서 이뤄지는 복지서비스 현황과 한계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다문화 가구 구성원의 출신 국적을 분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신 국가 정보를 제공하지만,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일반 가구에서는 국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구는 국적별로 구분되지 못하고, 사실상 하나의 ‘국적’처럼 묶여 인구다양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세부적 분석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인 외국인과 다문화 아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행정자료의 공개가 미흡한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체류 자격별 보육 서비스 접근성 비교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분석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자료의 추가적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 분석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했으나, 시간·재정적 제약으로 질적 연구를 충분히 병행하지 못했다. 특히 ‘중국계 아동 밀집 지역에서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현상’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원인을 해석하려면 추가적인 질적 조사와 지역 사례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과 인터뷰를 하였으나 중국계 외국인 아동이 높은 지역을 특정하여 질적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아동은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다. 미등록 아동 규모를 전국 단위로 추정된 선행 연구는 있으나, 본 연구는 지역적 분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분석 범주에 포함할 수 없었다. 미등록 아동의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안이 진행 중인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의무화, 임시번호 부여 등 행정망 편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미등록·무국적 아동 규모와 특성을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제언

### 1. 시군구 내 다문화 생활권의 지정 및 관리

제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다양성 지수가 상위 3분위에 속하는 읍면동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구역은 산업단지·농공단지·관광지·신도시 등 입지와 유입인구의 특성이 뚜렷해, 단일 행정동을 넘어 생활권 단위로 정책 수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시군구는 지역 내 이주배경 인구가 많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다문화 생활권을 지정하고, 생활권별로 거점시설, 보육시설, 고용지원, 가족 지원을 패키지로 지역 주도의 지원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성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성과도 부합되며, 시군구 단위 주도로 운영되는 이주배경 인구를 위한 종합계획 혹은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읍면동 생활권을 바탕으로 축제나 마켓, 이주배경 인구의 정책 필요를

반영하여 동네도서관 내에 ‘다언어 섹션’을 마련하는 것, 아동 및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읍면동 주민자치회 내 ‘이주배경 인권 옴부즈맨’을 지정하거나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주배경 코디네이터’ 등을 지정하여 지역 내 활동가와 이중 언어가 가능한 지역 주민이 행정·생활 중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2. 가족 단위 정착을 고려한 보육 지원정책 활성화

가족 단위 이주가 확산되면 자녀의 보육·교육 문제가 외국인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제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보육시설 등록을 권장하거나 조건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새로운 원아(학생)가 유입되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외국인 가정 보육 지원 계획’을 명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확대, 다언어·다문화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보편 보육 보장을 제언한다.

첫째, 보육료 지원 확대이다. 내국인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되, 가족 규모와 체류 자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설계를 세분화한다. 이미 충남의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언어·다문화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이다. 지역에 어린이집이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언어·문화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 전담 교사 또는 ‘문화 매개자’를 배치하고, 보육 실습 현장에서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부모가 한국어

가 서툰 경우, 입소 절차부터 안내문, 상담 서비스 등이 다국어로 이루어 지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보편 보육 보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상의 한계로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아동에 대해 출생 등록 의무화 및 임시번호 부여 등을 통해 행정망에 편입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조례나 내부 지침을 통해, 체류 자격 미비를 이유로 보육시설 이용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일시 보호나 긴급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에 이주한 외국인 가정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가족 전체의 정착 의사가 훨씬 높아지고, 나아가 지자체가 원하는 장기 체류·지역 인구 유지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3.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영유아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 세분화

결혼이민·귀화를 통해 법적 지위가 비교적 안정된 다문화 가구와, 결혼이민과 무관한 외국인 가구 사이에는 제도 편입의 정도나 언어 장벽, 정보 접근성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농업,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E-7-4R 등)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가족은 아직까지 한국어에 미숙하고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미등록·준등록 상태인 경우 보육서비스나 공공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분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 문화, 언어,

제도적 장벽 완화가 필요하다.

첫째,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분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구는 이미 결혼이민자 중심의 제도(다문화가족센터 등)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나 외국인 고용 허가제와 연계된 일자리·취업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반면 외국인 가구(특히 비전문 분야)는 언어나 문화적 이질감이 크므로, 초기에 한국어교육, 생활밀착형 정보 안내, 자녀 학교 안내 등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둘째,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법적 신분 보장이 미흡한 미등록 아동은 공적 서비스에서 자주 제외된다. 장기 체류할 의사가 있어도 ‘서류상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 정착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한시적 체류 허가 또는 교육비자 전환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주배경 가정이 가지는 문화 및 언어 장애요인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육료 지원은 이주배경 가정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언어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함께 제공하여, 이주민 가정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밀집 지역에서는 ‘다문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및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4. 보육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통한 장기적 사회통합 기반 마련

이주배경 가정에 대한 보육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지역 간 보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

재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농어촌·중소도시 일부 지역은 어린이집·유치원이 부족하거나, 정원 대비 운영비가 부족해 시설이 폐원 위기에 놓여 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로 가족이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동시에 정원충족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나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아이만 늘어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관점의 필수보육시설의 지정 및 지원과 시설 재정비가 필요하다. 지자체별 보육 수요와 인구 특성을 단순히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까지 파악하여 보육시설의 감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보육시설은 다언어·다문화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등을 통해 예산·인력을 집중 지원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아동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보육 단계에서 소외된 이주배경 아동은 이후 학령기에도 언어·문화·학습에서 뒤처질 위험이 커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통합과 평등을 저해한다(Van Lancker, 2013; Van Lancker & Pavolini, 2023; Kulic et al., 2019). 따라서 초기부터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여 이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특화형 비자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녀는 지역 학교 인프라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지자체 협력 모델을 구축해 방과 후 보육, 한국어 보충학습, 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자체가 지역 재정 여건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문화 매개자 배치 등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 격차가 크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육서비스 표준과 재정 보전 체계를 마련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캐나다의 아틀랜틱 이민 프로그램(AIP)처럼, 외국인 가정에 대해 맞춤형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관(다문화센터·NGO 등)에게 일정한 예산을 지속해서 지원해 주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가족 단위 이주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다원화를 촉진하는 잠재력 높은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단순히 “비자를 발급하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육·교육·의료·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미등록 아동 등 제도 밖에 놓인 이주배경 가구까지 포괄하는 세밀한 지원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외국인 가정 보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별 격차를 완충할 수 있는 재정·법·행정 지원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시민들도 이주민 가족을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환대하는 문화를 키워야 한다. 나아가, 향후 어린이집·유치원 단계를 넘어 학령기 아동, 노인 동반 이주 등으로 복지 수요가 확장되는 현실을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관련 부처가 통합적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주배경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한국 사회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폭 넓고 장기적인 시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3). 외국인 아동 보육과 아동권리. 경기 WiFi 332호 (2023.4.10.) <https://www.gwff.kr/base/board/list?boardManagementNo=43&menuLevel=3&menuNo=73>
- 김정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205-246.
- 이민경, 이수정. (2011). “다문화 아동, 청소년” 정책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 정책용어와 방향성에 대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5(2), 1-37.
- 최병두, 이용승, 이민경. (2018). 「지구화시대 다문화와 시민윤리」. 열린길.
- 고용노동부. (2018-2022).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통계 자료]. 고용노동부.
- 교육부.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육통계. 어린이집정보통계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oais/openapi/OpenApiSll.jsp)
- 곽영길, 오세연. (2010). 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4(1), 217-238.
- 관계부처합동. (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2021.7.7.)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2). 쉬운말로 읽는 아동권리협약과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 국립국어원. (2024.12.) 표준국어대사전 (2024.12.27. 업데이트).
- 기획재정부. (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2021.7.7.)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55738](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55738) (2024.12.14. 접속)
- 김미정, 임예슬. (2020).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돌봄 실태와 지원 방안.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윤경, 문태현, 허선영, 정운영. (2014).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

요인 분석. 주거환경, 12(2), 1-15.

김혜순. (2015). 지역사회연구와 이민현상-연구대상과 자료로서 지자체 이민정책의 학술적 의의와 분석제안. 지역사회학, 16(3), 31-67.

김희주, 김영미, 김혜미, 김수경. (2021). 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 전문영향평가. 아동권리보장원.

김희철, 안건혁. (2011). 이주회로별 수도권 외국인 거주지역 공간분포와 영향요인. 국토계획, 46(5), 233-248.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실. (2023.10.10.) '이주아동에게 코리안드림은 없다.. 보육에서부터 차별 배제 여전' [보도자료].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2597133&menuNo=600101&pageIndex=1>

류형철. (2024). 국내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추진방향.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 51-82).

[http://www.kaipa21.or.kr/html/sub0301.html?mid=intro05\\_01&journal=2&pageNm=&searchType=&searchValue=&issue=&year=&Page=2](http://www.kaipa21.or.kr/html/sub0301.html?mid=intro05_01&journal=2&pageNm=&searchType=&searchValue=&issue=&year=&Page=2)

류호. (2023.10.9). 어린이집 다니는 이주아동 58%뿐... 보육료 지원 지자체는 27% 불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813470001522>

문무경, 최효미, 이민경. (2016). 다문화유치원 실태 분석을 통한 유형별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박세훈, 김은란, 정윤희, 정소양. (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II):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69-100.

- 박영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과보육교사의 보육경험 실태. 유아교육연구, 30(1), 197-223.
- 박윤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429-453.
- 박은정, 박창현, 조혜주. (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효민, 김석호, 이상림. (2016).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5(2), 105-138.
- 배주현, 김감영. (2019). 지방 중소도시 외국인 밀집주거지 형성 과정: 영천시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111-12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12.). 202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27/591331/artclView.do>
- 법무부. (2022). 법무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실시. (2025.7.25.).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 (2024.12.14. 접속)
- 법무부. (2024).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2024.9.26.).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14/587927/artclView.do>(2024.12.14. 접속)
- 법무부. (2025).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2025.2.20.).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 (2024.12.14. 접속)
- 보건복지부. (2018-2022). 보육통계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202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수정 집계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정책자료.
- 서문희, 양미선, 조혜주, 정은미. (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원정. (2023). 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 및 제언,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2023.9.12.).
- 손승호. (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 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19-30.
- 신윤정, 양미선, 최혜리, 이창원, 최서리, 김철효, ..., 장은숙. (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양계민. (202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지연, 장윤선, 김사강, 김동진, 이택건, 김주영. (2020).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여성가족부 정책자료.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9.3).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22.3). 여성가족부.
- 우영욱.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의 정주의향 결정요인과 사회권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3(0), 1025-1042.
- 유희정. (2008).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 2(1), 1-22.
- 이우영. (2019). 인권보장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의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입법학연구, 16(1), 1-37.
- 이자원, 김혜진. (2017). 수도권 외국인 출신국적에 따른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 국토지리학회지, 51(2), 123-133.
- 이진영, 남진. (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1), 85-100.
- 이창원. (2015).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 이슈브

- 리프, 2015-13.
- 임동진. (2022). 지방소멸, 이민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호주 지방정부의 SSRM 이민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1), 87-118.
- 장주영, 김희주. (2024).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검토: 영유아 보육 및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44(2), 67-84.
- 정기선, 유민이, 조하영, 이정우. (2021). 이민정책 대상에 대한 용어 정의 현황 분석: 법령, 자치법규, 통계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4(1), 1-36.
- 정동재, 윤영근, 염지선. (2022). 데니즌십(Denizenship)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정희옥, 박명아.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1(1), 5-43.
- 조영희, 이혜경, 고상두. (2021).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행정 수직·수평적 협력거버넌스. 이민정책연구원.
- 조원지, 정호중. (2023).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방안.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vol. 279. (2023.9.).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2). 경기북부 이주배경아동 돌봄환경 실태조사.
- 최선영. (2021). 외국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차등적 도구화 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영미. (2021). 경기도 및 시군 외국인주민 조례 현황과 시사점. 이슈분석. 제 240호(2021.11.29.). 경기여성가족재단.
- 최윤경. (2010).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육아정책포럼(2010.9.10.), p.7-17. 육아정책연구소.
- 최혜진, 정홍원, 황안나. (202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성과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18-2022). 인구동향조사 [통계 자료]. 통계청.

- 통계청. (2018-2022). 인구총조사 [통계 자료]. 통계청.
- 통계청. (2018-2022). 인구총조사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024.11.1.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 통계청. (2022).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보도자료] (2022. 7.29.). [https://m.census.go.kr/cds/cdsCensusRslt2021.do?q\\_menu=3&q\\_sub=2](https://m.census.go.kr/cds/cdsCensusRslt2021.do?q_menu=3&q_sub=2)
- 통계청. (2024.4.11.).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100&bid=207&act=view&list\\_no=430383&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100&bid=207&act=view&list_no=430383&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 (2024.12.14. 접속)
- 통계청 행정통계과. (2024.12.10.).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5&act=view&list\\_no=434122](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5&act=view&list_no=434122)
-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거주지분리 정도에 대한 군집분석. 지역연구, 17(1), 61-80.
- 한국고용정보원. (2024. 3. 19.).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7665407&tblKey=GMN>
- 행정안전부. (2018-2022).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18-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인구 현황 [통계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18-2022). 지방재정 365 [통계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18-2022). 한국도시통계 [통계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0.11.1. 기준).
- 행정안전부. (2023a).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시군구별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2025.02.2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

- d=110&tblId=DT\_110025\_A043\_A&conn\_path=I2  
 행정안전부. (2023b).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읍면동별 다문화 가구 현황. (2025.04.0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0&tblId=DT\\_110025\\_A045\\_A&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0&tblId=DT_110025_A045_A&conn_path=I2)
- 행정안전부. (2024a). 이주, 외국인주민, 다문화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행정안전부. (2024b).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bs9UdYP0MQKf1Fj7ud1xvgv.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13261](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bs9UdYP0MQKf1Fj7ud1xvgv.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13261)
- Biedinger, N., Becker, B., & Rohling, I. (2008). Early ethnic educational inequality: The influence of duration of preschool attendance and social composi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2), 243-256.
- Blossfeld, PN, Blossfeld, GJ, & Blossfeld, HP. (2023). Social inequality in educational processes. In *Handbook of Sociology of Education* (pp. 1129-1146).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 Boggess, L. N. & Garcia, N. (2022). Immigrant Families' Access to High-Quality Child Care: Understanding Barriers and Opportunities. *Child & Youth Care Forum*, 51(2), 247-268.
- Burger, K. (2010). How does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ffect cognitive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review of the effects of early interventions for children from different social backgroun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5(2), 140-165.
- Castro, D., Galloway, M., & Yoon, S. (2023). Barriers to Early

- Childhood Education among Hispanic Immigrant Families in the U.S.: Policy Implications and Community-Based Solu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4, 299-310.
- Chung, C., Kim, K., & Piper, N. (2016). Marriage migration in Southeast and East Asia revisited through a migration-development nexus lens. *Critical Asian Studies*, 48(4), 463-472.
- Crosnoe, R. (2007). Early Child Care and the School Readiness of Children from Mexican Immigrant Families 1.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1), 152-181.
- De Moll, F., & Betz, T. (2014). Inequality in pre-school education and care in Germany: an analysis by social class and immigrant status.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24(3), 237-271.
- Eremenko, T., & Unterreiner, A. (2023). Access to formal childcare among families of newly arrived migrants from non-EU countries in France. *Genus*, 79(1), 26.
- Eurydice (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2025).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2025 – Eurydice repor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URL: <https://data.europa.eu/doi/10.2797/66224> (2025.2.24 접속)
- Fram, M. S., & Kim, J. (2008). Race/ethnicity and the start of child care: A multi-level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first child care experienc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4), 575-590.
- Frisken, F., & Wallace, M. (2003). Governing the multicultural city-region.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46(2), 153-177.
- Garrizmann, J. L., Häusermann, S., & Palier, B. (Eds.). (2022). The

- world politics of social investment: Volume I: Welfare states in the knowledge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 Gottfried, M. A., & Kim, H. Y. (2015). Formal versus informal prekindergarten care and school readiness for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A synthesis review. *Educational Research Review*, 16, 85-101.
- Greenberg, J. P. (2011). The impact of maternal education on children's enroll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7), 1049-1057.
- Gulliford, M., Figueroa-Munoz, J., Morgan, M., Hughes, D., Gibson, B., Beech, R., & Hudson, M. (2002). What does 'access to health care' mea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7(3), 186-188. <https://doi.org/10.1258/135581902760082517>
- Ha, Y. & Yeo, S. (2022). Child Care Use,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Outcomes among Immigra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43(3), 458-477.
- Hernandez, D. J., Denton, N. A., & Blanchard, V. L. (2011).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statistical portrait by race-ethnicity, immigrant origins, and languag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33(1), 102-127.
- Johnson, C. M., Rostila, M., Svensson, A. C., & Engström, K. (2017).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explaining mental health inequalities between immigrants and Swedish-born: a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17, 1-15.
- Kahn, J. M., & Greenberg, J. P. (2010). Factors predic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use by immigrant families. *Social*

- Science Research, 39(4), 642-651.
- Klein, O., & Becker, B. (2017). Preschools as language learning environments for children of immigrants. Differential effects by familial language use across different preschool context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8, 20-31.
- Krapf, S. (2014). Who uses public childcare for 2-year-old children? Coherent family policies and usage patterns in Sweden, Finland and Western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3(1), 25-40.
- Kulic, N., Skopek, J., Triventi, M., & Blossfeld, H. P. (2019). Social background and children's cognitive skills: The rol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5(1), 557-579.
- Lesman P. (2009). The Impact of High Quality Education and Care on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EACEA,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ackling Social and Cultural Inequalities*. Burussels.
- Li, W. (2009). *Ethnoburb: The new ethnic community in urban America*.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ieberson, S. (1969). Measuring population divers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6), 850-862.  
<https://www.jstor.org/stable/2095977>
- Logan, J. R., Alba, R. D., & Zhang, W.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99-322.
- Magnuson, K., Lahaie, C., & Waldfogel, J. (2006). Preschool and school readiness of children of immigra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7(5), 1241-1262.

- Pavolini, E., & Van Lancker, W. (2020). The Matthew effect in childcare use: a matter of policies or preferences?. In *The Future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pp. 78-93). Routledge.
- Penchansky, R., & Thomas, J. W. (1981). The concept of access: Definition and relationship to consumer satisfaction. *Medical Care*, 19(2), 127-140. <https://doi.org/10.1097/00005650-198102000-0001>
- Poulsen, M., Johnson, R., & Forrest, J. (2002). Plural cities and ethnic enclaves: introducing a measurement procedure for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6(2), 229-243.
- Rushton, M. (2008). A note on the use and misuse of the racial diversity index. *Policy Studies Journal*, 36(3), 445-459. <https://doi.org/10.1111/j.1541-0072.2008.00281.x>
- Sandoval, G. (2013). Immigrants' journey to the suburbs and xenophobia in the new frontier. *Journal of Urban Affairs*, 35(3), 255-279.
- Schober, P. S., & Spiess, C. K. (2015). Local day care quality and maternal employment: evidence from East and West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3), 712-729.
- Tervola, J. & Nygård, M. (2023). Migrant Families'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 Policy Gaps and Parents' Experiences. *Nordic Journal of Migration Research*, 13(1), 15-29.
- Tervola, J. & Nygård, M. (2023). Migrant Families'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 Policy Gaps and Parents' Experiences. *Nordic Journal of Migration Research*, 13(1), 15-29.

- Van Lancker, W. (2013). Putting the child-centred investment strategy to the test: evidence for the EU27.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15(1), 4-27.
- Van Lancker, W. (2018). Reducing inequality in childcare service use across European countries: What (if any) is the role of social spending?.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2(1), 271-292.
- Van Lancker, W., & Pavolini, E. (2023). Understanding the immigrant-native gap in childcare use: An empirical exploration for 21 European countries. *Acta Sociologica*, 66(1), 74-95.
- Yoshikawa, H., & Kalil, A. (2011). The effects of parental undocumented status on the developmental contexts of young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5(4), 291-297.
- Zhuang, Z. C. (2016). Planning in Ethno-culturally Diverse Cities.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25(2), 43-55.

〈법률〉

- 국적법 제3조, (2008).
-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8937호 (2008).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0380호 (2024).
-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 (1989).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289호 (1963).
-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6015호 (1999).
- 외국인처우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8442호 (2007).
- 외국인고용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6967호 (2003).
- 고려인동포법(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306호 (2010).

〈신문/방송기사〉

KBS. (2024.4.29.). “외국인 없으면 농사 불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L0YGSzVHKC0>

MBC. (2024.1.31.).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짓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BIEdLihidiI>

임송학. (2023.6.2.) “외국인 인재 944명, 지역 주민 새 출발... 지역 경제도 활력”.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02010004>

조수현. (2024.12.10.). 유치원만 외국인 아동에 학비... 어린이집 차별하나.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678845>

채해원. (2024.3.1). 서상열 서울시의원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TBS.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517172&seq\\_800=20509930](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517172&seq_800=20509930)





〈부표 1〉 2018년, 2022년 외국인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2018년			2022년		
	시도	상위 지역 수	비율	시도	상위 지역 수	비율
1	경기도	253	21.7	경기도	250	19.5
2	서울특별시	150	12.9	서울특별시	160	12.5
3	경상남도	132	11.3	경상남도	141	11.0
4	충청남도	114	9.8	충청남도	133	10.4
5	전라남도	104	8.9	전라남도	118	9.2
6	경상북도	94	8.1	경상북도	101	7.9
7	전라북도	65	5.6	전라북도	79	6.2
8	인천광역시	53	4.5	인천광역시	64	5.0
9	충청북도	48	4.1	충청북도	60	4.7
10	부산광역시	36	3.1	강원도	40	3.1
11	강원도	29	2.5	부산광역시	38	3.0
12	제주특별자치도	27	2.3	제주특별자치도	26	2.0
13	광주광역시	16	1.4	대구광역시	20	1.6
14	대구광역시	15	1.3	광주광역시	18	1.4
15	울산광역시	14	1.2	울산광역시	13	1.0
16	세종특별자치시	10	0.9	대전광역시	11	0.9
17	대전광역시	7	0.6	세종특별자치시	9	0.7
	합계	1,167	100.0	합계	1,281	100.0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212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부표 2) 2018년, 2022년 외국인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2018년			2022년		
	시도	평균	개수	시도	평균	개수
1	경기도	0.094	561	충청남도	0.098	208
2	충청남도	0.091	207	경기도	0.092	564
3	제주특별자치도	0.083	43	제주특별자치도	0.084	43
4	서울특별시	0.078	424	서울특별시	0.077	426
5	경상남도	0.073	308	경상남도	0.075	305
6	세종특별자치시	0.070	19	충청북도	0.073	153
7	충청북도	0.067	153	인천광역시	0.066	155
8	인천광역시	0.057	151	전라남도	0.061	297
9	전라남도	0.055	297	세종특별자치시	0.061	22
10	경상북도	0.054	332	경상북도	0.056	330
11	울산광역시	0.053	56	전라북도	0.054	243
12	전라북도	0.048	243	울산광역시	0.051	56
13	광주광역시	0.041	95	광주광역시	0.044	97
14	강원도	0.038	188	강원도	0.043	188
15	부산광역시	0.037	206	부산광역시	0.038	205
16	대구광역시	0.030	139	대전광역시	0.033	82
17	대전광역시	0.029	79	대구광역시	0.032	142
	합계	0.064	3501	합계	0.067	3516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3〉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경기	안산시	원곡동	0.833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0.853
2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93	경기	안산 단원구	선부2동	0.789
3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0.637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734
4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621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0.727
5	경기	안산시	선부2동	0.585	인천	연수구	연수1동	0.720
6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0.579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707
7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541	경기	시흥시	정왕1동	0.690
8	전남	강진군	옴천면	0.525	경북	경주시	성건동	0.689
9	경기	수원시	고등동	0.503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0.671
10	경북	의성군	신평면	0.500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653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4〉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서울	강남구	개포2동	0.007	대구	달서구	유천동	0.000
2	대구	중구	대봉2동	0.007	세종	-	반곡동	0.000
3	경기	화성시	동탄6동	0.008	대전	유성구	상대동	0.001
4	대전	서구	둔산1동	0.008	경북	구미시	산동읍	0.001
5	대구	수성구	고산1동	0.008	서울	강동구	상일2동	0.001
6	서울	송파구	오륜동	0.008	대전	서구	도안동	0.002
7	대구	수성구	황금1동	0.009	경기	용인시	상현3동	0.002
8	경기	안양시	갈산동	0.009	경기	광명시	일직동	0.002
9	전북	전주시	혁신동	0.009	경기	하남시	갑일동	0.003
10	경기	안양시	평안동	0.009	세종	-	소담동	0.004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214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부표 5〉 2018년, 2022년 서울특별시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59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50
2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628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611
3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605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605
4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0.520	서울	구로구	구로4동	0.536
5	서울	구로구	구로4동	0.514	서울	중구	광희동	0.503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6〉 2018년, 2022년 부산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부산	중구	남포동	0.407	부산	중구	남포동	0.477
2	부산	동구	초량1동	0.313	부산	동구	초량1동	0.323
3	부산	강서구	녹산동	0.287	부산	중구	동광동	0.265
4	부산	중구	중앙동	0.234	부산	강서구	녹산동	0.258
5	부산	사상구	삼락동	0.210	부산	사상구	삼락동	0.243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7〉 2018년, 2022년 대구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대구	달성군	논공읍	0.353	대구	달성군	논공읍	0.391
2	대구	달성군	구지면	0.266	대구	달서구	신당동	0.300
3	대구	달서구	신당동	0.238	대구	서구	비산7동	0.279
4	대구	서구	비산7동	0.236	대구	북구	산격3동	0.198
5	대구	북구	산격3동	0.175	대구	달성군	구지면	0.176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8〉 2018년, 2022년 인천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인천	연수구	연수1동	0.410	인천	연수구	연수1동	0.574
2	인천	서구	가좌1동	0.336	인천	부평구	부평5동	0.334
3	인천	중구	북성동	0.325	인천	부평구	부평6동	0.308
4	인천	부평구	부평6동	0.252	인천	서구	가좌1동	0.305
5	인천	부평구	부평5동	0.241	인천	부평구	부평2동	0.290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9〉 2018년, 2022년 광주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광주	광산구	평동	0.511	광주	광산구	월곡2동	0.488
2	광주	광산구	월곡2동	0.418	광주	광산구	평동	0.456
3	광주	광산구	월곡1동	0.278	광주	광산구	월곡1동	0.410
4	광주	광산구	하남동	0.208	광주	광산구	비아동	0.201
5	광주	동구	서남동	0.201	광주	광산구	하남동	0.182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10〉 2018년, 2022년 울산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울산	울주군	온산읍	0.361	울산	울주군	온산읍	0.384
2	울산	울주군	웅촌면	0.274	울산	울주군	웅촌면	0.220
3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0.264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0.204
4	울산	울주군	두서면	0.143	울산	동구	방어동	0.142
5	울산	울주군	상북면	0.143	울산	동구	남쪽3동	0.142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216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부표 11> 2018년, 2022년 대전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대전	동구	자양동	0.314	대전	동구	자양동	0.347
2	대전	대덕구	목상동	0.147	대전	유성구	온천2동	0.174
3	대전	대덕구	대화동	0.142	대전	대덕구	대화동	0.164
4	대전	유성구	온천2동	0.139	대전	대덕구	목상동	0.151
5	대전	대덕구	오정동	0.095	대전	대덕구	오정동	0.137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12> 2018년,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세종	-	소정면	0.258	세종	-	소정면	0.262
2	세종	-	전의면	0.204	세종	-	전의면	0.226
3	세종	-	연동면	0.176	세종	-	전동면	0.162
4	세종	-	장군면	0.166	세종	-	장군면	0.150
5	세종	-	전동면	0.164	세종	-	부강면	0.140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13>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경기	김포시	대곶면	0.707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0.716
2	경기	화성시	양감면	0.688	경기	김포시	대곶면	0.693
3	경기	포천시	가산면	0.666	경기	화성시	양감면	0.658
4	경기	안산시	원곡동	0.664	경기	시흥시	정왕1동	0.657
5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46	경기	안산 단원구	선부2동	0.646
6	경기	화성시	팔탄면	0.646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41
7	경기	시흥시	정왕1동	0.625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0.630
8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0.620	경기	화성시	팔탄면	0.628
9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620	경기	포천시	가산면	0.618
10	경기	안산시	선부2동	0.612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605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14〉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경남	고성군	영현면	0.000	서울	강동구	둔촌1동	0.000
2	부산	금정구	금성동	0.002	경기	광명시	광명1동	0.000
3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0.002	경남	고성군	영현면	0.000
4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0.005	강원	삼척시	노곡면	0.003
5	경북	청도군	운문면	0.005	전남	보성군	웅치면	0.004
6	강원	삼척시	노곡면	0.006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0.004
7	경북	군위군	부계면	0.007	대구	달서구	유천동	0.006
8	전북	김제시	부량면	0.007	강원	춘천시	남면	0.006
9	경기	파주시	군내면	0.008	부산	금정구	금성동	0.007
10	대구	수성구	황금1동	0.008	세종	-	해밀동	0.008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15〉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서울	중구	소공동	0.550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0.583
2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0.563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0.582
3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0.416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603
4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0.425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581
5	서울	용산구	한남동	0.430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04
6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0.590	인천	연수구	연수1동	0.764
7	서울	구로구	구로2동	0.531	광주	광산구	월곡2동	0.626
8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0.447	경기	평택시	신장2동	0.569
9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608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0.555
10	인천	연수구	연수1동	0.475	경기	안산시	이동	0.530

주: 최대값부터 순서대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218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부표 16〉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2018년				2022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수
1	대구	달성군	유가읍	0.0005	경북	구미시	산동읍	0.0005
2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0.0005	대전	서구	도안동	0.0006
3	대전	유성구	노은3동	0.0005	대구	달서구	유천동	0.0006
4	서울	송파구	위례동	0.0006	대구	달성군	유가읍	0.0007
5	대구	달서구	월성1동	0.000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0.0007
6	경남	김해시	장유3동	0.0007	세종	-	다정동	0.0007
7	전북	전주시	평화2동	0.0007	부산	북구	화명1동	0.0009
8	경기	하남시	신장2동	0.0007	경북	구미시	고아읍	0.0009
9	전남	순천시	해룡면	0.0008	경기	하남시	감일동	0.0010
10	경북	구미시	고아읍	0.0008	서울	강동구	강일동	0.0010

주: 값이 0 초과인 경우를 순서대로 제시함.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17〉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증가 지역 목록

	증가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변화율(%)
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3160.1
2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3062.1
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2100.2
4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1592.9
5	경상남도	합안군	칠원읍	1574.7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1449.7
7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1426.3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1378.9
9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4동	1350.4
10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1316.7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부표 18〉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감소 지역 목록

	감소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변화율(%)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2동	-95.3
2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95.03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동	-86.66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6.57
5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84.29
6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80.91
7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80.53
8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80.42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2동	-78.92
10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78.08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8, 2022).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격 접근 서비스(RAS) 분석





## Abstract

# Application of the Population Diversity Index in Measuring Childcare Service Accessibility for Children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South Korea

Project Head: Choi, Hyejin

##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by calculating a Population Diversity Index and to analyze how that index—together with other local factors—affects the childcare-service utilization rate of young children with migrant backgrounds. Specifically, we examine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interventions—such as subsidies for foreign children’s childcare fees, the presence of local multicultural support centers, and the overall accessibility of childcare services—boost service uptake and thereby help migrant families settle stably. Our goal 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tter support those families.

## 2. Research Results

Using nationality data at the eup-myeon-dong (township/neighborhood) level, we traced regional changes in population

---

Co-Researchers: An, Suin · Kim, Juri · Kwak, Yoonkyung · Choi Sunyoung

diversity. Focusing on the infant-toddler cohort, we identified areas where demand for foreign-child childcare services is likely to concentrate.

Although the absolute number of young children is falling due to demographic decline—leading to seemingly improved indicators of childcare supply sufficiency—the gap across regions is widening. Areas with many foreign children often display lower childcare-center coverage or low enrollment rates, pointing to a need for policy adjustments to ensure a stable childcare infrastructure.

Overall, children with migrant backgrounds use childcare services less than native-born children. Childcare-center attendance averages roughly 40 % for foreign children versus 60% for Korean childre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international-marriage) households fall between these two groups—higher than foreign children but still lower than native-born children.

Combining city-/county-level (si-gun-gu) aggregate data with household micro-data, we explored how local context and family characteristics jointly shape service use. Municipal childcare-fee subsidies and the presence of multicultural centers within townships both have a positive impact on childcare uptake among migrant children. In addition, a higher proportion of marriage-migrant households in a locality is associated with greater utilization by migrant-background children.

### 3.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Institutional supports—such as childcare-fee subsidies—do improve access for migrant-background infants and toddlers. Nevertheless,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along with difficulties navigating the system, still create utilization gaps relative to native-born pe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hildcare participation is influenced not only by economic or institutional factors, but also by information access, the presence of cultural intermediaries, and how inclusively programs are designed. Consequently, simply expanding facilities or increasing subsidies cannot fully close the gap; an integrated policy approach that also enhances cultural receptivity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is essential.

Key words: Population diversity, children with immigrant backgrounds, Childcare access, Social integration